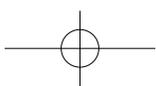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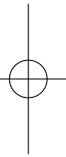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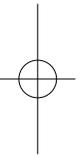


현장지식 좋은 연구를 읽다

2025 현장지식 x 좋은연구 '현장은 어디인가'

# 현장 지식 좋은 연구

사단법인  
신민



---

## 현장을 묻다

- 6 공모전의 취지와 경과
- 8 선정결과
- 10 심사총평

---

## 현장을 읽다 선정작

- 14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의  
인권 현황과 법률지원 실태조사
- 26 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
- 40 법정예선 기후활동가들  
:봉양재판 여정기
- 54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2000-2023)
- 68 시대가 묻고 광장이 답하다  
:청년들이 광장에 나온 이유  
-여의도, 남태령, 광화문, 한강진,  
그 너머의 이야기
- 82 이주농업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모색 방안
- 100 재난 이후를 거닐기: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일상 속 회복 과정을 중심으로
- 110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동료가족지원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 124 퀴어 청소년이 만드는 역동  
:대안학교에서 경험한 억압과  
당사자 실천
- 144 홈리스 활동의 의미에 관한 재구성  
:아랫마을 홈리스 사례를 중심으로

---

## 현장을 잇다 특별상

- 160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166 마을학회 일소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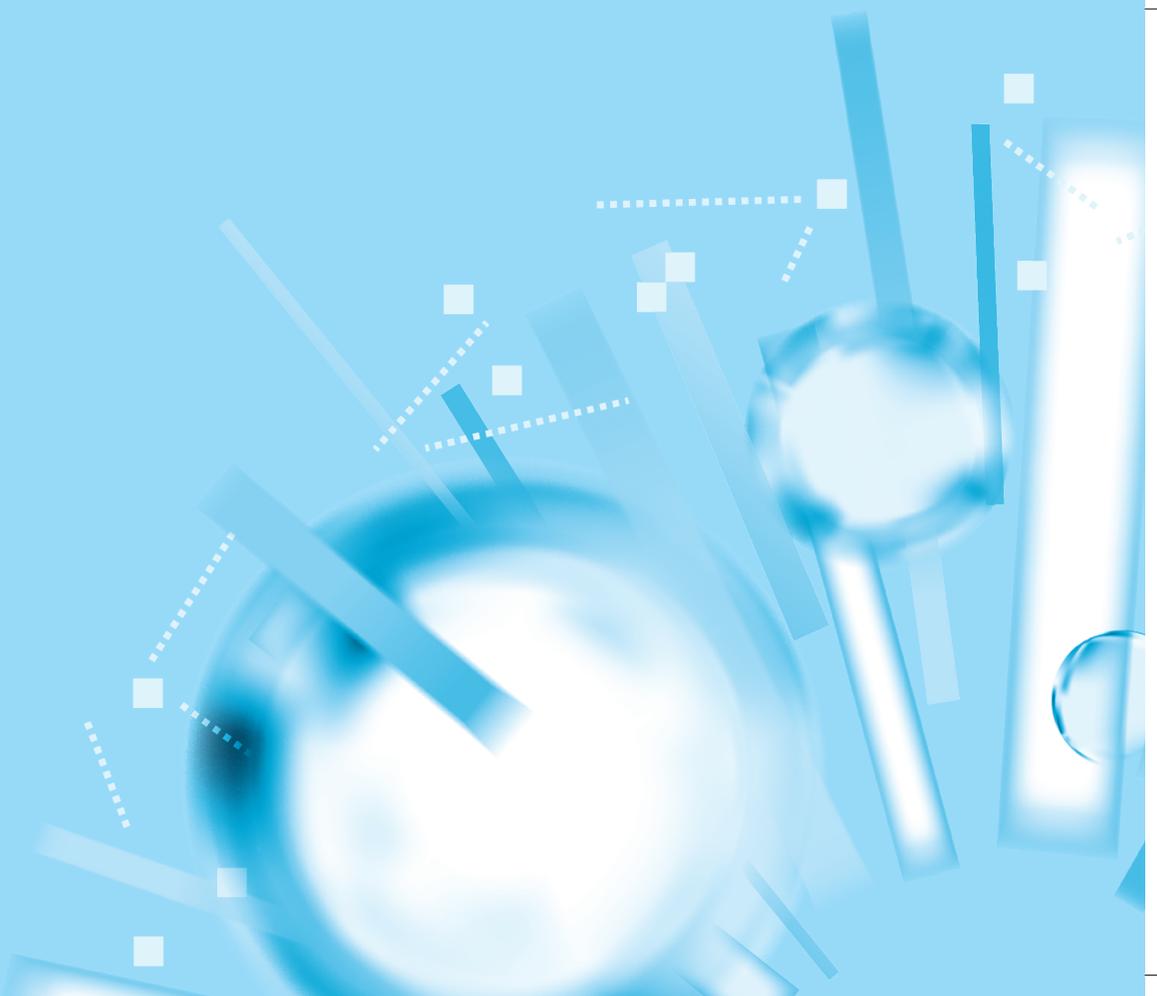
## 공모전의 취지와 경과, 선정결과, 심사총평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2025 현장지식x좋은연구 공모전은

시민사회 속 다양한 문제의식과 실천을 기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 현장을 묻다



# 취지와 경과

<현장지식×좋은연구>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현장연구, 실행연구, 참여연구, 공동연구, 학습과 실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안지식의 생산과 공유를 지향하고, 전환적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실천적 연구 활동과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현장지식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묻고, 실천하고, 다시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지식은 학문과 정책의 경계를 넘어 시민사회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좋은연구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사회의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 연구는 사람과 현장을 잇고, 함께 세상을 배우고 바꾸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기존의 지식 생산 방식을 넘어 현장에서 실천하며 사유하는 현장연구자 및 연구활동가를 발굴하고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실천적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순환시키는 시민사회 지식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활발한 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기반이 됩니다. ‘현장지식×좋은연구’가 그 기반 위에서 사회변화를 만들고, 서로를 이어주는 매개고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는 2022년에 이어 올해 두번 째를 맞아 시민사회 현장의 질문과 실천을 담은 연구물을 대상으로 공개 추천 및 신청, 자체 발굴의 방식을 통해 총 125건의 연구물을 취합하였습니다.

##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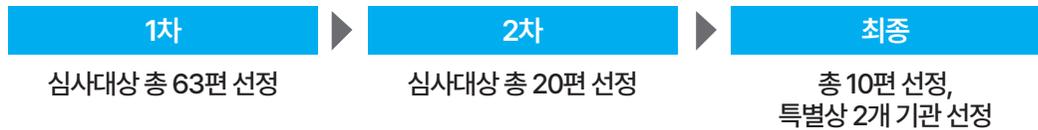
**공모대상** 시민사회 현장의 질문·실천을 담은 연구물(총 10편)  
- 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 텍스트 기반 결과물

**발표출판시기** 2022년 7월 1일~2025년 8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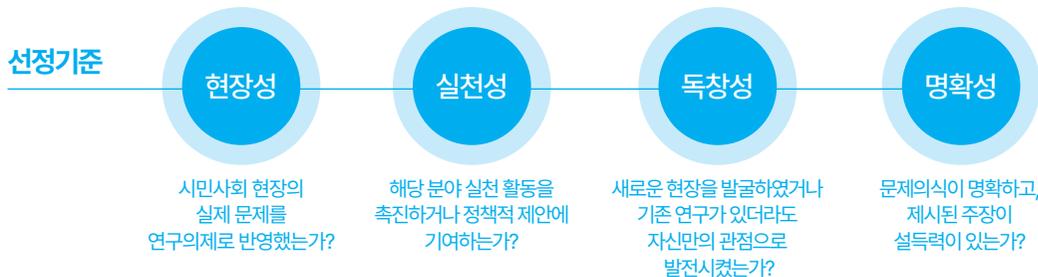
**공모접수** 2025년 7월 17일~2025년 8월 27일



### 선정과정



### 선정기준



# 선정결과

##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상

\*연구명 가나다순 \* 2022년 7월 이후 발표·출판된 연구물 대상으로 공모

연구명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1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의 인권 현황과 법률지원 실태조사	이주연	사단법인 시민	2023
2 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	류지아·김영정·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2022
3 법정에 선 기후활동가들: 봉양재판 여정기	강은빈·박상준·이은호·장윤석·정윤정·정이어린	생명평화아시아, 청년기후긴급행동,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24
4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 (2000-2023)	전주희·정우준	노동건강연대, 4.9통일평화재단	2024
5 시대가 묻고 광장이 답하다: 청년들이 광장에 나온 이유, 여의도, 남태령, 광화문, 한강진 그 너머의 이야기	이재정·김나율·김재상·김철규·김홍민·박지현·윤정민·이준형·윤세정·지은주·권순옥·권승은	광장을 잇는 윤택청, 인권재단사람	2025
6 이주농업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모색방안	우춘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2023
7 재난 이후를 거닐기: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일상 속 회복 과정을 중심으로	김지오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24

연구명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8 정신장애인가족을 위한 동료가족지원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지연·심경순	(사)사회복지정책실천회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2023
9 퀴어 청소년이 만드는 역동: 대안학교에서 경험한 억압과 당사자실천	유아름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10 홈리스 활동의 의미에 관한 재구성: 아랫마을 홈리스 사례를 중심으로	박내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특별상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마을학회 일소공도

# 심사총평

## 선정위원장

### 이영재

더가능연구소 연구실장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

## 선정위원

###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

### 이승원

연구자의집 운영위원장

### 이영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원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2022 현장지식×좋은연구 수상자

### 정보영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 정수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 정진영

소셜임팩트뉴스 대표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공모전>이 2022년에 이어 2회를 맞아 시민 사회 현장의 질문과 실천을 담은 125건의 연구물을 취합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현장성, 실천성, 독창성, 명확성이라는 4가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의 비중을 이원화했는데, 현장성과 실천성 각 30%, 독창성과 명확성을 각 20% 비중으로 하였습니다. 심사해야 할 연구물이 많아 3단계 심사과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현장성’은 시민사회 현장의 실제 문제를 연구의제로 반영했는가, ‘실천성’은 해당 분야 실천 활동을 촉진하거나 정책적 제안에 기여하는가, ‘독창성’은 새로운 현장을 발굴하였거나, 기존 연구가 있더라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발전시켰는가, ‘명확성’은 문제의식이 명확하고, 제시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평가 질문을 기반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물이 많아 최종 10편을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열띤 논의 끝에 선정을 하고 보니 10편의 선정작은 인권, 노동, 사회적 참사, 장애, 빈곤, 소수자, 이주, 기후, 민주주의 등 고른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연구물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특징은 현장 연구자의 세대가 한층 젊어졌으며, 기존 연구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잘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과감하고, 자신 있게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학위논문에서도 과감한 현장 연구들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었고, 개인의 자발적 연구는 물론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은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선정위원들의 평가의견 중 일부를 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성에서는 학교 급식실, 이태원 참사, 계엄-탄핵 광장 등 공론장을 달구었던 사건, 사고 현장에 대한 연구가 두각을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이 (관찰자 관점이 아닌) 참여자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장성뿐만 아니라 실천성에서도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천성은 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 이주농업 여성노동자의 권리 확보, 이태원 참사로부터의 회복, 홈리스 문제, 산재의 사회화 등 각 분야별 현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실천적 성과들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부산의 인권 현황과 법률 지원 실태, 기후활동가들이 피고로 선 법정,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공간, 23년에 걸친 산재 유가족들의 가족운동, 대안학교에서 경험한 성소수자 문제 등이 독창성에서 돋보였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명확성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은 특별상 분야의 도입입니다. 여러 연구물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노력을 통해 현장 연구의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 기반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조명하는 것 또한 이 공모전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선정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특별상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 의식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학회지 <마을>을 발행하고 있는 ‘마을학회 일소공동’, 해외투자 한국기업이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하고 있는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 연대체인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의 활동에 주목하고, 별도 트랙으로 감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많은 현장 연구물들을 접하면서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의 화두인 “현장은 어디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들여 연구한 연구성과들을 신청해 주시고, 발굴해 주셨으나 선정되지 못한 연구자분들께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큼니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공모전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구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선정위원장 이영재

## 선정작의 선정이유와 주요내용

선정작의 선정이유와 선정된 연구가 보여주는  
현장의 시선과 문제의식, 현장지식이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 현장을 읽다



#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의 인권 현황과 법률지원 실태조사

이주언(2023)

원문 읽기



---

이 연구는 부산 지역의 인권현황을 현장 중심으로 탐색하고, 인권단체와 공익변호사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모색한 실천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부산 지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권단체, 활동가, 당사자들을 만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와 법률지원의 공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이주민, 빈곤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다양한 집단의 삶 속에서 법률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살펴봄, 공익변호사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선정위원회는 이 연구가 현장성과 실천성을 모두 갖춘 연구라고 평가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인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을 탐구한 점, 둘째, 지역 기반의 공익변호사 활동을 제도 개선과 연결지은 점, 셋째, 연구과정 전반을 통해 공익법 활동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점을 눈여겨보았다. 또한 연구자는 단체, 당사자, 변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그 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인권운동과 법조계의 접점을 실질적으로 확장하였다.

이 연구는 부산 지역의 인권 현장에 뿌리를 둔 연구로서 공익법 활동의 현장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현장의 경험을 기록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 이 연구가 공익법 생태계에 변화의 씨앗을 심어 성장과 확산의 가능성을 연 것과 더불어 공익법 분야에서 현장과 제도를 매개할 연구자의 활동을 기대한다.

# 1

## 들어가며

### : 지역에 뿌리내린 공익변호사를 꿈꾸며

서울과 수도권에 공익변호사와 법률지원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실은 제가 부산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지역에는 이미 현신적으로 뛰는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체계가 없다 보니 소진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부산에서도 사실상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도맡다시피 한 공익변호사가 있었지만, 저 역시 같은 방식을 답습하기보다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연구의 목표도 그래서 분명했습니다. 부산 인권단체들과 연결되고, 함께 배우며, 법률지원이 절실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부산에 와서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매개로 인권단체의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접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연구는 결과물이기도 했지만, 제게는 부산에서의 '첫 연결'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 내밀어 준 활동가들과 단체들, 그리고 저의 부산행을 응원해 준 '두루' 동료들께 이 글을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 2

## 연구를 통해 맺은 인연과 배움

제가 연구를 계기로 현장에서 맞닥뜨린 부산의 인권 의제는 크게 이주외국인, 빈민(공영장래 포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 문제였습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만난 분들과 단체는 제게 배우는 선생님이었고, 사건 하나하나가 제도 개선 과제를 떠올리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 1) 이주외국인 : 혼자서, 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첫 연결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였습니다. 센터는 조례 근거로 설치되어 상담·교육·문화·도서관까지 포괄하는 종합지원의 허브입니다. 상담만 놓고 봐도 노무(임금·산재), 체류(연장·변경), 가족(가정폭력·이혼), 의료 연계가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귀화·체류 등 절차의 장벽과 맞닥뜨렸습니다. 한 분은 오래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경제적 조건과 해외 서류 발급의 위험(원본 여권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강제퇴거와 장기 입국금지의 위기에 내몰려 자해 충동까지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법률지원은 법률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 당사자의 건강·언어·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지원'입니다. 둘째, 다학제 공조가 필수라는 것 — 이주인권활동가·통역사·경험 많은 변호사의 팀플레이 없이는 긴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모습

싸움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연결의 첫 단추를 센터가 꿰어주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오라”는 태도, 그 환대가 저를 현장 속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찾는 외국인주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지만, 법률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때그때 지원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이혼 소송을 지원해야 할 때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이주인권소위원회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협업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2) **빈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고 떠날 수 있도록** —공영장례

부산반빈곤센터와의 인연은 저를 공영장례라는 주제로 이끌었습니다. 공영장례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장례가 어려운 분들의 마지막 길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도이며, ‘고인의 존엄’과 ‘시민의 애도할 권리’를 사회가 함께 실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2년 7월 첫 공영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다만



공영장례 조문단원들을 대상으로 유언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하는 모습(출처: 부산반빈곤센터)

형식화·수익사업화의 위험을 경계해야 했고, 저는 서울의 선도 사례(나눔과나눔)를 참고하며 부산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반빈곤센터는 공영장례 조문단을 양성하고 꾸려서 공영장례 부고가 게시되면 조문과 함께 공영장례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문단의



출처: 부산반빈곤센터

일원이기도 하면서 매년 열리는 조문단 양성과정에서 유언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매해 공영장례를 주제로 한 세미나·토론회를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러한 자리를 통해 조례 보완·매뉴얼 제작·시민조문단 운영·예산 집행 기준 등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부산반빈곤센터에서 올해는 공영장례를 주제로 단편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저도 단역으로 출연하였고, 봄·가을소풍을 함께 가기도 하였으며, 파울루 프레이리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서로배움 실천팀> 세미나를 하는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인연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3)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약자를 위한 시설,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건강사회복지연대<sup>①</sup>와 함께하면서 저는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대응하였더라 다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건강사회복지연대 활동가님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과거 형제복지원의 진상규명부터 시작해, 오늘의 시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노숙인 강제입원·수익 구조를 고발해 온 단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사라졌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변종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활동가님의 말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요양병원 착취’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한 달 반 동안 침대에 묶였고,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 인권침해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검토하였고, 고소장까지 작성하였는데, 그 피해자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법적 절차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① ‘사회복지연대’는 2025년 3월 단체명을 ‘건강사회복지연대’로 변경하였습니다.

## 4) 마중, 파랑과도 계속 만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노동해방 마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과 인연을 맺었는데, 아수나로는 안타깝게도 부산의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해방 마중은 운영위원으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은 감사로 활동하면서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정착의 초입에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을 만난 일은 행운이었습니다. 연구대상을 어떻게 찾을지 막막해하던 제게 많은 분들이 정귀순 대표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고, 대표님은 곧바로 여러 단체와 사람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파랑의 사무국에서 사무실 한 칸 책상과 컴퓨터를 선뜻 내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파랑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귀순 대표님과 활동가님들로부터 부산 활동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또 다정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파랑은 부산 인권운동의 허브로, 친분에 기대어 '알음알음 변호사'를 찾는 현실적 어려움을 줄이고 다양한 인권단체들과 공익법 활동의 협업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동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중의 활동은 서울에서 노동인권 관련 활동을 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다양한 노동인권 의제들을 배우고 고민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 3

## 학문적·사회적 반응과 활용 : 확산되는 부산의 경험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두 번의 후속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공익법 생태계의 필요성을 알리는 취지로 공익법단체 두루·부산지방변호사회·민변 부산지부가 함께 연 <부산 공익법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였습니다. 광주와 부산에서 먼저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소아, 이현우 변호사님께 발제를 요청드렸고 두 분의 헌신적인 활동을 듣고, 저는 토론자로 지속가능한 공익법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가들과 함께 공익법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출처: 공익법단체 두루 홈페이지



출처: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홈페이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과 법률지원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sup>②</sup>

그리고 연구를 통해 부산의 인권 의제들을 만나고, 뜨겁게 활동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연을 맺은 덕분에 예비법률가(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공익인권활동을 주제로 한 실무수습과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다양한 인권 사례를 소개하였고, 인권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활동가들과 간담회,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할 꿈을 꾸는 미래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만남은 학생들에게도 저에게도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sup>③</sup>

현장과 언론도 호응했습니다. 공영장례는 토론회와 기사칼럼을 통해 조문단·매뉴얼·예산 집행 기준 같은 구체적 의제가 공론화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와 자문에 응하며, 부산의 실험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토대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부산반빈곤센터를 통해 인연을 맺은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활동가, 교수, 변호사들과 함께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 지원단>을 꾸리고, 또 부산민변과 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들을 연결하여 국가배상소송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활동할 때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장애인권팀 활동에 주력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부산에 와서 형제복지원의 전신이라고 하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들을 직접 만나니 지역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 간사를 맡아 피해생존자들의 진술을 경청하고 기록하며, 소송은 물론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건 하나를 넘어서, 사회운동-법률가-정책을 잇는 부산 공익법의 순환 고리를 단단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② 라운드테이블 현장의 자세한 이야기는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arang.or.kr/%ea%b3%b5%ec%9d%b5%eb%b2%95-%ec%83%9d%ed%83%9c%ea%b3%84-%ed%99%9c%ec%84%b1%ed%99%94%eb%a5%bc-%ec%9c%84%ed%95%9c-%eb%9d%bc%ec%9a%b4%eb%93%9c-%ed%85%8c%ec%9d%b4%eb%b8%94%ec%9d%98-%ed%98%84%ec%9e%a5/>

③ 연합뉴스 인터뷰, <https://www.mk.co.kr/news/economy/11308849>  
매일경제 인터뷰, <https://www.mk.co.kr/news/economy/11308849>

# 4

## 제도와 현장을 잇는 활동들

현장의 경험을 제도로 환류시키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2023년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확산을 위해 세미나·간담회·내부 교육을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기념사진

또한 2023년부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책소위원장을 맡아 인권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올해는 부위원장으로서 제3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가 추구하던 '현장→정책→현장'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산의 인권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연결을 촘촘히 잇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5

## 성찰과 후기

**:함께 걸음의 힘을 믿는 공익법활동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산에서의 시간은 배움과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막막하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신뢰하는 동지로서 사건을 함께 꾸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도와 현장, 법률가와 활동가가 따로 서지 않고 서로 닦아야 한다는 믿음이 제 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곧 구조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부산에는 이미 단단한 활동가들이 있고, 이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잘 이어진다면 활동의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제 연구는 그래서 '논문'이 아니라 '첫 연결'의 기록입니다. 이 연결을 바탕으로 저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프로보노 확산을,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점검을, 부산반빈곤센터·부산인권플랫폼 파랑·노동해방 마중 등과 현장과의 연대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는 회복을 향한 동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처음 왔을 때의 막막함은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앞으로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밥하는 아줌마의 (급식조리사)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

류지아·김영정·정진주(2022)

원문 읽기



---

사회 운동의 본령 중 하나가 인권이 침해되는 사회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 사건을 다룬 이 연구는 그 본령에 충실한 소중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년 여성이 주를 이루는 학교 급식 조리 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과 사고성 재해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발암물질인 조리흡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급식 조리 노동자가 폐암에 걸릴 경우, 2021년 2월 이전까지는 산재로 인정되지 못했다. 폐암은 암종별 사망률 1위이자 완치가 어려워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다. 따라서, 조리흡과 폐암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응할 급식 조리 노동자의 작업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급식 조리=중장년 여성의 업무=밥짓는 가정주부의 일과 같은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오랫동안 폐암이 작업현장에서 급식조리 노동자를 위협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급식조리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최초의 사건을 다루면서, ‘급식 조리’ 노동과 ‘중장년 여성 조리사’에 얽혀진 상투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그 의미를 재구성 하면서, 급식조리 노동 환경과 질병 예방 방안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나아가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선정위원회’는 이 연구가 단지 급식 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와 노동환경을 왜 끊임없이 발굴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연구를 사건 발생 직후부터 빠르고 성실하게 진행해 온 사회 건강연구소에 경의를 표한다.

# 1

## 문제 의식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에서 약 12년 가량 조리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의하면 급식조리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급식조리사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흡 등의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 쉬우나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급식조리사에서 발생한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에 따라 폐암은 급식조리사의 새롭고도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었다. 암은 여전히 국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이 중에서도 폐암은 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암종별 사망률 또한 1위인 질환이다. 폐암은 여전히 완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암 질환의 대부분이 그렇듯 원인이나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노출 가능한 유해 요인을 관리함으로써 질환 발생의 일정 부분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롭게 확인된 급식조리 종사자의 폐암이라는 질병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기까지의 과정과 급식조리사의 폐암이라는 건강 문제의 크기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급식조리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2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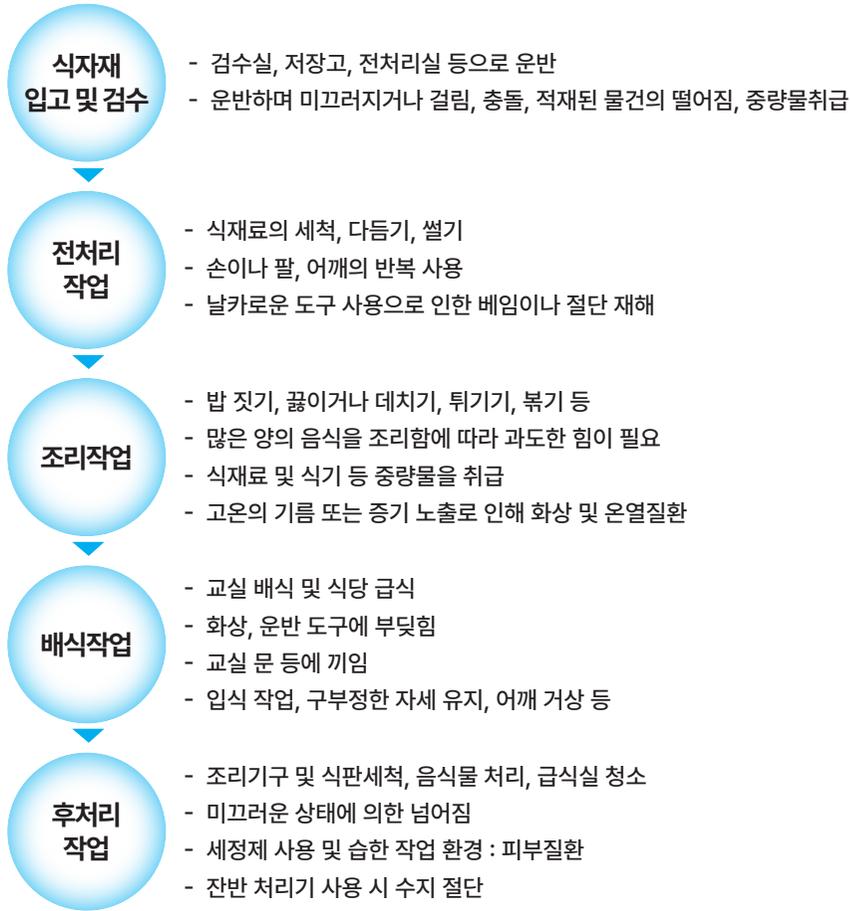
### 1) 학교 급식조리사의 노동 및 건강 문제

#### 가. 급식조리사 현황

급식은 학교·직장·병원 등 가정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로 대개 다양한 시설에서 이뤄지는 '단체급식'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학교 급식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00% 실시되고 있다. 학교 급식 관련 직종은 크게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무원 내에는 영양교사 및 일반직 조리사(조리서기보, 9급)가 있으며 공무직원으로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속해 있다. 공무원 조리사의 경우는 공무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 신분으로 이들은 일반 지방직 공무원의 처우와 동일하다. 공무직 내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는 교육청을 통해 채용되며 조리사의 경우에는 지역 내 공립학교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며 조리실무사는 흔히 조리원이라 불리는 인력으로 각 지역 학교로 발령되고 대개 무기계약직 형태이다. 2021년 학교 급식 실시현황 자료중 공무원 등의 정규직은 11%이며, 공무직 및 기타로 분류되는 인원이 89%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리사로 분류되는 이들은 약 만 명 정도, 조리원의 경우는 약 5만명 가량으로 이들 중 정규직은 0.3%(173명)에 불과하다.

학교급식종사자는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 2001년부터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점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을 통해 조직된 형태로 급식조리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에 관해 논의 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중장년층의 여성으로 구성된 이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의 최하층에 존재한다.

## 나.급식조리사의 업무 내용 및 위험 요인



## 다.급식조리사의 건강 문제

### ▶ 사고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넘어짐'이 가장 많으며 그 외 떨어짐, 부딪힘, 절단·베임·찔림, 이상온도 물체접촉 순서이다. 사고에서 이어지는 사망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 ▶ 근골격계 질환

급식조리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어깨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척추 질환 등은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 ▶ 폐 질환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흡에 노출됨으로써 폐기능이 저하되거나 폐암을 포함한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인덕션과 같은 전기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농도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물질들은 조리 종사자들의 폐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수의 논문에서 조리흡에의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폐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 그외

최근 연구에서는 조리흡에 노출됨에 따라 신장 기능의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조리흡에 노출되는 경우는 소변 내 PAH 대사산물이 비노출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PAHs 노출은 염증 등의 기전을 통해 미세단백뇨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조리 업무 시 지속적인 열원에의 노출로 인해 신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외의 건강 문제들로는 온열 질환의 발생, 직업성 피부염의 발생 위험 증가 등이 있다.

## 2) 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판정과 인정

### 가. 급식조리사 폐암의 산재 판정 및 인정 현황

#### ▶ 업무상 질병의 조사와 판정

급식조리사 직업성 암 사건이 신청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몇 건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는 2021년부터였다. 처음 몇 사건은 통상적인 직업성 암 절차처럼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후에는 조리실 환경이 비슷하여 역학조사는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사의 조사항목을 마련(‘급식실 조리종사자 조리흡 등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질병 산재신청관련 자료수집 목록 및 재해조사 항목’)하여 지사에서 조사하여 판정위로 조사결과를 보내도록 조치하였다. 조사항목은 크게 근로관계, 작업내용, 상병상태, 조리인원 구성내용, 식수인원, 세부 조리방법, 환기장치 등으로 재해자와 사업장 측에 의견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 ▶ 급식조리사의 직업성 암 판정 현황

조리 업무로 인해 직업성 암이 발생했다고 신청하여 판정된 사건은 2021년 1월~2022년 10월까지 총 79건(2024년 말, 승인 169건)이었다. 이 중 25건은 병원, 사회복지관, 일반 사업장의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의 사건으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면 학교급식조리사 사건은 총 54건이다. 본 연구에서 학교 급식조리사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학교급식조리사 54건 중 45건이 인정되었고, 1건이 일부 인정(폐암 인정, 유방암 불인정), 8건이 불인정되어 인정율은 85.2%이다. 불인정된 사건은 조리사로서 근무 기간이 2년에서 8년 5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았고 조리사로서의 근무 기간이 대개 9~10년 이상으로 확인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상병은 폐암으로 조리함에 노출된 것이 주요했고, 대체로 학교 메뉴가 볶음, 튀김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었다. 폐암 외에 인정된 상병으로는 방광암(여성, 59세)이 1건 있었다. 16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조리사로 역학조사에서는 업무와 방광암과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반면 판정위에서는 입자상 물질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방광암 발병율이 낮으며 방광암의 평균적인 발병 연령보다 젊은 나이에 질병에 진단된 상태로 근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었다. 입자상 물질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과 방광암의 상관관계가 아직은 부족할 수 있으나 해당 유해 물질에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였다. 식수 인원은 대체로 10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았고, 조리실의 위치도 중요했는데 지하에 있는 경우와 지상에 있는 경우가 혼재해 있었고, 최근에 조리실을 개조한 곳이 지상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리실 환기가 중요한데 후드 장치가 없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창문을 열고 선풍기로 환기를 시키거나 후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의 급식조리사에 대한 판정은 대체로 10년 이상 근무 기간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정위의 위원 간 이견이 존재했다. 왜냐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노출 기간(근무기간)은 식수 인원, 환기를 포함한 작업환경, 튀김 등의 메뉴, 조리실 위치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노출 기간만으로는 이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식수 인원이 적고, 튀김 등의 메뉴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며 조리실이 지상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일반 학교와의 노출 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 역학조사를 다시 보내기도 하였다.

## ▶ 역학조사 결과

역학조사보고서에서는 첫째, 급식조리실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조리함에의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고, 조리 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의 분포 중 상당수가 초미세입자상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조리함에의 실제적인 노출 수준이 낮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관련

문헌 고찰 결과에서 조리함에 의한 폐암의 위험 증가 및 용량-반응 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 보이는 식습관의 유사성 및 급식 식단 내 볶음 및 튀김 요리의 높은 비율로 볼 때 기존의 역학 연구 결과를 국내 급식조리사의 폐암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고온으로 기름을 가열하며 발생하는 흠에 의한 실험에서 세포의 유전적 변이 및 돌연변이 유발성이 확인됨을 추가적인 근거로 하여 이들 급식조리사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 3) 급식조리사 폐암 산재 인정과 조직화와 의미

#### 가. 직업성 질병 인식과 산재 신청 조직화

##### ▶ 노동조합의 산재 인식과 조직적 문제 제기

산재 인정을 위한 신청 자체는 급식조리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하였으나 이는 사실 노동조합에서 폐암을 산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조직화하면서 집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산재 신청 조직화 계기를 살펴보면, 개별적 폐암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급식조리실 환경에 주목하게 된 것이 시작이다. 개인의 위험 인식과 질병 경험이 집단적 위험 인식과 질병 경험으로 이어지면서 조직적인 운동의 성격을 띠고 진화하게 된 경우가 볼 수 있다. 급식조리 노동자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이들 노조 조합원 중에 폐암 환자 사례들이 여럿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고 산재 가능성을 주목하게 된 것이 운동의 시작이다. 특히, 급식조리사들이 다른 직업 경력이나 흡연 등 폐암에 노출될 만한 유해 요인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적은 노동자들이라는 점은 이들의 직업과 폐암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학교 급식조리실의 실태와 폐암을 알아보기 위해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산재 신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차원으로 전개한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한다는 것은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동료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했고, 개인의 신청

결심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다. 노동조합이 산재 신청을 조직하면서, 개인 조합원들도 운동의 차원으로 산재에 접근하게 되어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산재 신청에 동참하고 관련 활동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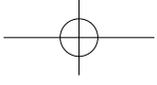
### ▶ 직업성암 찾기 운동

과거 개인의 질병이라 여겨지고 말 뻔했던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질병이 집단적, 정치적 질병으로 밝혀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대한전문가집단, 시민·노동단체, 비판적 언론이 함께 했던 것처럼, 급식조리사 폐암 산재를 드러내고 운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노동 현장과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었다. 노동조합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에 주목하고 운동을 조직하게 되었을 때, '직업성 암 찾기' 운동과 결합하게 된다. 암 발생과 직업의 관계에 주목하여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산재로서의 암을 발굴하던 운동에 급식조리실 폐암이 주요 사례가 된 것이다. 직업성 암 찾기 운동은 산재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접근방식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물질을 가까이 하는가'를 물음으로써 발암물질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즉, 직업을 물음으로써 일과 암 발생의 연관성을 밝혀 직업성 암 환자를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첫째, 현장과 지역에서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환경성 암 실태를 알리고, 둘째, 직업성·환경성 암 환자에 대한 보상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와 암환자 보상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근래 직업성 암으로 밝혀져 조명받은 것들은 제철소 폐암과 급식실 폐암이며, 이후 3D프린터 작업의 육종암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 ▶ 운동 전개와 공론화

앞서 폐암 산재 통계에서 밝혀졌듯, 지금까지 학교 급식조리실 산재 신청자 대부분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폐암의 산재 인정 사례가 생기면서 노조들은 더 적극적인 운동의 행보를 이어갔다. 2021년 8월에는 급식조리실 폐암이 역학조사 없이 최초로 80일 만에 산재 인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더 빠른 시간에 산재 승인이 줄이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짧은 기간 다수의 산재 승인이 가능했던 것은 첫 번째 산재 인정과 곧이어 추정의 원칙에 따른 산재 인정의 탄력을 받아 더 많은 사례의 신청과 승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운동의 본격화는 한 축으로는 산재 신청 조직, 또 한 축으로는 급식조리실 재해를 이슈로 만드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급식조리실 환경 실태를 알리는 작업을 진행했고,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공론화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언론보도는 대중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효과 외에도, 폐암 당사자들의 산재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족의 경우, 조리과 폐암의 관계를, 산재 당사자의 경우 급식조리실 실태를 미리 접하고 자신들의 질병을 산재로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급식조리사 폐암과 조리실의 환경이



조명되면서 공분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례 자체가 지닌 특성, 즉 다수의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 조리실이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경은 이것이 특정 학교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며,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대중적 공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슈를 만드는 과정에서 2021년도 하반기 국정감사 대응을 준비하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급식조리실 폐암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에서의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었다. 조직적 국회 대응 결과로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교육청과 노동부에서 환기시설 가이드라인 제작과 조리노동자 폐 CT 검사 계획이 마련되었다.

# 3

## 학문적·사회적 반응과 활용

보고서 발간을 통해 작게는 소속된 사회건강연구소 회원 및 관심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포럼 형식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그 외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건강정책포럼, 안전보건강조주간세미나, 국회토론회 등 다양한 곳에서 급식조리사의 건강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다. 그 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이처럼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을 통해 연구자들만의 연구를 넘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었기에 연구 결과물 역시 확장성을 지닐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덧붙여 사단법인 시민에서 개최한 2025년 공모전에서 선발된 결과 역시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 4

## 성찰과 후기

학교 급식조리 노동자 폐암 산재 확인을 위한 활동이 노동안전보건운동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여성 노동자 산재를 가시화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대체로 판매 및 서비스직 등 여성집중산업 현장은 덜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임신한 여성이나 모성보호 위주로 정책이 만들어져왔으며 이는 결국 여성 다수 사업장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과 정보 부족, 나아가 안전규정이나 산재보상 정책의 미비로 이어져 왔다. 이번 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서 재해 실태와 안전 상황을 드러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젠더 관점의 충분한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여성의 일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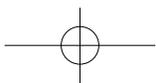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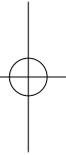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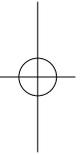
또 학교라는 현장에서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노동에 대해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급식조리 노동자 폐암을 둘러싼 운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학교의 노동안전에 주목한다는 것은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동안 아픈 사람들이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이 노동의 가치 절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폐암 외에도 그동안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의 사고 등 학교급식 조리실에서 산재는 많았다. 인터뷰한 활동가에 따르면 급식실에서 건강하게 일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노동자들 스스로 “몸을 갈아 넣어서 하는 급식”이라고 할 만큼 노동강도가 높음에도 그에 맞는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식조리사 산재를 통해 학교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간 보이지 않았던 종류의 노동이 드러났다. 학교라는 현장을 교실과 교무실로만 한정되어 사고하는 경향, 학교에서의 교육을 학과 수업으로만 협소하게 인식하는 경향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학교 외 사업장과 폐암 외 질병으로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 학교 이외에도 폐암 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조리 사업장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구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튀김과 볶음 위주의 조리를 하는 중국음식점, 단체급식을 제공하지만 위탁과 용역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기업체 식당의 노동자 등 조리함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곳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정책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가 시작은 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관해서까지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인'과 '기피'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실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급식실이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환경으로 묘사된 것은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분명한 노동환경 개선 없이 실태를 드러내는 데서만 그친다면, 그저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되어 일종의 낙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위험한 사업장으로만 남을 것인가, 누구나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실질적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숨겨진 노동과 가려진 작업장을 계속해서 드러내어 개선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급식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폐암은 과거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폐암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질병 경험을 동료 근로자들 또는 주변인들과 공유하면서 혹시 이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이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직업성 암 찾기 운동과 결합됨에 따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급식조리 종사자의 폐암 중 다수가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되고 승인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또한 집단적 산재 신청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지사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조사 내용을 제공하여 급식조리사의 신속한 승인에 기여하였다. 비록 최초의 질병 인식과 산재 신청은 개별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노동계의 활동으로 조직화되고 가속화되었고 근로복지공단도 이에 발맞추어 빠르게 조사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상 질병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개선이 더딘 편이긴 하나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의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함 노출 감소를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열악한 환기 시설의 개선, 조리함을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식단으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 학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그간 방치되었던 학교 급식실을 관리의 영역으로 편입시켜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겠다.



# 법정에 선 기후활동가들 : 불안재판 여정기

강은빈·박상준·이은호·장윤석  
정운정·정이어린(2024)

원문 읽기



---

수많은 사회운동은 때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멈추지 않고 가야 하기도 한다.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끝을 찾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이 스스로 기록한 ‘봉양재판 여정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갈 때, 어떤 중요한 실마리와 지표를 찾을 수 있다는 울림을 주는 연구이다. 스스로의 운동을 기록한 이들의 태동 자체가 한국전력의 해외석탄 발전소 베트남 봉양 2호기 수출승인에 맞서, 이 사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들이 떠난 길은 처음부터 그 끝이 보이지 않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어쩌면 끝에 다다를 수도 있을 새로운 운동의 길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들은 기업의 그린 워싱과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자 화력발전 건설 회사를 향해 비폭력 직접행동을 실천했고, 이로 인한 재물손괴와 집시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접 행동의 장과 법정이라는 두 투쟁 현장에서 자신들의 운동과 투쟁의 필요성을 기성 사법 논리를 벗어나 포괄적인 지구적·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법부의 판단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있다.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선정위원회’는 이 힘든 여정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운동이 기성 사법 담론에 의해 녹아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기록하고, 그 기록물 위에서 흔들리지 않은 청년기후긴급행동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1

## 들어가며

<2025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를 앞두고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의 「법정에 선 기후활동가: 봉양재판 여정기」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 네 명의 저자가 모였다. 삼척 석탄발전소 반대 투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빈,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 다녀온 청연, 졸업 논문을 쓰고 있는 어린, 활동을 은퇴(?)한 후 기후연극에 대한 평론을 쓰고 있는 윤석. 그들은 어느 야심찬 밤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어린** 안녕하세요. 급한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다들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은빈**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삼척에서 30분 거리에 도계라는 곳이 있어요. 올해 그곳에 있는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았는데, 폐광 광부들 구술 기록 전시가 열려서 다녀왔어요. 기록의 힘을 느꼈어요. 다녀온 후에는 근처에 발전소 노동자 아내 분이 운영하는 곳에서 피자를 먹었어요. 그런데 가게에 저희가 927 기후정의행진 때 나눠드린 삼척 맹방 해변의 조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귀엽고... 반가웠어요.

**청연** 녹색당 일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반대 피케팅을 하고, 뒤늦게 전력망 관련해 전남과 충남 등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연 기자회견에도 늦게 참여했어요. 그 옆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께서 피케팅 하셔서 인사 나누고 이야기 듣고... 하루 종일 연대를 한 날이었네요.

**윤석** 저는 텅굴의 기후연극 <꿈의 방주: Demo>에 대한 평론 글을 하나 써야 해서 뭘 쓰지 하며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요즘 문득 스스로가 은퇴한 활동가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의 기후우울이 기후위기의 장대함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7년 전

말했던 골든타임이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싶은 마음이에요. 처음 긴급행동과 함께 생태학살을 마주하며 활동을 했던 때를 돌아해보면 지금은 낯설게, 조금은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무언가 많은 걸 놓쳤다고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지구 온도가 1.5도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다 끝나버린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 구조로...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제가 이번에 본 기후 연극도 그런 점을 시사했었고요.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그걸 살아내고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어린 저는 요즘 학교 졸업 논문을 쓰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제 논문 작업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임금노동 체계 바깥의 삶을 모색하며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으려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친구가 예전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 갔다가 행진이 끝난 후 일상이 공허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가 그 일상의 공허함을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고 채워 가려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잘 풀어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요.

# 2

## 기후활동가는 왜 법정에 섰을까?

어린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연구 제목이 「법정에 선 기후활동가들: 봉양재판 이야기」(이하 보고서)이죠. 이 보고서에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긴급행동의 수년에 걸친 여정이 담겨있어요. 간단하게 짚어보면, 2020년 정부와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마지막 석탄발전소 수출을 진행하기로 결의해서 이에 반대하기로 한 것이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긴급행동은 석탄발전소를 짓는 주체를 탄소오적(한국전력, 수출입은행,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하나은행)이라 부르며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왔고, 2021년 2월 두산 사옥 앞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는 직접행동을 수행해 여정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 뒤에 법원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약 4년에 걸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치르게 되었고요. 법정에서는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시위 행위의 형법적·민법적 책임을 물었지만 막상 석탄발전소를 수출한 기업 정부의 책임은 어느 쪽으로도 묻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급행동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다른 법질서를 찾아온 이야기를 보고서의 마지막에 담고 있지요. 저희는 2022년 민사재판 승소, 2024년 대법원 재물손괴죄 파기환송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았고,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지만 2025년 파기환송심에서도 기쁜 소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는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니 다시 봐도 숨 가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웃음). 여러분들은 이 경험과 보고서를 통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요?

윤석 당시에는 세상의 아이러니와 모순을 바라보며 하루에도 여러 번 우울과 무기력, 분노 사이를 오갔던 것 같아요. 직접행동을 하고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는 또 심란했죠. 1심 재판에서 저서 눈 오는 법원 앞에서 쓸쓸하게 돌아갔던 날, 지하철역 앞에서 서로를 다독였던 순간, 대법원에서 설마 설마 하다가 이겨서 웃으며 눈물을 흘렸던 날 등 재판을 치르면서 많은 순간들과 감정들을 우리가 함께 지나쳐왔어요. 저는 그걸 이 연구 보고서에서 외부자의 시선보다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로 정리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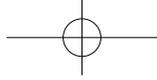
청연 사실 우리 다들 재판과 별개로 줄곧 세상과 불화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의 역사적 불의에 대한 관심이든, 기업과 자본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든, 아픈 몸으로서 비장애중심주의와 부대끼든, 모두 각자의 맥락에서 저항을 모색하던 사람들이 기후위기라는 계기로 모이고 함께 행동하게 된 여정이었어요. 그러다 재판이 시작되고서는 법정이 '주전장'이 된 거죠. 법질서가 이 불합리에 가담하고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재판에서 졌을 때도 오히려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재판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법질서, 이 체제와 싸우고 싶었으니까요.

은빈 맞아요. 거기에 재판은 구체성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해요. 재판이나 직접행동을 안 해도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기업이 문제고 정부 욕을 하고 그런 건 직접행동이나 재판 안 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삶으로 엮이는 거,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렇게 구체성을 띠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에 힘이 생겨나요. 그런데 재판은 이겼지만, 승소만이 우리의 성과인 건 아니에요. 긴급행동은 한 번 하고 사라지는 단체가 아니라 맥락과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집단이 멈추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성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그건 승소 이상의 결실이에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했을 때 이 글이 생각났어요.

“장기간 이어진 집단 투쟁에서 체포당하거나 제재를 받을 위협을 무릅쓰고 기존 법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커머너들(commoners) 사이에서는 강한 공동체 연대가 발전했다. 이러한 연대는 21세기에 요구되는, 경제적 인간에서 생태적 인간으로의 전환을 도왔다.”<sup>④</sup>

돌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더 깊이 있는 연대로 나아가는 사례로서 우리의 운동이 자리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활동의 과정에서 회고하고 토론하고 성찰하고 진화해 나가면서 결실을 이뤄 나간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직접행동 전에 윤석 님이 내부에서 “무턱대고 직접행동 하는 거 잘 모르겠다”라고 강도 높은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셨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우려에 대해 토론하느라 논의가 새벽 4시까지 이어졌고, 덕분에 더 단단하고 안전한 전략을 가질 수 있었어요.

④ 프리초프 카프라 · 우고 마테이, 2019, 『최후의 전환』, 박태현·김영준 옮김,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어린 생각해 보면 재판 투쟁이 마무리되고 우리 운동의 본무대가 삼척으로 옮겨질 때 제가 우려를 많이 표했었는데, 은빈과 윤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의 제 모습이 많이 겹쳐 보였어요. 결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어려움들을 함께 마주하는 게 필요한 것 같네요.

은빈 조직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책임을 지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서로의 포지션과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삼척팀은 몸이 이주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누군가는 우려 지점을 꺼내놓으면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결정에 대해 침묵하거나 안주하지 않는 태도 — 우려를 표현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대책을 제안해 보기도 하는 일 — 가 저는 공동체 내 돌봄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윤석 세상은 조바심 많은 사람들의 섬세한 염려로 굴러간다는 말이 떠올라요. 여담이지만 누구는 (수성스프레이가 아니라 절대 안 지워지는) 애나멜페인트 붓자고 했어요(웃음). 이렇게 했다면 대법원에서 재물손괴죄가 불인정되는(긴급행동이 승소하는) 지금의 결말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지워지는 재료로 저희가 치우고 정리하자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청소 노동자 분의 DM 에피소드가 기억나네요.

*“청년기후긴급행동이 수출입은행 건물에 (봉양-2 금융 지원을 비판하는) 스텐실 액션(2021.2.12.)을 수행해 사옥 담벼락에 비판의 메시지를 적시했을 때, 한 청소노동자분에게 메시지(SNS DM)를 받았다. “당신들의 의도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새벽부터 왜 내가 고생을 해야 하나”는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를 계기로 현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구조적 가해의 대가를 치르는 이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 다음부터는 지워질 수 있는 재료로, 치우고 정리하는 것까지 함께 하자고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다(25쪽).”*

이런 ‘야사’들이, 공인된 ‘대문자 역사’가 아니라 왁자지껄한 ‘소문자 역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사에는 대개 자극적이고 운동적 색채가 강한 메시지 하나로 정리되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한 사소한 맥락들이 쉽게 소거되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어린 이 보고서에는 두산 직접행동과 이어진 재판 뿐만 아니라 CICC(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라는 특이한 재판정의 이야기도 담기고, 지구법 세미나 이야기도 담고 있어요. 직접행동이나 재판이라면 거창하고 엄두가 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이 운동에 참여했던 동료들의 작고 고유한 이야기들이 그 큰 이야기에 가려지지 않길 바랐거든요.



다른 이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용기가 부족한 저부터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낸 용기에 힘입어왔으니까요.

“이 세 편의 여행기는 걸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다에 가려진 빙하의 밑부분처럼 청년기후긴급행동이라는 운동 공동체가 물에 가라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들이다. 우리에게서 결코 작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이 딱딱한 언어들 사이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97쪽).”

청연    관련해서 생각나는 글이 있네요. 논어 술이편에 나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잘 믿기지 않았지만 제가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자와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하고 도모하기를 좋아하여 성취하는 자를 데리고 가겠다.” (子曰 暴虎馮河하여 死而無悔者를 吾不與也니 必也臨事而懼하며 好謀而成者也니라.)

윤석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지는 힘에 대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협력의 방식으로만 헤쳐갈 수 있다는걸요.

# 3

## 쌓여온 협력들, 만들어 갈 연결들

**어린** 다른 방식의 협력, 정말 맘에 드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와 어떻게 만났는지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상적이었나요?

**은빈** 먼저 생각나는 건, 재판을 통해서 협력하게 된 변호인단이나 법학자로 대표되는 이들과 기후활동가들 사이의 콜라보(협업)예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는 건 엄청난 죄가 되잖아요. 저희 직접행동에 대한 기사에도 두산이나 삼성이 소송해서 뭘 모르는 애들 교육시켜라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법조계에서도 재산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시되는 문화가 있는데, 재물손괴죄라는 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게 운동의 큰 역동이었어요. 해외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의 사례로 기업의 재산권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의의가 큰 것 같아요. 게다가 지구법이라는 미미한 학문의 일부가 직접행동과 연결되고 대법원에 전달되면서 지구법이 땅에 발붙이는 사례가 되기도 했어요.

**청연** 법이 보수적이고 엄청 느리게 바뀐다는 통념이 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바뀌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재산권을 떠나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라’라는 인식은 재판관이나 판사에게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준법정신은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법이 공동체에 유해한 행동을 지속가능하게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그런 인식에 균열을 내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의 재판은 이제 로스쿨 시험 문제에도 나올 만큼 중요한 판례가 되고, 실제로 원주아카데미 극장 1심 등 다음 재판 판결문에 언급되는 등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사소한 변화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게 조금씩 쌓여 앞으로의 법조계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앞으로 법조인이 될 분들은 물론, 현직 법관들에게도요.

더불어 변호사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세대 간의 연결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법학자 의견서를 써주신 박태현 교수님은 새만금 재판을 참여한 1세대 환경

변호사셨잖아요. 그 경험들이 전수까진 아니어도 우리의 재판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걸 느꼈어요. 방청연대의 현장에 늘 발걸음을 옮겨주신 60+기후행동도 마찬가지죠. 60+기후행동의 활동가 분이 “너희가 옳다”라는 피켓을 들고 오신 게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세대를 이어 같은 싸움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 순간 전혀 외롭지 않았달까요... 우리보다 먼저 시도하고 부딪쳐 온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었다는 건 소중했다고 생각해요.

**어린** 얼마 전에 저희의 이야기가 담긴 <바로 지금 여기>라는 영화가 ‘기후정의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전국에서 수 차례의 GV(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었어요. 곳곳에서 영화를 보고 연락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었어요. 한편 지난번에 한 GV에 참가한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큰 무력감을 느낀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토로했던 게 생각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더 만나고 싶고요. 추상적이고 붕 뜬 이야기들이 아닌 그들의 삶의 입장이 되어 함께 이런 삶을 만들어가자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 단행본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책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빈** 저도 저희의 운동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균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적인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거나 연륜이 갖춰지고,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을 때 유의미하다고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외 사례죠. 저는 굉장히 일상적인 가치들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 봐요. 꼭 우리 같은 방식은 아니어도, 이런 일상의 시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촉진될 수 있을지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윤석** 저는 긴급행동의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연구자이기도 해요.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긴급행동이 ‘연구’와 만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긴급행동의 연구방법론은 무엇이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학위 논문<sup>⑤</sup>을 쓸 때 ‘액티비스트 리서치’ 방법론으로 그 고민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긴급행동과 이 보고서가 없었다면 제 연구도 없었을 거예요. 이번 현장지식 컨퍼런스의 취지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현장과 연구가 분리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이 연구를

⑤ 장윤석, 2025, 「세 가지 생태학살에 저항하기-봉양에서 삼척까지, ‘우리’ 청년기후긴급행동이 걸어온 길 위의 액티비스트 리서치」, 성공회 대학교 MAINS 석사학위 논문.

통해 지식 생산의 구조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생산한 지식이 귀하지 않느냐고요. 대개의 연구팀이 대학, 기업, 민간 싱크탱크에 국한되어 있는데, 시민사회와 운동 단체의 연구팀은 아직 생소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긴급행동 연구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어린 “우리는 세계 밖에 서서 지식을 습득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세계의 것이기에 안다.”<sup>⑥</sup>

은빈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현장에 존재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연구와 현장의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윤석 맞아요. 지금 다양한 연구자들이 삼척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고무적이에요. 현장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현장에 함께 해 활동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요. 이 순간 연구자는 연대자가 되지요. 우리의 다음 장들을 함께 써나갈 동료가 되는 것이고요.

⑥ Karen Barad,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p. 185.

# 4

## 우리의 다음 연구는?

**어린** 우리에게 이 연구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 숨을 누구와 함께 쉬고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쉬고 싶은지,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가능성을 여는 탐구였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돌아보니 이 연구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아쉬운 것들도 분명히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윤석** 맞아요. 저도 공동체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동체 내 다른 멤버들의 시각과 관점을 충분히 모아냈을까? 고민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모두의 기억과 감각이 결코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순간에 있었던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역사잖아요. 단체 내에서도 어느 누군가의 기억이 분명히 이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멤버들이랑 나누려는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 연구를 더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재구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시에 이 연구에서 제가 재발견한 의미는 ‘이어달리기’인 것 같아요. 한 명의 전력 질주가 아닌 여럿의 이어달리기였다는 보고서의 인트로 문장이 멤버들의 공감을 샀거든요.

“하나 더 발견한 것은, 끝이 없는 여정이기에 이 활동은 더더욱 이어달리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했던 모두가 온 시간을 내어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 여정은 이어달리기였다. 그렇기에, 길건 짧건 간에 가능한 만큼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바통을 들고 이어달린 모두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다(9쪽).”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어달리기로 파악할 때 새로운 공동연구의 지평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종합하고 결을 모아내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더불어 다음 연구도 이어달리기일 테니, 긴급행동의 연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도 있고요.

**청연** 연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은 이루지 못했어요. 제 문제의식은 여전히 같아요. 베트남 봉양의 석탄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있고, 삼척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누군가의 삶은 파괴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발전소들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을까요? 삼척 주민들, 베트남 주민들을 비롯해 더 많이 연결되어야 하고 알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땅에 뿌리박은 구체적인 현실들을 더 많이 만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또 한편으로, 저에게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웃음). 제가 피고인 중 하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재판도 계속되고 있어서 한국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엘리트의 언어, 낯선 언어의 방법론이 아니라 저자거리나 시장, 발달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너무 어려운 언어들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일상으로 끌고 들어올 것인지. 이걸 한편으로 지난겨울 광장으로 모였던, 그리고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간 응원봉들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악과 싸우고 나서 일상에서도 해내야 하는 남은 과제들이 있으니까요.

**은빈** 대륙 차원에서의 탈석탄을 이야기했을 때, 아시아는 지금도 각지에서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이 상향되면서, 이웃 국가들 중에서 한국을 모델로 삼거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 발전경로가 참고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특히 베트남이 그렇죠. 한국에서도 곧 탈석탄법이 통과가 될 거고, 조기 폐쇄 여부가 2026년부터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구호가 아니라 일상으로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지어진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떤 삶이 더 가능하지? 삼척이라는 현장에서 삶으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의 사례가 균열을 내고, 상상력이 되고, 자극이 되고, 가능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요. 발전소가 기후위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부분과 전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국이 좋은 모델이 되어 아시아의 탈석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초 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향해 가면서 가자와 한국을 연루시키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운동도 그런 '연루'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가 써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가해자성과 책무성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으로 전환해나가는 정치 운동을 만들어 보아요.

윤석 생각이 많아지네요... 활동가와 연구자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버리려는 삶,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거나 의미를 발굴하고 발견하려는 삶, 서로가 존재함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삶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단체 안에 여러 역할의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긴급행동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운동을 가능케 하려면 우리에게 더 다양한 협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현장'인 게 아닐까요?

어린 환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저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특이한 사례'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는 운동을 함께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윤석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어떤 관계망을 만들어가야 할지를 탐구하는 것, 그게 이 연구의 목표이자 한계이며 동시에 언제나 계속 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 이상으로 힘을 많이 받은 대화였어요.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내요.

# 산재 유가족운동 연구(2000-2023)

전주희·정우준(2024)

원문 읽기



---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공간적 현장과 활동이 그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폐되거나 감추어져 있다면 숨기고 은폐한 장막을 걷어내고 현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은폐되어 온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현장화’ 과정을 추적하고, 어떤 행위자들이 현장을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적 회유와 강권적 합의가 초래한 ‘숨겨진’ 산재로 인해 사라진 당사자, 유가족, 피해노동자의 동료들을 다시 현장으로, 사회로 호출하고, 산업재해가 산업화의 부수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2000년부터 23년간 추적하여 정리하고 있다. 1980~1990년대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으로 대표되는 가족운동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민주화운동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2000년 이후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족운동은 그동안 ‘현장화’되지 못했던 의제를 사회적으로 풀어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선정위원회’는 이번 컨퍼런스 주제인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을 기반으로 심사과정에서 현장성, 실천성, 독창성, 명확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 연구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처음으로 산업재해 유가족 운동을 단계별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어 심사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2000년부터 23년간 산업재해 유가족 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진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이 크다.

# 1

## 연구의 문제의식과 의미

한국사회에서 산재사고는 오랜 기간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반복되어 왔다. 그 결과 산재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산재은폐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반복되어 구조화되었다. ‘숨겨진 산재’는 산재 피해자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감춘다. 산재 당사자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으로 남겨진 유가족 그리고 피해노동자의 동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죽거나 살아남았다.

한국사회 산업재해 해결의 실패는 산재 원인 규명의 실패이자, 산재 피해자 지우기의 결과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산업재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 산업활동에 따른 ‘부수적 피해’로 정당화되어 왔다. 다만 몇몇 사례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사회적 사실로 산업재해를 드러냈을 뿐이었다. 1980년대 말, 연이어 발생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문송면의 사망,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중독 사고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산재추방운동’이 일어났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IMF 위기를 틈타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했고, 나아가 위험의 책임을 합법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위험이 증폭되었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기록’을 반복했지만 ‘위험의 외주화’라는 더 심각한 구조적 원인으로 산재사고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던 와중에 2014년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시민들의 위험인식이 증가하던 시점과 맞물려 사건화되었다. 또한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전면에 등장한 유가족들의 활동은 구의역 사고 이후 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을 추동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산재사망 사고에서 유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을 조사하여 2016년 이후 본격화된 유가족 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조사, 연구했다. 구의역 사고 이전에도 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은 존재했다. ‘진상규명’을 전면에 내걸고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와 함께 주체적으로 투쟁에

참여한 '유가족운동'의 처음은 무엇일까? 1999년 산재노동자 이상관의 자살로 시작된 '이상관 투쟁'에서 유가족(아버지)은 대책위(〈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160여 일이 넘는 투쟁의 처음과 끝을 포함해 전 과정을 함께 지켰다. 5개월에 걸친 공단 앞 농성투쟁에 참여하며, 4~5차례 이뤄진 농성장 침탈을 시민대책위와 함께 막아냈다. 투쟁에 참여한 김재광은 "유가족이 홀랐던 것은 회사 측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대책위와 늘 상의했고, 결국 대책위 전체의 의견에 따라준 것"(인터뷰)이라고 회고했다. 이후 삼성의 백혈병 피해를 세상에 알린 황유미의 유가족 황상기(아버지)의 싸움이 있었고 황상기 유가족은 유가족-활동가로서 10여 년간 삼성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본 연구가 산재 유가족운동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산업재해 피해자가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과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다. 오랫동안 산재 유가족은 회사 측의 가장 처음의 회유 대상이면서 합의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법적 책임과 사회적 발언이 금지되었다. 산재 유가족은 거대 회사와 고립된 개인의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사적합의'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는 회사 측의 산재은폐의 시도가 폭로되는 과정이자, 피해의 범주가 개인에서 동료 노동자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유가족이 사회적으로 등장할 때 필요한 충분조건으로서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유가족의 결기와 결의가 사회적으로 조명되는 만큼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현장 동료들의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유가족을 피해자화하는 또 다른 잘못된 시선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유가족은 주체로 나설 때조차 영웅화된 희생양으로서 굴절되기 쉽다. 그러나 싸움의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역량과 만나지 못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란 단편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운동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유가족의 활동과 목소리의 결이 달라지며, 유가족의 활동에 따라 투쟁의 양상이 변화한다. 이러한 관계성에 기반한 유가족운동의 의미를, 전체 노동자 건강권 싸움의 과정에 '위치' 지우고자 했다. 셋째, 원인규명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활동, 진상규명 활동의 중요성이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기술적이고 표면적인 원인에 국한되고 이에 대한 해결과정이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유가족과 결합한 산재투쟁은 구조적인 원인규명과 사고 이후의 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산재사고는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 2

## 주요내용

### 1)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 통시적 분석

‘산재유가족운동’의 의미는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구별된다. 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이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과 함께 대책위 및 진상조사위 등의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며, 해당 사건을 넘어 산업재해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유가족들의 운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와 그의 어머니 김미숙 등이 있다. 연구 대상을 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으로 한정할 경우, 과거 사회적 조건 속에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산재 유가족들의 행동을 드러낼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산재 유가족운동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의의 산재 유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산재 유가족운동을 통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신문 기사를 주요한 수단으로 정하였다.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www.bigkinds.or.kr](http://www.bigkinds.or.kr))를 통해 200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4개 전국·지역일간지 및 방송사 기사에서 “유족”이란 단어를 필수로 포함하며, ‘산재, 일하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인부, 노동자, 근로자, 작업자’ 중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14,191건 중, 연구자가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라고 생각한 178건(1건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1건으로 처리)을 정리하였다. 덧붙여, 검색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알고 있는 사망사건 기사는 별도로 검색하여 추가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178건은 산재 유가족의 농성, 기자회견, 유족 인터뷰, 노동조합 및 대책위를 통해 입장 전달 등을 한 기사들이며, 사망노동자가 꼭 산재보험 및 직역연금, 타 보험 등에서 정의하는 산재사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과 관련된 사망이라고 연구자가 판단한 사례 모두를 포함하였다. 178건의 사례는 아래<표>와 같은 분류표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표 1\_ 산재 유가족운동 정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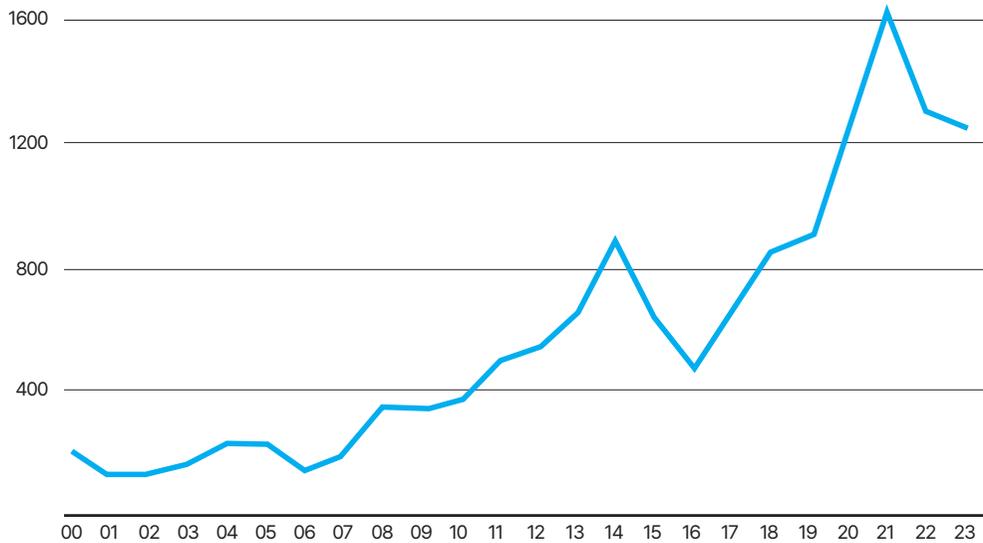
항목	주요 내용
사망일	해당 날짜
언론보도일	빅인즈 및 기타 검색을 통해 확인한 최초보도 날짜
지역	광역시도
재해자명	최대한 실명 기입 원칙, 다수 사망의 경우 명수 기재
원청기업명	최대한 원청기업명 기입 원칙
하청기업명	사망노동자 근무 하청기업명을 원칙으로 하되 다단계 혹은 사업자간 계약 형태의 경우 명시된 기업기입 (하청은 아니더라도 지역사업소가 명시된 경우 해당 내용삽입)
직업	적시된 직업명 및 산업+노동자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해당없음, 기타 (다수 사망, 다수 고용형태), 알수없음
성별	기사에 기입된 정보
사고대응 단위의 범위	유가족 참여,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참여, 대책위 구성
주요 요구사항	진상규명, 산재승인,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책임있는 보상, 재발대책 마련
재해유형	사고성 재해, 질병 사망, (과로)자살, 과로사, 기타
주요 참여유가족	어머니, 아버지, 자식, 배우자, 기타
추모 관련	추모제, 추모조형물 설치, 단체 설립, 해당없음 (추모제+추모조형물 설치의 경우 더 상위항목 체크 (추모조형물설치))
기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 내용 별도 기입

## 2)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 : 시기별 특성을 중심으로

산재 유가족을 다룬 기사는 2000년 208건에서 2023년 1,254건으로 증가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에는 1,622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 역시 2000년 3건에서 2023년 14건으로 증가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전 연도인 2020년에 2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언론보도 빈도와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라는 한정된 데이터지만, 아래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산재 유가족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재 유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났으며 2020~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면에서 절정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_연도별 언론기사 빈도 추이**



**표 3\_연도별 산재 유가족운동 사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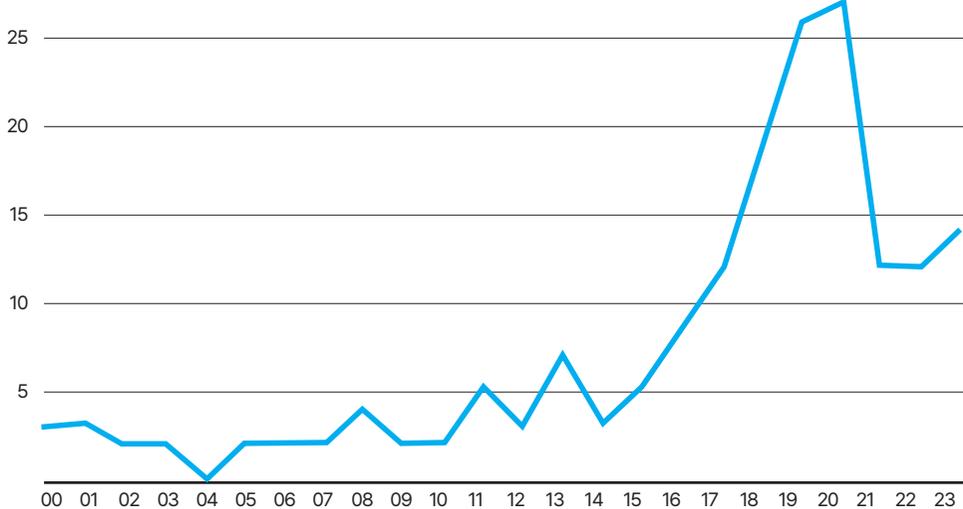


표 4\_ 산재 유가족운동의 시기별 특성

구분	연대의 범위	주요 요구	유가족 주요역할
1기 (2000-2007)	유가족 단독 혹은 해당 사건의 노동조합, 지역 시민사회 지역언론 중심보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산재승인 및 책임 있는 보상	'유족'이라는 묶음으로 요구사항을 가진 불운한 익명의 주체로 등장
2기 (2008-2015)	동일사업장 유가족들의 연대 및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단위들의 상설체 구성	보상과 인정 외 책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산재노동자 추모 등 다층적 요구 등장	얼굴을 드러내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촉구 및 연대체의 핵심 구성원(반올림)
3기 (2016-2023)	대책위원회 구성의 증대와 정부 등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산업재해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연대체 구성에 따른 상시적 연대가능성 증대	공적 차원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과 사과의 범위 확대,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설립, 집단적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 설치	산재 유가족들의 조직화 및 단체 설립 활동가로서 산재 문제 이외에도 연대활동

유가족과 노동조합과의 연대에서 나아가 유가족들이 단체를 만들고, 전국적 범위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종교계, 전문가, 때로는 정부를 포함하는 대책위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축했다. 기업에 산재 인정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공적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 설치 등으로 확대되었다. 산재사망이라는 재난에 직면한 불운한 익명의 피해자에서 가족의 유지를 이어 산재사망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연대운동의 중심이자 투사로 활동하는 유가족이 등장한 것이다. 1기와 2기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 가장 큰 산재 유가족운동이 이뤄진 시기가 3기였다.

### 3) 산재 유가족운동과 진상조사보고서

산재 유가족운동은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구의역 사고 이전에도 유가족이 싸움의 전면에 등장하여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활동의 주체로서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산재 유가족운동의 특징은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 성과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전 활동과 대비된다.

우선, 본 연구는 산재 유가족운동의 가장 큰 정당성을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것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호로 요약된다고 본다. 책임자 처벌의 경우 법적 처벌이나 기업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기에 유가족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진상규명'으로 집약된다. 그렇다면 유가족들은 왜 '진상규명'을 요구할까? 죽음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묻는다는 것은 그 죽음이 곧 개인적 죽음이나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 해당 죽음의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유가족운동은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의 극한적인 방법 등이 동원된다. '때 이른 죽음'을 전면에 앞세운 애도 시위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위반하며 죽음을 삶 안에 다시 가져다 놓는 기괴한 장례의례다. 애도 시위의 가장 앞에 유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사회통념을 건드리는 것이기에, 유가족의 등장은 복잡하고 강렬한 정서를 사회적으로 유발한다. 때문에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죽음의 원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궁금증 이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투쟁은 죽음의 원인이 유가족에게 충실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을 전제한다. 한국사회의 산재 유가족운동의 특징을 생각할 때, 억압적인 방식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화하고 사소화, 사사회하는 권력작용 아래 유가족의 '위치'가 이미 구조적으로 할당되는 조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만 유가족운동의 강렬한 정서와 활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가족운동이 산재운동에 끼친 영향과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중간에 회사 측과 보상에 합의하는 등의 포기 과정 없이 진상조사보고서를 남긴 14건의 사건을 다루고자 한다. 14건의 사건은 1개 이상의 진상조사보고서(이행보고서 포함)를 작성해 총 19종의 보고서를 우리 사회에 남겼다.

번호	사고일	사고명	보고서 제목	작성 주체	민/관 (노사)	유족/노조 참여
1	16.05.28.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민+관	유족 위임 노조 참여
2	16.10.26.	이한빛PD 자살사고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조사보고서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민	유족 참여 노조 참여
3	17.05.01.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망사고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민+관	유족 불참 노조 참여
4	2017	이길연 집배노동자 자살사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조사보고서	고 이길연 집배노동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	노+사	유족참여 노조참여
		집배원 과로사, 과로자살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민+관	노조 참여 유족 위임
5	18.01.03.	에스티 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 자살사고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공인단가·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민	무노조 유족 참여
6	18.12.10.	김용균 사망사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회	민+관	노조 참여 유족 참여
7	19.01.04.	서지윤 간호사 괴롭힘 자살사고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 조사결과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민+관	노조 참여 유족 참여
8	19.11.29.	문중원 기수 자살사고	고 문중원 기수 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민	노조 참여 유족 참여

번호	사고일	사고명	보고서 제목	작성 주체	민/관 (노사)	유족/노조 참여
9	20.02.04.	이재학PD 자살사고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노+사	노조 참여 유족 참여
10	20.05.22.	김재순 산재사망사고	고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민	노조 참여 유족 참여
11	20.03.08.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에이스손해보험 코로나19 집단감염 실태조사단	민	노조참여 피해자 참여
12	20.05월	쿠팡 부천신선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	쿠팡 집단감염,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쿠팡발 코로나19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민	노조참여 피해자 참여
13	22.01.30.	이힘찬PD 자살사고	스튜디오S 고 이힘찬 드라마 프로듀서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스튜디오S 고 이힘찬 드라마 프로듀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노+사	노조참여 유족참여

이를 작성 주체별로 유형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작성 주체별 유형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 ▶ 민관 합동 혹은 노사 공동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보고서가 노사합의로 제출되는 경우이다.
- ▶ 대책위원회와 유가족 또는 피해자와 함께 이 독자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남기는 경우이다.
- ▶ 마지막으로 공동조사기구가 구성되기 어려운 경우 중 대책위원회 독자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이 시기 산재 유가족운동의 특징은 시민대책위 형식으로 묶인 고인의 작업 동료들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해 사회적 목소리와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며 '산업재해'를 사회적 이슈를 만들면서 유족 보상을 넘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산재사망사고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남기는 경우, 거의 대부분 가장 높은 수준의 유가족 참여가 담보된다. 높은 수준은 투쟁의 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처럼 진상조사 과정에 유가족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보고서를 남기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는 죽음에 대한 개별적 고통을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가족의 죽음을 개인의 것 혹은 개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만 진상규명의 요구가 현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될 수 있다. 진상조사는 개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 목적만이 충족되어야 한다면 책임자의 사과와 인정 그리고 충분한 보상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진상조사는 작업장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내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다. 이는 유가족의 요구가 가족의 죽음 규명을 넘어 살아있는 동료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염려'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유가족의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가 전제된다. 노동사회운동 역시 유가족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진상규명'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축적된 전문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사고조사는 매우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연결해 내어 추상적인 구조적인 원인을 구체화시키는 고도의 작업일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장성'에 기반한 조사가 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진상규명 활동의 중요한 물질적 성과로 작성되는 진상조사보고서는 유가족들의 능동적, 주체적 참여와 노동시민사회의 운동적 역량이 집중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유가족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결합과 관계설정 없이는 이러한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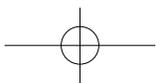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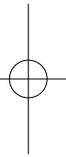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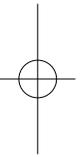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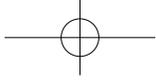
## 결론

위의 사례 중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간의 관계가 단절적이지 않고 연결되고 연장되는 것이다. 유가족의 활동이 시민대책위의 활동으로 확장되고, 유가족-시민대책위의 '진상규명' 활동 장 안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위치 지어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보고서를 매개로 진상규명 활동이 지속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진상조사보고서로 집약되는 진상조사활동의 방향은 무엇일까?

진상조사보고서는 첫째, 피해의 '관점'에서 조사방향과 범위가 설정되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다는 것이 자칫 피해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진상조사의 객관성은 피해자의 참여와 관점을 포함한다. 피해자의 '관점'을 포함한 객관성이란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산재노동자의 위치가 하나의 정당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중립성 아래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피해'를 중심에 놓는 것, 즉 기존의 지식권력의 편향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한 객관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화된 객관성의 관념을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산재피해자의 경험과 말이 곧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권력의 장에서 설정된 '객관성', '중립성' 등의 지식이 이미 산재노동자와 같은 소수자의 위치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조사과정이어야 한다.

진상조사활동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활동방향에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구의역 사고'이며, 다른 하나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이다. 이 두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란 과학과 지식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과학과 누구의 지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다. 가치중립적인 과학과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파생될 때, 우리는 유가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대가 묻고 광장이 답하다

청년들이 광장에 나온 이유 :  
여의도, 남태령, 광화문,  
한강진, 그 너머의 이야기

이재정·김나을·김재상·김철규·김홍민·박지현  
윤정민·이준형·윤세정·지은주·권순욱·권승은  
(2025)

원문 읽기



---

사회운동 현장은 종종 단일한 구호나 거대한 담론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열망이 살아 숨 쉰다. 사회운동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한다. '시대가 묻고 광장이 답하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울림을 준다. 이 연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촉발된 윤석열 퇴진 집회 현장을 정면으로 다룬다. 사건 발생 직후 1천여 명의 청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하고, 초점집단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해, 광장을 채웠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신속하고도 입체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현장성을 보여준다.

특히, 광장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독창적 관점이 돋보인다. 참여자들이 정치적 승리의 상징인 여의도의 탄핵 가결 순간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했던 남태령 투쟁의 경험을 더 중요한 기억으로 꼽았다는 점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이를 통해 광장이 단순히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공간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그 존재를 지지하는 연대의 학습 공간이었음을 제시한다. 공감 사기 어려울 광장의 아젠다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운동의 확장 가능성과 내적 과제를 성찰하는 본 연구의 섬세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강점은 실천성이다. 광장의 핵심 요구가 '내란 종식'이라는 단일 과제를 넘어 '사회대개혁'이라는 더 넓은 지평을 향하고 있음을 통계와 생생한 목소리로 입증한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시민 참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광장의 에너지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과 실천적 방향으로 연결한다. 이 연구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던진 질문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그 답을 향한 중요한 길잡이를 제시하는 특별한 현장연구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광장 이후의 정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

## 문제의식

2024년 겨울, 한국사회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했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교과서에서만 접하던 세대가 그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중에서도 광장의 중심에 선 2030세대가 주목받았다. 이들은 스스로 응원봉을 들고, 깃발을 흔들며, 노래하고 구호를 외쳤다. 사람들은 이들을 '응원봉 부대'라고 상찬했다.

새롭게 주목된 광장의 2030세대는 광장의 문화를 바꾸고 광장의 활력을 더했지만, 이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응과 해석은 이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이들을 '민주주의의 희망'으로 치켜세웠지만, 마치 광장에 선 청년 여성을 처음 보는 듯한 반응은 그동안 역사적 국면마다 실천해 온 여성들의 존재와 미투운동, 불법촬영 규탄, n번방 사건 등 국면에서 언제나 거리에 서 있던 여성들의 삶을 지우는 것과도 같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었다.

한편, 광장 참여 청년들은 왜곡과 폄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가의 사주나 동원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주변의 질은 냉소도 있었다. 특히 박근혜 탄핵 집회를 경험한 이들이 그러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아냈지만, 근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문제의 근본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좌절감이나 배신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었다.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가 청년세대 내에도 존재했다.

광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 광장에 참여하는 청년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마주하면서 궁금했다. "왜 청년들은 광장에 나왔는가?" 이 자료집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한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FGI, 그리고 광장 청년들이 참여한 집담회 기록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왜 광장에 나왔는지 그들이 꿈꾸는 민주주의는 무엇인지를 동세대의 언어로 탐구하고자 했다. 이는 기성세대의 해석 틀을 벗어나 청년 당사자들이 동세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윤퇴청(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청년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충격 속에서 광장에 나서야 한다는 결심으로 모여 만든 공동체다. 윤퇴청은 직장인,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2030청년들의 자원활동으로 운영되었고, 본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캠페인, 좌담회, 토론회 등을 기획하며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해 왔다(윤석열 파면 이후에는 ‘광장을 잇는 윤퇴청’으로 조직을 전환하였고, 광장에서 만난 청년단체들과 함께 만든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퇴청에게 이 연구는 광장이라는 ‘현장’을 연구하는 일이자, 동시에 나와 우리 세대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학업과 생계를 잠시 내려놓고 광장으로 향했던 청년들의 이유, 그들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연대와 두려움의 감정 속에서 가장 생생한 민주주의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2

## 주요내용

### 1) 설문조사: “왜 광장에 나왔는가”

본 연구는 2025년 1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13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윤석열 퇴진 집회(이하 ‘광장’) 참여 경험이 있는 10~30대 청년세대였다. 표본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1,022부가 회수되었으며, 중복 응답 및 오류 응답을 제외한 95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수집을 위해서 윤퇴청 SNS를 통한 홍보물 배포, 오프라인 유인물 및 피켓 홍보를 병행하였다. 주요 설문 질문은 광장 참여 동기, 민주주의 위기 인식, 광장의 요구사항, 민주주의 강화 방안, 바라는 사회상 등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76.7%, 남성 11.8%, 논바이너리·트랜스·젠더퀴어 등 기타 6.0%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대(71.5%)와 30대(26.8%)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윤석열 탄핵 집회 이전에 다른 집회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63.1%였고, 그 중 다수가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미투운동’, ‘n번방 사건 규탄 시위’ 등 성평등 관련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2025년의 광장이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이전의 다양한 사회운동 경험이 축적된 연속적 공간임을 보여준다. 한편, 36.9%가 이전의 다른 집회 참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① 비상계엄 충격(73.2%), ② 시민으로서 책임(72.7%), ③ 윤정부에 대한 실망(71.6%), ④ 사회문제 개선(36.2%) 순으로 나타나 단일 원인보다는 복합적이고 중첩적 동기에 의해 광장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젠더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71.6%), 이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성차별적인 정책과 기초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전 집회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윤정부 실망', '사회문제 개선'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첫 참여층(36.9%)은 비상계엄 충격이 직접적 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장 참여 동기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들은 광장의 요구사항(1순위 기준) 중 '사회대개혁(63.1%)'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는데, 이는 '탄핵 완수(9.5%)'나 '내란청산(24.8%)', '국정 안정화(7.0%)' 보다 앞선 수치였다. 특히 청년 남성(54.9%)에 비해 청년 여성(65.8%)이 사회대개혁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장 참여 청년들이 광장 중 가장 기억에 나는 장소는 '남태령'이었다. 주관식 응답 중 공간 언급(총 170건)이 남태령(103건), 한강진 48건, 국회(여의도) 40건, 그 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은 것은 '집회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와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언급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남태령을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과 함께 언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남태령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현장에서 여성, 성소수자, 농민, 노동조합 조합원 등 낯선 존재들이 서로 연대하여 트랙터 행렬이라는 승리를 경험한 기억이 광장 청년들에게 남긴 사회적 함의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95.7점)'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92.3점)'를 꼽았다. 그 외에도 정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90.7점), 공정성의 상실(89.9점), 다양성에 대한 포용 부족(89.2점),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의 부족,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자유의 억압(76.8점) 순으로 나타났다. 젠더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에 비해 민주주의 위기를 전반적으로 더 심각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위기를 실감한 장면을 서술한 주관식 응답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의 계엄 옹호' 관련 언급이 가장 많았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강화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기회 평등 보장'(59.3%),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 확대'(58.1%), '정치 양극화 완화와 협치 문화 구축'(55.8%),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보장'(44.8%), '다양성에 대한 포용 강화'(26%), '공정성과 정의 실현'(26.1%), '권력의 분산 및 견제 시스템 강화'(23%) 순으로 나타나 광장 참여 청년들이 민주주의가 강화되기 위한 대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시민 참여 보장'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중 61.1%가 한국사회 미래상으로 '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사회'를 꼽았다. 그 외에도 '기타'(13.6%), '안전과 복지를 갖춘 평화로운 사회'(12.6%),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9.7%), '희망과 미래 있는 사회'(3.2%), '자유로운 사회'(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광장 참여 청년들이 소수자가 억압받지 않고 혐오나 차별이 없는 사회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2) FGI

본 연구는 광장에 참여한 청년들의 광장 참여 동기와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FGI는 다양한 참여자가 의견을 서로 나누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의견 교환 및 토론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동질적인 집단 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질적인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대주제에 공감하여 광장에 나왔지만, 젠더에 따라 그 동기와 인식, 행동양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여성, 논바이너리·젠더퀴어, 남성 그룹 등으로 그룹화하였다. 또한 앞선 설문조사에서 여성 청년이 70% 이상을 차지한 것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우 이전 집회 참여 경험 정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2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앞선 설문조사 연구 참여자 중 젠더와 연령, 집회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각 그룹의 특성을 소개하면 1) 여성 A그룹(첫 집회 참여, 총 5명), 2) 여성 B그룹(집회 다수 참여, 총 6명), 3) 논바이너리·젠더 퀴어 그룹(총 6명), 4) 남성 그룹(총 5명)으로 구분되었다. 본 인터뷰는 2025년 3월 한 달에 걸쳐 각 약 120분~140분 가량 진행되었다. 연구 분석은 전사 후 개방코딩(open coding)한 후 범주화 및 빈도 비교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1) 광장에 나온 이유 및 탄핵 이외의 관심있는 정치 사회 이슈, 2) 광장이 요구하는 사회대개혁 과제, 3) 광장의 정치화에 대한 인식, 4)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12·3 내란의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룹과 무관하게 ‘현실감이 없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당시를 회상하며 ‘분노’, ‘당황’, ‘혼란’,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호소하였다. 일부 참여자 중에는 계엄 당일 국회로 가 계엄군을 막은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머릿수를 보태기 위해’, ‘앞뒤 생각 안 하고’ 달려나갔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 참여자는 ‘두려움’, ‘가족이나 친구의 만류’, ‘지방

거주' 등으로 인해 계엄 당일 국회로 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동료 시민에 대한 '부채감'을 느끼게 되었다. 광장에 나간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생존의 문제, 시민의 의무, 동료 시민에 대한 부채감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광장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도 있었다.

광장에는 2030여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유발언 단상에는 비가시화된 쿼어 당사자도 눈에 띄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젠더 차원에서 '억압받았던 경험'이 반응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억압의 경험이 '정치적인 존재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한편, 광장 국면에서 2030 남성 청년은 '극우화'나 '적은 광장 참여' 등으로 묘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남성 그룹 연구 참여자들은 '이해하지 못 하'거나, 동일집단으로 간주되는 데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했다. 남성 청년 집단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광장에 참여하는 남성 청년'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또래집단 중 이질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윤석열 탄핵 집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제에 대한 집회 참여 경험이 있었는데, 특히 젠더퀴어·논바이너리 집단에서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쿼어 관련 집회 참여 경험이 많았다. 한편, 윤석열 탄핵 집회가 첫 집회 참여인 여성 A그룹의 경우 광장 참여 이후 다른 집회 현장으로 연대를 확장하며 새로운 광장을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윤석열 탄핵 이외에 다양한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여성 A, B그룹, 젠더퀴어·논바이너리 그룹에서는 젠더 의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젠더퀴어·논바이너리 그룹은 상대적으로 관심 의제 가짓수가 가장 많았다. 남성 그룹의 경우 특수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군인권, 사회적 참사 등이 타 그룹과 달리 언급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는 윤석열 탄핵이나 내란 청산을 사회대개혁의 우선순위로 두면서도, 광장의 다양한 의제가 순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광장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아가 속의 민주주의 공론장 등 광장의 제도화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광장 아젠다가 ▲자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시민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거나, ▲이미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을 사거나 관철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근혜 퇴진 광장의 아젠다가 실제 대선 국면에서 묵살되거나 주요 책임자가 사면되는 등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경험하고 불신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광장의 아젠다가 대선 국면과 결합되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거대 양당 체제에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 외에 대안이 없고,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 민주당에 투표’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당제의 필요성 역시 제시되었다.

광장과 정치에 대한 응답을 좀 더 살펴보면, 광장 대응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질문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진보당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진보당이 16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민주당 5회, 정의당(민주노동당) 3회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장 대응성이 높은 정치인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양상이 역전되었다. 광장 정치인인 제3지대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참여자는 7명, 없다고 답한 참여자는 12명, 모르겠다는 2명이었다. 특히 여성 A그룹에서는 제3지대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참여자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극우 시위, 탄핵 반대 시위로 대표되는 ‘반대편 광장’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반대편 광장 참여 동기를 나름대로 파악하고자 하였고, 일부 참여자들은 반대편 광장 참여자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주로 연구 참여자들이 반대편 광장에 참여하는 동기로 파악한 것은 1) 단순 혐오, 세뇌되어 맹목적으로 행동하거나, 2) 그들만의 명확한 세계관 존재, 3) 사회, 문화, 경제적인 구조적 요인 등을 지적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사회복지의 부재’로 음식 또는 금전적 보상이나 커뮤니티 등이 노인 대상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진단이었다. 또한 극우의 준동이 고립,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연결’과 ‘포용’을 강조하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 3

## 학문적·사회적 반응과 활용<sup>⑦</sup>

본 연구는 '광장 경험의 의미를 청년들이 직접 묻는 최초의 설문조사'로, '청년들의 광장 참여를 현상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광장에 나온 이유와 배경, 그리고 이들이 광장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질문하고 기록'한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sup>⑧</sup> 무엇보다 본 연구는 결과의 완결성보다 결과의 확산 과정, 즉 현장에서 태어난 지식이 어떻게 사회로 환류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연구는 학회·학술서·언론·시민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산되며, 학문적 담론과 사회적 실천을 잇는 결과물로 평가받았다.

### 1) 학문적 반응

본 연구는 다양한 학술대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결과물로 소개되었다. 우선, 본 연구는 2025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5월 16일) <민주주의> 세션과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학술대회(5월 22-23일)에서 발표되었다. 전자의 경우, 제도 중심의 사회정책 분야에서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지형에서 새로운 사회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 질문을 던졌다. 후자의 경우, 5·18민주화운동이라는

- ⑦ 윤희청의 연구 자료집은 1)설문조사, 2)FGI, 3)간담회 후기로 구성되어있지만, 주요하게 알려진 연구는 '설문조사'다. 따라서 해당 파트에서는 설문조사에 대한 학술적, 사회적 반응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⑧ 권김현영. (2025년 2월 6일). 왜 광장에 나오셨나요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1166.html>

역사적 사건과 광장의 민주주의를 연결하여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운동을 만들어냈음을 광장 참여 청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문학동네에서 발간한 학술서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에 윤퇴청 이재정 대표가 공저자로 참여하였고,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원고를 “광장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 다시 만들 세계, 광장의 민주주의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담았다. 본 학술서는 사회학·사회복지학 연구자들이 윤석열 탄핵 광장의 함의를 서술함과 동시에 광장 이후 한국사회가 가져가야 할 사회적 논의를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중에서도 윤퇴청의 설문조사를 다룬 장은 광장의 현장감과 청년세대의 시선과 희망을 다뤄내는데 기여하였다.

## 2) 사회적 반응

본 연구는 학계 뿐만 아니라, 언론·시민사회 등에서 다뤄졌다. 다양한 언론에서 본 연구결과를 다뤘고, 일부 칼럼니스트들을 통해 인용되기도 했다. 언론에서 본 연구를 다루는 주된 방식은 ▲광장 참여 청년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단편적인 시각을 비판하며 이들이 호소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거나<sup>9)</sup>, ▲광장 참여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거나<sup>10)</sup>, ▲광장의 연대 경험을 강조하며<sup>11)</sup> 적대와 분열의 정치 지형 속에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활용하거나, ▲광장 청년들의 요구가 단지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대개혁으로 확장되어있다는 점을 강조<sup>12)</sup>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언론은 본 연구를 통해 광장 참여 청년들이 ‘탄핵’이라는 표상적 광장의 목표 뿐만 아니라 ‘사회대개혁’, ‘연대’, ‘불평등 종식’ 등 청년세대의 근본적 문제 개선까지 나아가 요구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9) Ibid.

10) 박주현. (2025년 2월 2일). 청년들은 ‘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광장에 나왔다 -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설문조사 결과발표회. 일다. <https://www.ildaro.com/10107>

11) 박상혁. (2025년 1월 28일). 명절 고민 "尹 탄핵 반대하는 할머니와도 연대할 수 있을까?".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12620515033763>

12) 장혜영. (2025년 6월 18일).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사회대개혁 기준선.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202776.html>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반응도 활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는 온라인으로 1,700여명이 동시 접속하였는데, 이는 광장 참여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시민사회와 정치 영역에서도 본 연구에 대한 관심이 활발하였고, 한국여성의전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성명 및 논평에서 탄핵을 넘어 성평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주장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 4

## 성찰과 후기

역사적인 순간들 속에서 동세대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광장이라는 공간을 공유한 시민 주체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의 궤적을 지나 현재의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등 자세한 이야기는 물론 전반적인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 안에 맥락을 덧입히며, 분석하고 기록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학습의 과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연구자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느꼈다. 광장의 밀도 높은 참여자이자 동시에 그 현장을 기획한 활동가였기 때문에 관찰자로서 연구자의 태도를 고민할 겨를이 없었다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과 연구 사이의 적절한 거리 두기, 또는 그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현장 지식을 다루는 연구활동가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다.

고백하자면, 본 연구는 사회운동 연구나 설문조사 방법론에 정통하지 않은 연구책임자가 ‘겁 없이’ 뛰어난 결과물이다. 연구책임자(이재정)는 시민사회운동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정책 연구를 하고 있어 본 연구와는 사실상 일정 거리가 있다. 초기 연구설계 단계에서 빠듯한 기일의 실행계획을 세웠기에 연구설계와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분석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연구질문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설계 단계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설문 질문과 항목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싶다는 욕심이 든다. 당시에는 연구의 정교함보다는 시의성에 중점을 두었고, 하루라도 빨리 ‘광장 참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 돌이켜보면 그 다급함이 오히려 연구를 가능하게 한 힘이었던 생각이 든다. 만약 완벽한 설계를 고집했다면 이 연구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연구의 한계와 부족함은 남지만, 그것 역시 과정의 일부로 겸허히 받아들여려고 한다.

이 연구가 세상에 공개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광장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를 참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큰 보람을 느꼈다. 때로는 연구자들이 연락을 주어 연구 조연을 구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연구가 누군가의 출발점이나 참고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앞으로도 광장의 의미와 참여 주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구물들이 많이 발간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연구를 마치며 또 하나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은 연구결과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특히 현장과 문제의식이 뚜렷한 연구일수록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전달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광장 참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토론회, 포럼, 기자회견 등에 가급적 모두 참여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나눠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을 만날 때면 결과물을 건네며 조금이라도 널리 확산되길 바랐다. 현장지식 컨퍼런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료 연구자들과 나눠보고 싶다.

한편으로 연구의 시의성에 대한 고민도 남았다. 설문조사의 경우 윤석열 탄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창이던 시기에 공개되어 사회적 반향이 컸지만, 파면 이후 진행된 FGI 결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다. 여러 언론에 보도화를 제안해보기도 했지만, 이슈가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광장의 이야기가 다시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기란 쉽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시의성과 정교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연구자의 역량에 대해 고민과 갈망이 생겼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내게 중요한 깨달음을 남겼다. 연구는 완벽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와 호흡하며 이어지고 다듬어진다. 현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사회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누군가의 언어로 다시 쓰이며 연구는 완성된다. 앞으로도 현장과 연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조금 더 좋은 거리와 균형을 찾아나가고 싶다. 그 여정 자체가 ‘좋은 연구’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다.

# 이주농업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모색 방안

우춘희(2023)

원문 읽기



---

이 연구는 이주농업 여성노동자들이 마주한 노동과 삶의 조건을 현장에서 세밀하게 포착한 기록이자, 연구자의 애정어린 관찰과 연대의 흔적이 담긴 작업이다. 폭염이 이어지던 한여름의 갯잎밭과 부추밭에서 온습도를 측정하고,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노동을 참여관찰하여 얻은 ‘몸의 자료’들은 기존의 연구나 제도 언어가 닿지 못하였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에서의 폭행과 언어폭력, 성희롱, 임금체불, 불안정한 체류자격 등 복합적인 억압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며, 여성·이주·농업노동이 만나는 지점을 꾸준히 파고든다. 특히, 아주 내밀하다고 여겨지는 신체적 경험과 권리가 어떻게 제도의 부재로 인해 침해되는지를 예민하게 포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고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휴게공간 설치나 ‘오줌권’ 보장이 포함된 노동환경에서의 기본권, 적절한 주거의 권리, 가족구성권, 의료 접근권 등 구체적인 권리-대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가 채택한 방법과 구성, 분석은 ‘현장 지식’이 어떻게 ‘좋은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매우 잘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주농업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기록하며, 연구가 사회의 구체적이고도 취약한 현장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또한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 권리의 언어로 번역한 작업은 제도의 반쯤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과 이주민,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상상하게 한다. 이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때, 현장지식은 사회를 이해하고 바꾸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1 서론

## 1) 연구목적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인간’이 왔다.” (독일어 극작가 막스 프리쉬, Max Frisch)

농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나이대의 여성들이었고, 대부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왔다. 하루 10시간씩, 한 달에 두 번 쉬고 일을 하고, 대부분 주거환경도 좋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다. 지속적으로 손이 가렵거나, 머리가 아픈데 아마 농약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다. 깃잎을 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서 무릎, 어깨, 허리가 아픈데 파스를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5°C가 넘는 무더운 여름 날, 비닐하우스 안에서 깃잎이나 상추를 하루 종일 따고 어지럽거나 열이 나면 저녁에 머리에 파스를 붙여 열을 식히는 것이 이들이 하는 나름의 응급처치였다. 방광염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에 가고 싶지만 어느 병원에 가야할 지 몰라서 같이 가자고 부탁해왔다. 어떤 여성들은 피임약이 필요했고, 어떤 여성들은 생리통이 심해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사고 싶다며 함께 약국에 가자고 부탁했다.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과에 가고 싶다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미등록노동자들은 병원에 가고 싶지만 불법체류상태이기 때문에 적발되어 추방당할까봐 아파도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픈 것은 아니지만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맞추고 싶은 노동자도 있었다. 사업주로부터 맞거나 거의 매일 폭언을 들어도 항의할 수가 없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2022년에는 88,012명, 2023년에는 약 10만 명이 입국했으며, 2024년에는 78,025명이 입국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4년 10개월 머물 수 있고, 한 번 더 입국기회가 주어져서

4년 10개월을 머물면 최장 9년 8개월을 한국에 머물 수 있다. 거의 10년을 한국에서 일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들이 갖는 권리는 미비하다. 반면에 강제되는 요구조건은 많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출국조치를 당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노동자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떠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며, 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9~10시간 일을 하고 한 달 28.5일을 일한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농업노동자는 “근로시간과 휴식·휴일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외 근로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농업노동자에게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점심시간 1시간 쉬고, 하루에 9~10시간 일하고, 한 달에 두 번 쉰다. 농번기 때에는 하루 12~13시간 일을 해야 한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더불어, 농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규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특히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조건, 근로환경, 주거환경이 취약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주거환경과 연관된 건강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여성노동자는 20~30대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상 결혼, 임신 혹은 임신중절, 출산 및 양육의 시기와 맞물린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들 대부분 약혼,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한다. 이와 관련된 재생산 권리 및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 2) 연구 방법: 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

본 연구의 참여관찰과 인터뷰는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이주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났고, 직접 사업주와 인터뷰를 하였다. 충북 충주, 충남 논산 및 당진을 방문하여 이주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경남 밀양에 두 번 방문하여, 6월에는 10일 동안 머물렀고, 8월에는 4일 동안 머물면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들을 만나서 일상생활을 관찰하였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올 여름 가장 더웠던 8월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깻잎밭과 부추밭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이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이주여성노동자였고, 모두 캄보디아 출신이었다. 캄보디아로 한 이유는 농축산업 특화국 중 하나이며, 농축산분야의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 입국한지 6개월 정도 된 노동자부터 길게는 8년 넘게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그중 상당수는 비전문취업비자 기간인 4년 10개월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초과체류하여 미등록 상태로 일을 한 노동자도 있었다. 총 10명의 노동자 중에서 5명이 합법체류, 5명이 불법체류 상태였다. 필자가 캄보디아어를 배웠지만 전문적으로 세세한 내용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캄보디아 통역사에게 인터뷰를 부탁하였다. 인터뷰는 적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사업주는 모두 적어도 4년에서 많게는 15년 넘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왔다. 농번기 때문에 인터뷰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2명의 사업주는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나머지 5명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사업장을 둘러보고, 이들이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이야기를 전해준 사업주들의 의견도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와 관련하여, 이주민 진료소를 통해서 직접 이주민과 만나고 진료를 하고 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 의사 두 명,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변호사 한 명,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관련하여 사건을 맡아온 두 명의 노무사,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실태와 제도에 관해서 문제점을 짚어줄 활동가 두 명을 인터뷰하였다.

# 2

## 농업의 노동환경과 건강권

### 1) 깻잎밭의 온도, 습도 및 노동자의 체온 측정

2023년 8월 5일은 최저온도가 25.1°C, 최고기온은 37.8°C이며, 체감온도는 36.5°C였고, 평균상대습도는 66.5%로 올 여름 들어서 최고 무더운 날이었다. 짬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지만, 밭에서는 여전히 이주농업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의 온도와 습도는 어떠한지 측정해 보았다. 노동자들에게 온습도계를 상의의 가슴팍에 달려 있는 주머니에 넣고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연구자가 깻잎밭에 가서 매시간마다 이주노동자가 소지한 온습도계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난 뒤, 노동자들에게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작업을 하길 부탁했다. 체온도 같이 측정했다. 깻잎밭 노동자의 온도는 오전 5시 30분에 24.8°C를 시작으로 오후 12시에는 34.5°C로 치솟았으며, 습도 또한 78~99%로 측정되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체온도 약간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시부터 16시까지는 식사를 하고 숙소에서 에어컨을 켜고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난 뒤, 다시 깻잎밭 작업을 하면서 18시에는 33°C까지 올라갔으며 습도 또한 서서히 증가하여 84%까지 기록했다.

### 2) 온열질환의 위험성

대부분 하루 종일 덥고 습한 작업장에서 땀을 9시간 이상 흘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들은

일사병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별한 약을 먹기보다는 대부분 두통약이나 진통제를 먹거나 아니면 열을 식힌다는 의미로 머리에 파스를 붙이기도 하였다. 니몰(가명, 20대 여성) 씨의 경우도 무더운 여름에 갓밭에서 일을 하다가 덥거나 어지러우면 집에 와서 이마에 파스를 붙이면 열이 좀 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띠어리(가명, 20대 여성) 씨도 비닐하우스 안 상추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땀으로 옷이 흥건히 젖어있었다. 띠어리 씨도 열을 식히기 위해서 파스를 이마에 붙였다.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농업의 근로환경 위험요인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았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에 실시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을 비교하여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았다.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살펴보면,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의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일반취업자가 13.8%에 비해 농업취업자는 42.0%로 나타났다.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에 일반취업자가 5.8%에 비해 농업노동자는 10.3%로 높았다. 이러한 업무 관련 ‘위험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일반취업자는 69.0%였다면 농업취업자는 29.2%로 현저히 낮았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농업의 5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여전히 아니라는 점에 있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이 되지만, 농림어업 및 축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었다. 그렇지만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농업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서 농업의 재해율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 산업 재해율은 0.54%이며, 이중 농업 재해율은 0.78%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그 중에서 농업의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1.22%에 달해 사실 5인 미만 농업 사업장 산재보험 의무대상자도 아니어서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이진우 의사도 “산재는 1인 이상이 다 돼요. 그런데 농업 5인 미만만 안되는 거예요”라고 이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2023년 2월 3일부터는 5인 미만 농업 사업장도 산재보험이나 혹은 민간보험으로 농협에서 담당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농업인안전보험료는 연간 10만원이며 그 중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산재보험료는 연간 50만원 정도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러한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일단 마련된 셈이다.

# 3

## 사업장 내 문제들

### 1) “사장님이 파이프로 때려서 멍 들었어요.” : 사업주의 폭행

쑤퍼리 씨는 2023년 1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했고 경기도 연천의 한 상추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2023년 6월 19일, 지구인의 정류장에 쑤퍼리 씨가 찾아왔다. 6개월 넘게 일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한국에 입국한 지 4~5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일이 서툴지만 너무나 자주 맞았다고 그는 말했다. 평소에도 일을 잘 못하면 사업주가 주먹을 쥐고 쑤퍼리 씨가 여기에 머리를 갖다 박으라는 폭행이 거의 매일 발생했다. 그렇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이러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동료가 증언을 해주거나 녹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입증하기가 어렵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 홍정민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인 노동자들도 일하다 다치면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은 아예 그런 걸 꿈도 못 꾸는 거죠.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바닥이잖아요. 이들은 누구의 책임인지 아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중략) 근데 농촌이라는 곳이 누가 목격자도 없고 사고가 났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또 누구의 말을 더 믿어주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중략) 어쨌든 이 사건이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 경찰이 조사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설사 누구의 말이 맞는가 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의든 아니든 인정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것도 일하다 다친 거잖아요.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적어도 병원비는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 못한 것에 대해서는 60%도 받고요. 이거는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홍정민 노무사)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아프거나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프면 이는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 탓으로 돌리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농촌의 특성상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와 노동자 이외에는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증명하기가 어렵다. 사업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자의 탓을 돌리며, 사업장을 바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통용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쏘퍼리 씨처럼 그냥 참고 일을 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홍정민 노무사는 사업주가 고의든 아니든 본인이 들고 있던 호스로 쏘퍼리 씨의 허벅지를 멍들게 했으니 이것은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결국 쏘퍼리 씨는 가설 건축물에 살면서 기준 이상의 기숙사비를 낸 것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이 되었다. 사업주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지 멍이 들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 사업장에는 며칠 뒤면 또 다른 캄보디아 노동자가 배치되어 올 예정이었다. 사업장에서 나타난 폭력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 2) 사업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202명 가운데 25명(12.4%)가 한국 농업분야에서 일을 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한국인 고용주·관리자가 6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3국 출신의 동료 노동자(12.0%), 한국인 동료 노동자(8.0%), 응답자와 같은 나라 출신의 동료 노동자(8.0%), 한국인 고용주의 가족이나 친척(4.0%), 한국인 이웃(4.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짜아(가명, 20대 여성) 씨 또한 예전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을 하여 4년 넘게 참고 참다가 사업장에서 도망나왔다. 짜아 씨가 계속 사업장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재입국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동안 일을 계속 한다면 성실근로자로 인정받고 한국에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쳐 나왔다. 본인이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업주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사업장에서 도망쳐나왔기 때문에 찌아 씨는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2020)이 발간한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다시 쓰기”에 따르면 사용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면 이주노동자는 즉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며 위의 그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나 조사 후 성폭행이 확인되지 않은 뒤에는 이주노동자는 출국조치 당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서 ‘혐의없음’이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허위신고를 했거나,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 노동자는 출국조치를 당한다. 성폭력 사건이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수 있는데 입증 실패가 출국조치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업장 변경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다. 이 보고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를 근거로 들어 입증 실패를 출국조치라는 처벌을 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고 성폭력 피해가 입증되지 못하면 이주노동자는 출국조치를 당해서 사실상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

# 4

## 농촌에서 의료 접근권 제약 및 산업재해

### 1)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재정수지 흑자

2019년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7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88만 9891명이었고, 꾸준히 늘어 2021년 123만 7278명, 2022년 134만 3172명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보험료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인의 건강보험료 평균을 일괄 적용했다. 2019년 기준, 월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 보험료는 매년 올라서 2023년 기준 약 14만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들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한 달에 1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에게는 한국인의 평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책정했다. 외국인은 내국인 월소득의 70%를 벌지만, 내국인의 평균의 보험료를 낸다. 적게 벌고 많이 내는 셈이다. 또한, 전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2,320억원, 2019년도에는 3,736억원, 2020년에는 5,875억원, 2021년도에는 5,251억원, 2022년에는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누적 흑자가 2조 2,742억원에 달했다.

## 2) 의료서비스의 접근 제약과 통역의 부재

건강보험료 재정수지 흑자 이면에는 이주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를 한 사업주들은 노동자가 아프면 약을 주거나 약국이나 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렇지만 운이 나쁜 경우, 사업주가 약국이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쓰레이응 씨는 한국에 와서 4년 8개월 동안 일을 했지만 채소를 따면서 손이 간지럽거나 피부가 갈라져도 병원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사업주가 사다 준 약으로 버텨야 했다. 니몰 씨 또한 깎이를 따면서 동상에 걸려도 병원이나 약국에 가보지도 못했고, 사업주가 약도 사다 주지 않았다. 정말 아픈 경우는 병원에 사업주가 데려다주거나 혹은 혼자 택시를 타고 갔다. 병원과 약국을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쉬기 때문에 퇴근 후에 시내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혹은 아프더라도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몰랐다.

의료서비스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어떤 병원을 가야하는지 모른다는 점과 병원에 가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원에 사업주와 같이 가게 되면 사업주를 통해서 통역을 부탁하거나, 대부분 아는 친구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티나 씨도 다리에 흑이 생기고 물집이 터져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통역이 잘 되지 않아서 수술과정과 절차,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매달 1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이주노동자는 이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는 16개국의 출신이지만, 통역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어만 제공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통역서비스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농업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대부분 본국에서 가져온 민간요법의 약들에 의존하거나 사업주가 사다주는 약을 먹으면서 9년 8개월을 버티고 있었다. 보험료는 내지만 병원 문턱이 높아 가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재정흑자를 남기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 5

## 농업의 주거시설과 건강권

농업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다. 사업주는 비닐하우스 안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나 컨테이너집을 제공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1인당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을 내고 살게끔 지침을 만들었다. 이러한 숙소는 사람이 사는 곳이 적합한 곳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취약했다. 여름에 홍수가 나면 물이 들어와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해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는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의 권리'란 무엇일까? 1961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한 제115호 '노동자 주택에 관한 권고'에 따르면 정부는 가능한 한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는 주거 형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또한 사업장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인프라를 사용하며 사람들과 연결되는 주거형태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다.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1조 1항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대해 일반논평을 통해 7개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적으로 보장된 점유의 안정성, ② 주거기반시설 및 제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③ (주거비) 지불가능성, ④ 거주적합성(최저 주거 수준의 확보), ⑤ 접근가능성, ⑥ 적절한 위치, ⑦ 문화적 적절성 등이 담겨 있다. 즉, 주거권이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살 권리로 받아들여야"하며, "주거권은 여타 다른 인권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는 권리이며, 적절한 주거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특히 취약한 집단과 적절하지 않은 주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또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업주의 간섭으로 방해되는 공간이 아니라 사생활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 또한 포함된다.

# 6

## 재생산권, 재생산 건강, 가족을 구성할 권리

### 1) 고용허가제에 없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고용허가제로 온 20~30대 여성들이 생애주기 상 재생산 기간에 해당하지만,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약 9%이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재생산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맞추어 정책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한국에 있는 비전문취업비자 약 216,000명 중에서 남성노동자가 91.1%(190,500명)이고, 여성노동자가 8.9%(약 8,900명)로 성비가 9:1이다. 압도적 절대 다수가 남성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제도에 젠더관점이 부족하다.

고용허가제로 온 비전문취업비자(E-9)의 이주노동자에게는 가족과 동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가족과의 동반이 불가능하다. 고용허가제로 최대 9년 8개월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거의 1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가족을 이루는 방식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와 사업주가 겪는 주요 갈등 중 하나이다. 사업주들은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제도의 악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제도의 악용”인가? 가족결합권은 단순히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 가족결합권은 인종, 성별,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로서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다. 1990년 국제연합(UN) 총회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제1조 제1항에는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즉, 이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차별 없이 가족결합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현재, 한국은 이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헌법이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만 적용범위가 외국인까지 확대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이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17년째 국회서 첩바퀴를 돌며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및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해서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고용조건을 남편과 비슷한 지역이나, 혹은 같은 사업장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임신한 이주노동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임신을 하게 되면 자의든 타의든 일을 그만 두고 본국으로 영구 귀국한다. 다시 한국으로 오지 않고 본국에서 아이를 키운다. 둘째,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본국에 맡기는 경우이다. 임신한 노동자들은 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다시 귀국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비행기를 타고 본국에 가서 아이를 맡기고 귀국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에 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 아이만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이 결합할 수 있는 권리 인정의 부재의 가장 큰 원인이 고용허가제가 ‘정주화 방지’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주화 방지’ 목표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정주화 방지를 목표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가족결합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약 10년 머무르는 동안 가족이 비슷한 지역이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선적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제도의 부재 때문에 임신과 출산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에 책임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설계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법과 헌법상의 권리를 확대 적용하여 가족결합권을 인정하고 사업장 안배 시 고려된다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간의 이러한 사업장 변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7

##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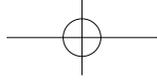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노동권, 주거권 및 건강권을 살펴보았으며 그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여름철 폭염특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작업장에서는 낮에는 충분히 쉬고,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온열질환은 자칫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의 사업장 대부분 이러한 휴식공간 및 휴식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업장 내에서 나타나는 폭력, 폭언,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경찰과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주노동자가 원하면 사업장 변경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은 매달 약 14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에서 약국이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시내까지 나가야 하며 대중교통수단이 많지 않은 농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에는 큰 장벽이 있다. 이처럼 의료보험료를 내지만 보험급여를 적게 받아서 2022년에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의 재정수지가 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한 16개 언어로 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아팠을 경우 어떤 병원에 갈 수 있는지, 병원에 가서 어떤 진찰을 받는지,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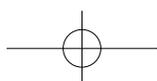
넷째,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와 높은 숙소비용은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허가제의 숙소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현재 1인당 20~40만원의 비싼 주거비용을 내면서 살고 있지만, 특히나 가설건축물은 홍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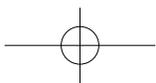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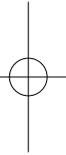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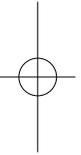


혹서 및 혹한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공간이다. 주거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주거시설이 이주노동자가 온전히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간섭과 통제가 미치는 곳이다. 따라서 적절한 주거의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의 개념이 이주노동자의 주거공간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권리는 ① 법적으로 보장된 점유의 안정성, ② 주거기반시설 및 제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③ (주거비) 지불가능성, ④ 거주적합성(최저 주거 수준의 확보), ⑤ 접근가능성, ⑥ 적절한 위치, ⑦ 문화적 적절성 등이 담겨 있다. 주거 공간의 제공이라는 소극적이고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안전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주 여성노동자들 연령대가 20~30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애주기와 피임, 임신 혹은 임신중절,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재생산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이 피임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약을 구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일,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되었지만,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마련되지 않아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여성노동자 개별적으로 병원을 알아보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접근을 높이고, 이주여성들이 재생산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임신한 여성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보장받으며, 이주노동자도 법적으로는 이런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와 노동자의 큰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이주노동자의 임신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노동력을 손해보며 문제 행동이라고 간주하여 해고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는 해고를 당해 비자 연장이 안되거나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전긍긍하며 개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하며, 아이를 낳아도 영유아 관련 사회복지체제로 들어가지 못한다. 즉,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본국으로 가거나, 아이를 본국에 맡기고 노동자는 여기에서 일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고용허가제로 온 비전문취업비자(E-9)의 이주노동자에게는 가족과 동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가족과의 동반이 불가능하여 가족결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가족결합권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6조와 국제연합(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3조는 가족이 하나의 사회적 구성단위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가족 결합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family unity)를 인정한다. 이러한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재난 이 후를 거닐기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일상 속 회복 과정을 중심으로

김지오(2024)

원문 읽기



---

연구자는 기존 학위논문에서 보기 드문 방식으로, ‘함께 걷기’라는 방법론을 통해 생존자의 문제의식을 세밀하게 탐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단순히 분석 대상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실제로 생존자와 함께 현장을 거닐며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착하고 있다. 이는 재난을 단지 수치와 제도적 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몸과 경험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한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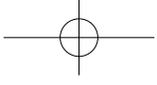
특히, 희생자·유가족 중심의 프레임을 넘어 생존자의 일상 회복 과정을 탐구하며 재난 피해의 새로운 층위를 드러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생존자의 일상을 탐구하면서도 논의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의미의 층위로 확장되어 연구 의제로 제시하였다. 이태원 참사 관련 단체 활동과 현장 경험을 긴밀히 연결한 ‘현장 기반 학위논문’의 전형이며, 재난과 참사를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실천성과 방법론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회복’을 종결적 상태가 아닌 잠정적 균형의 연속으로 개념화하며, 생존자의 행위자성을 좀 더 강조하며 사회적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크다. 이는 재난연구에 있어 향후 정책적 논의와 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전환을 마련해주며, 재난 이후 사회가 생존자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회복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조명한 점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정책적 제언과 긴밀히 결합되길 기대한다.

# 1

## 연구 계기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은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학위논문 주제를 고민하며 대학원 연구실에 앉아 있던 2023년 여름 즈음, 동료들과 대화를 하면 유독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전해 들었습니다. 혹은 제 귀가 그 소식에만 유독 감도 높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시민적 공감의 부정에 당혹스러움이나 애석함을 감추지 못하는 동료 연구자나 활동가의 반응이 그 중에서도 제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감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민적 덕목으로 떠오른 시대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재난이 발생하였을 당시 큰 감정적 동요 없이 눈을 뜨고, 과제를 하고, 밥을 먹으며 연말을 맞이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저조차도 타인의 고통에 항상 감응하는 것만은 아닌 상황에서 팽배해 있는 무감함을 소시민적 소극성이나 신자유주의적 허위의식으로 거리를 두고 비판하는 것이 타인을 분석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로서 진실된 행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학살, 재난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고 보도되는 시대에 감각 중추의 마비는 어쩌면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 것도 한 몫 하였지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마땅히 깨어나서 아파해야 한다고 규탄하기보다는 고통의 감염과 도덕적 공동체의 형성이 늘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했을 때, 기대했던 사회적 반응을 얻지 못한 피해자들의 삶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이태원 참사를 이해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연구에서 20~30대의 생존자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식이자 연구 참여자입니다. 개방되어 있는 도시 공간에서 밀집한 인파에 의하여 발생한 참사이니만큼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 숫자 이상의 많은 부상자와 구조 참여자, 목격자 등을 낳은 사건입니다. 특히, 펍과 클럽, 외국 음식 식당이 많은 이태원의 특성상 이들 중 대다수는 20~30대 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에서 대규모의 군중 압력과 죽음이 발생한 시점부터 언론으로부터 생존자로 불리며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존재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참사가 초래할 트라우마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신보건학계에서도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존자들은 매우 드물게만 공적 자리에 등장하였는데, 저는 이들의 참사 이후가 궁금했습니다. 큰 사건에 휘말렸음에도 참사의 생존자로 바깥에 드러나지 않은 채 이어가는 삶은 어떤 형태인지, 그 삶 속에서 참사의 의미는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고 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 2

## 왜 회복인가, 회복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회복을 주된 주제로 설정하고 연구에 도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심층면담 속에서 연구 참여자와 저의 이야기는 곧잘 회복이나 치유라는 문제를 향해 흘렀습니다. 연구 참여자들 중 많은 이가 참사 이후의 회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했던 과제이자 목표였고, 자신이 그것을 일부 성취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질문이 오가기도 전에 “이제 저는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라고 운을 떼며 첫 면담을 시작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이야기를 투명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심층면담이라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서로를 만난 탓에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을 저에게 꺼내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이태원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이고 사법적인 정의가 실행되고 있지 못한 때에 20~30대의 생존자들이 나름대로 일상을 잘 꾸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주장하기가 부담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몸 담은 문화인류학은 연구 참여자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학문의 목표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대신에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주고 받는 상호작용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맥락화하여 그때 당시의 그 만남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단일한 지식을 만들어내라고 주문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이 여기와 저기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느 한쪽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렇게 다른 말을 이끌어 내는 조건과 배경을 연구에 잘 녹여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을 법한, 그렇지만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닌 20대 여성 연구자인 제게 연구 참여자들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취재 카메라나 자신의 부모님, 또는 친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종류일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주제가 제게 주어진 것을 이러한 고유성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을 때 보이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주되게는 회복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즉 참사의 기억을 없던 일처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놓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태원을 벗어난

이후에도 다양한 현장에서 참사의 흔적을 마주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의료(3장), 온라인(4장), 이태원동(5장) 세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고투를 정리하고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먼저 3장에서는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태원 참사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장 확장적이고 빠르게 피해자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 체계가 마련된 재난으로서 분기점을 그립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이러한 신속성이 반드시 개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 분야에 집중된 자원은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어려움을 치료하는 데에는 쓰이지 못하였고, 많은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했던 직장인 피해자의 병가 지원 등의 체계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진료실이나 심리 상담실 등의 의료 현장은 또 다른 사회적 관계가 창발하는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을 진찰했던 의사의 협력과 선의에 의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아 거부 당했던 휴직에 성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심리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자신이 겪은 사회적 고립을 깨고 참사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이태원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동에 주목하여 이 논문에서는 치료의 목적이 특정한 증상의 완치라는 목표로 주어질 때, 회복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 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생존자들이 겪었던 다양한 마주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온라인의 이용을 하나의 세대적 경험으로 주목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기별로 도입된 디지털 기술에 따라 온라인이 추동하는 사회적 관계의 형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30대의 생존자의 경우, 대체로 소셜 미디어나 앱 기반의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 웃음의 주목경제와 트롤링에 매우 익숙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자에게 있어서도 이태원 참사의 발생 경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온라인 공간은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데, 군중압력에 의한 대규모의 죽음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자에서 목격자, 목격자에서 구조자로 빠르게 전환되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었을 뿐 아니라 시각 정보가 극단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생존자 중 많은 사람들은 현장을 빠져 나온 이후, 자신이 있던 장소가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찍혀 올라온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상황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힐난하는 댓글 또한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대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연구 참여자는 직접 스스로를 생존자라고 밝히며 온라인 상에서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타자화에 맞서서 자신 또한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 특유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내보이는 동질감의 확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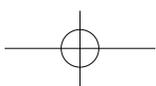


온라인 공간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흔히 ‘2차 가해자’로 불리는 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피해자들 또한 전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행위성임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내에서 횡행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발화에 담긴 심층적 의미만큼이나 온라인의 기술적 환경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동(5장)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참사의 기억을 소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동은 연구 참여자가 각자의 속도로 애도를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 흔적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참사의 피해자였던 연구 참여자들이 다시 행락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태원동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이 참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보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략히 요약하기보다는 여러분께 연구 참여자들을 글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보여준 회복 과정에서 즐거움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재미에 대한 추구는 참사로 인한 충격을 빠르게 봉합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생존자 나름의 재치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고, 이들에게 참사의 기억을 소화하고 재배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방식의 추모와 애도를 상상하고 학습하여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 온라인 공간에서 먼저 논쟁을 주도하는 것, 사회적 고립을 깨고 타인에게로 연결되기를 시도하는 것, 그리고 재난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할로윈 파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을 통해 2022년 10월 29일 중단되었던 즐거움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획득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즐거움을 추구하며 얻어내는 회복은 생존자가 다시 참사의 기억에 가깝게 다가감으로써 재난이 자신에게 끼친 위해와 그 여파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화하고, 이를 타인도 함께 감지할 수 있도록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핵심을 둡니다.

저는 이러한 형태의 실천과 경험이 회복 불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정리하였습니다. 항생제의 획기적 발명 이후에도 결핵의 종식이 선언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바라트 재림 벤카트는 “치유할 수 없음(incurable)은 치유 가능함(curable)의 단순한 거울쌍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치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치유할 수 없음에 대한 상상 또한 바뀐다(Venkat, 2021, 11).”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삭제할 수 없는 이태원 참사의 기억과 부상을 안고 재난 이후의 도시를 살아가야 하는 생존자의 일상은 낮다는 것이 이전 상태로의 회귀나 기적적인 변화로만 의미화될 때에는 회복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회복이 종결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변형된 지속 안에서 새로운 균형과 상태를 찾아가는 일(위의책, 165-208)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많은 회복의 조건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요구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3

## 재난·참사와 안전에 관하여

논문을 쓰고 난 이후 많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발표를 하거나 지면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기곤 했습니다. 마지막 썸에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질문은 이태원 참사와 관하여 사회가 꼭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신진 연구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질문이라고 푸념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다보니 딱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난·참사 운동의 구호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 그 중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질문과 요구는 매우 구체적으로 채워지는 한편으로, 안전사회의 내용은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는 인상을 종종 받습니다. 저는 그 안전이 공학적인 안전을 뛰어넘는 차원의, 현 상태의 사회와 비판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상상해 볼 수 있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추구라는 전주희(2023)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형태의 안전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 그리고 행정 상의 공백에 대한 국가 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의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생존자들에게서 배운 점이 있다면, 이들이 재난 이후에 보낸 시간은 생물학적 생명 보전을 넘어 고통스러운 동시에 새로운 만남이나 배움으로 가득한 사회적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어떠한 위해도 없는 상태를 안전으로 지향한다면 그러한 사회적 삶의 풍부함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 위해를 감수하고 마주하며 또 때로는 다치지만 그럼에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희생자와 유족만큼이나 인근의 상인, 신체 및 정신적 부상자, 그리고 구조자 등 또한 중요한 참사의 피해자로 떠오른 것이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 참사와 갖는 구별점이라고 한다면 유족을 포함하여 이들의 풍부한 사회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상상 또한 함께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 4

## 돌이켜보며

저는 문화인류학이 현장에서 출발한 질문과 방법론을 지식생산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는 사회과학이라는 점이 좋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과의 동료·선생님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얻은 가장 귀중한 가르침은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는 낯선 것을 마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단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것 뿐 아니라, 연구자의 시점과 몸을 이동시켜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던 것을 다르게 보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권리운동이 바로 익숙하지만 낯선 문제였습니다. 네티페미니즘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열기 속에서 2017년 대학에 처음 입학한 저는 소위 말하는 대학물을 먹으면 누구나 좌파 귀어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줄 알았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그랬듯이 '캠퍼스와 활동판'을 간헐적으로 오갔고, 그 속에서 한국 내의 다양한 사회 운동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여러 언어와 의제들을 만나며 한국이 얼마나 큰 정치적 변동을 겪어온 사회인지를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로부터 세월호 세대라는 지명을 받기도 하였지만,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기틀이 마련되는 데까지 필요했던 힘이나 경로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태원 참사를 만났습니다.

논문의 제목에 '재난 이후를 거닐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만큼이나 저 또한 문헌과 면담, 참여관찰을 통해 이태원 참사라는 재난을 거닐면서 한국 사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참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적 역사의 특수성을 규명해 보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서사적 완결성이나 흠결 없음을 좋은 논문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 논문은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러 이야기에 짓눌린 탓에 비문이나 오타자, 난삽하게 쓰인 부분이 군데군데 보여서 제 논문을 다시 읽어보려다가 이내 표지를 덮기도 여러 번이었고 세상에 내어 보이기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에 선정되었다고 하였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공모를 한 건 저였지만요. 어쩔 수 없이 좋은 연구의 기준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좋은 연구를 가르는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제 연구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지점이 있다면 독방에 혼자 앉아 쓴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귀찮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대는 저를 관대하게 받아주었던 연구 참여자들의 호의와 면담을 끝마칠 때마다 침울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까다로운 조언을 주신 여러 선생님의 굵어살핌, 그리고 저조차도 저의 고민이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자조하고 있을 때 옆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고 새로운 의미와 질문을 발견해 주었던 활동가 및 연구자 동료들의 참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참여가 모두 담겨 새로운 현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이 논문이 좋은 논문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마주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 작업을 골몰해 보라는 격려의 의미로 제 논문을 선정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더욱 정진해 보겠습니다.

### 참고문헌

- Venkat, Bharat Jayram, 2021, *At the limits of cur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전주희, 2023, “10·29 이태원 국가주의적 재난서사와 대항적 재난서사”, 『문화과학』 113: 151-171.

#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동료가족지원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한지연·심경순(2023)

원문 읽기



---

이 연구는 부산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동료가족지원 참여경험에 관한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조현병 등에 대한 묘사는 우리의 편견을 더욱 강화시켜왔다. 그들은 두려움, 혐오, 공포의 대상이 돼 버렸다. 당사자와 그 가족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단절당하는 방식으로 삶을 재구성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자는 묻는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가?

연구자는 현장에서 10년간 고군분투하며 정신재활시설에서 가족 모임을 인큐베이팅 해 왔다. 그 경험을 토대로 가족들의 고통과 고립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들을 돌봄의 핵심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들의 경험은 동료가족이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출발이 되었다. 남들의 시선에 두려워 숨어 지낸 시간들, 온통 뒤엉켜버린 그들의 삶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소거되었던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돌봄의 대상이 돌봄의 주체로 설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누가 그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겠는가? 우리가 정말 ‘함께 산다’라는 방향성을 갖는다면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호명하고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동료가족지원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그 실천적 의미가 크다.

이 연구를 보면서 현장의 실천가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몸부림이 느껴졌다. 그 몸부림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누적된 고뇌로 보였다. 아! 이게 현장 연구의 전형이 아닐까? 끝으로, 동료가족으로서 연구자와 그 가족들의 분투를 진심으로 응원 드린다.

# 1

## 문제의식

### 1) 정신장애인가족이 겪는 어려움

신장애인가족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자로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를 말한다. 정신장애는 질병의 특성상 증상과 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재발로 인한 증상의 악순환, 만성화되는 경향이 타 장애에 비해 높다. 양옥경(1995)과 서미경(1999)은 정신장애인의 예측하기 힘든 증상과 행동, 행동적 증상이 나타날 때 대처하는 방법의 어려움, 독립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 염려 등이 가족들에게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족들이 겪는 보호부담을 주관적 보호부담과 객관적 보호부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관적 보호부담은 끝없이 계속되는 긴장,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립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한 우울, 절망, 걱정, 염려, 슬픔, 화, 원망 등의 심리적 증상을 말한다. 또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낙인 역시 가족들에게 죄책감과 심리적 위축감으로 작용한다. 객관적 보호부담은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행동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과 상대적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되는 상황 등이 생긴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소원해짐에 따른 가족의 여가활동 및 사회생활의 위축, 평생 지속되는 보살핌으로 경제적,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심리적·정서적·경제적·사회적 부담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다.

이러한 정신장애인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신건강증진기관(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가족교육과 자조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처럼 가족의 주도하에 정신장애인가족의 일상생활과 어려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가족의 역량과 옹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교육과 자조모임의

형태보다는 전문가 중심에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필요한 지지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가족의 역량과 활동에 기반한 교육이 만들어져야 되고 병과 증상에만 초점을 둔 교육에서 벗어나 가족의 삶의 회복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들이 전문가와 함께 인식개선 및 옹호활동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 가족의 삶의 회복, 교육, 지지체계를 위한 가족자조집단 인큐베이팅을 통해 가족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 2) 정신장애인 가족자조집단 '가디언스클럽 인큐베이팅' 프로세스

부산지역에서 지역사회정신건강유관기관(정신재활시설 4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과의 연대를 통해 가족자조집단을 2014년부터 만들었고 가족자조집단 내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 등을 통해 동료가족지원가(Peer Family Support) 리더 10명을 2023년에 배출하였다.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조력자 '가디언스클럽'의 인큐베이팅 과정(그림1, 표1)은 정신장애인 가족과 전문가가 함께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들은 권익옹호활동(강연, 기고문 등)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힘썼고 유관기관에서는 증거기반실천(단행본 1권, 논문 4편)을 통해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 가디언스클럽 (가족연대) 인큐베이팅



※ 가디언스클럽은 부산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5개기관)가 함께 연대하는 정신장애 가족자조모임입니다.



표1\_2014년~현재까지 가디언스클럽® 인큐베이팅 프로세스

목표	정신장애인 가족의 회복력 향상	정신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	정신장애인 가족의 리더십 향상	정신장애인 가족의 자생력 강화	정신장애인 가족의 공익활동
일시	2014-2018년	2019-2020년	2021-2022년	2023년	2024년~현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회복교육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8회기</li> <li>의사소통교육 (ORPT) 8회기</li> <li>1:1 가족상담</li> <li>가족 야유회 및 워크샵</li> <li>정신건강강좌 및 자조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회복교육 8회기</li> <li>북클럽 및 글쓰기교육 8회기</li> <li>1:1스피칭 코칭</li> <li>문화예술활동 8회기</li> <li>인생 잡지출간 및 그림 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회복교육 6회기</li> <li>가족리더십 교육 (행복한 전문가 - 이야기 치료) 8회기</li> <li>가디언스 워크샵 (미션빌딩)</li> <li>당사자 및 가족 인권양성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회복교육 (전문가 &amp; 가족지원가가 함께하는) 4회기</li> <li>미디어 리터러시 8회기</li> <li>가족지원가 실습교육 (40h)</li> <li>정책간담회 및 세미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회복교육 (전문가 &amp; 가족지원가가 함께하는) 4회기</li> <li>가디언스 인식개선 활동 12회</li> <li>정책 간담회 (런케이선)</li> </ul>
성과	가족의 보호부담 감소	가족의 위기지향 향상	가디언스 미션수립 (가디언스 8복)	가족지원가 10명 배출	전문가와 가족의 파트너십 강화

⑬ 가디언스클럽은 가디언스(수호자, 보호자)와 클럽(동아리, 팀)의 합성어로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자조집단을 말한다. 가디언스클럽은 '우리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조력자'라는 미션을 토대로 가족회복지원, 교육 및 연대활동, 인식개선 및 권익옹호활동을 가족(100명)과 전문가(정신재활시설 실무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b>연대</b>	송국클럽하우스 아미 정신건강센터 컴넷하우스 부산소테리아 하우스	정신재활시설 4개소 + 해운대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한국정신재활 시설협회와 함께 가족 인권 교육 실시	장애인 활동지원가 협회, 부산인권센터, 지역신문사	경남지역 유관기관으로 확대 중
<b>예산</b>	4,000만원	2,2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b>자원</b>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 보급사업	GKL 사회공헌재단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대기관 및 가디언스 자체예산
<b>w'er 역할</b>	▲ <b>프로그램 기획, 자원동원을 통한 예산 확보</b> /지원 및 인프라 제공	▲ 인문학을 통한 내적 성장 도모, 인적 자원 확보 /멘토링 및 컨설팅	▲ 시의원, 조직 컨설턴트, 디자이너 /네트워킹 기회제공	▲ 가족이 리더로 설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집중 훈련 /성장촉진	▲ 주체적 활동 지원

# 2

## 주요내용

### 1) 연구방법

#### ① 연구설계

질적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특히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였다. 사례연구 접근은 참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그 의미구조를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 ② 연구대상

부산지역 정신재활시설 가족연대모임에 참여 중이며 동료가족지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족 8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은 참여 기간, 역할 수준, 지원 기관 소속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동료가족지원활동에 지속적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 ③ 자료수집

개별 심층면접(2022.9~12)을 주된 자료 수집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면접 질문은 참여동기, 경험의 변화, 어려움 및 도전, 의미 및 정체성 변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귀납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미단위→하위범주→상위범주 체계로 구분하였다.

#### ④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Creswell(2013)의 사례연구 절차를 적용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병행하였다.

#### ⑤ 윤리적 고려

자발적 참여, 익명성 보장, 녹취자료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랐다.

## 2) 연구결과

### ① 참여경험의 주요주제

분석결과 총 4개의 상위주제, 12개의 하위주제, 30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동료가족지원 참여과정는 가족들이 단순한 도움 제공 활동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관점과 정체성 변화를 촉진하는 경험이었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네 가지 상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② 상위주제별 핵심 내용

- ▶ 20년 만의 휴식
- ▶ 가족돌봄과 관련된 긴장감, 부담감에서 한 걸음 물러 설 기회를 경험
- ▶ 오랜 기간 감춰 온 가족들의 고통을 나누며 감정 분출, 공감적 경청,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받는 공간을 경험
- ▶ “마음이 풀리는 시간”, “마음의 친정”, “숨 쉴 공간”으로 표현 됨.
- ▶ 고통의 쓸모를 발견
- ▶ 돌봄과 고통의 경험 자체가 무가치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의 가능성으로 재해석
- ▶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타 가족과의 상호 소통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지지자로 변모

- ▶ 고통 속에서 함축된 깨달음과 지혜를 발견 함.
- ▶ 부모도 자란다
- ▶ 돌보는 존재(보호자로서의 책임감·돌봄역할중심)에서 성장하는 존재(성장하는 부모/자아실현·자기돌봄중심)로 인식 전환
- ▶ 자녀와의 관계에 건강한 경계 설정의 필요성 인식
- ▶ 동료가족 간의 학습과 상호 격려를 통해 내적 힘 강화
- ▶ 응원하는 삶
- ▶ 본인을 넘어 타인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삶의 태도가 자리 잡음
- ▶ 수혜자에서 조력자·활동가로의 정체성 확장 및 멘토 역할 수행
- ▶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라는 사회적 자각과 동반자로서의 정체성 형성

### 3) 논의 및 해석

정신장애인 가족의 ‘회복 주체화’ :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가족자조집단을 통해 가족이 가족을 이끄는 동료가족지원가로서의 가족의 역할이 전환 되었고 전문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 ▶ 고통의 재의미화

정신장애인 가족의 고통이 오히려 경험을 가진 지식(Experiential Knowledge)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가족들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 경험공유의 사회적 가치

정신장애인 가족의 경험이 후배가족에게 전달되며, 회복의 순환 구조를 가족들이 이끌어 내며 가족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적 역할의 기회가 되었다.

#### ▶ 정책적 함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유관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동료가족지원가 제도화 필요성, 가족의 인식개선 활동을 지원할 예산과 교육체계 마련의 필요성, 동료가족지원 활동이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를 위한 가족지원을 위한 지지체계구축으로 활용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3

## 학문적·사회적 반응과 활용

### 1) 학문적·사회적 반응

구분	내용
학문적 의의	동료가족지원가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질적으로 구조화함. 가족 회복력·임파워먼트 연구의 이론적 기반 제공
실천적 의의	가족상담, 조기개입, 인식개선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실천 모델 제시함.
정책적 의의	'가족지원가' 제도화 및 가족경험 기반 정신건강서비스 개발의 근거 제공함.

본 연구는 첫째, 정신장애 관련 연구 분야에서 가족 중심의 동료지원 경험을 질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참여가족 중심의 내적 변화와 정체성 재구성 과정을 구조화한 것은 후속 연구의 개념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응원하는 삶'과 같이 참여자 스스로 지원자로 전환되는 변화는 동료지원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의 인용 횟수가 많지 않고 발표된 지점이 최근이어서 학술적 확산(KCI 인용 2회)은 초기 단계이나 향후 관련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거라 기대한다. 둘째, 동료가족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발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참여기반 강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가족지지체계 구축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족교육이 단순 정보 및 교육 중심을 넘어 가족의 정서적 공감과 회복중심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 가족의 역량 및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실천현장에서 동료가족지원 모델을

확대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마련의 증거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경험은 추후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위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 공공 담론 속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인식전환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 변화요인이 될 수 있다.

## 2) 증거기반실천 활용자료

- 한지연·최송식(2016). 정신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돌봄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4(2). pp.5-34.
- 한지연·박은주(2020). 정신장애인 가족의 자조집단 참여경험 연구:정신재활시설 가족자조집단(가디언스클럽)사례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Vol. 48(2). pp.92-121.
- 한지연·심경순(2023).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동료가족지원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9(2). pp.85-127.
- 한지연·김민(2024). 가족교육프로그램이 정신장애자녀를 둔 주 돌봄제공자의 보호부담과 위기지향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10(6). pp.751-763.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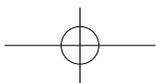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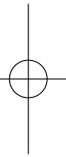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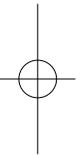
## 성찰과 후기

이 연구는 정신장애인 가족의 동료가족지원 참여가 단순한 지원 수단을 넘어 가족 구성원 자신의 내적 변화와 정체성 확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년 만의 휴식”, “고통의 쓸모”, “부모도 자란다”, “응원하는 삶” 같은 가족의 삶의 변화는 가족지원에 있어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동료가족지원이 ‘도와주는 활동’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전달만이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자기성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참여자과 동반자 관계’라는 윤리적 철학은 연구자가 보다 연구의 경계와 민감성을 높여야 할 연구자의 성찰 지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료분석단계에서 참여자의 언어를 최대한 보전하려 노력하였으나 해석적 중립성과 연구자의 주관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기에 연구 시, 피드백 절차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변화나 어려움을 참여자가 뒤늦게 제언하는 경우도 있어 추후 현장 피드백 또는 후속 심층 대화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기대하는 바는 지역사회(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료가족지원 모델이 구축되고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에 본 연구가 활용되었으면 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과 조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연구(종단적 추적, 비교 사례연구, 참여 프로그램 개입 효과 평가 등)가 현장에서 나오길 기대한다. 10년간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활동(교육, 자조집단, 동료가족지원 등)은 가족과 전문가의 파트너십이 함께 이루어 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가족, 전문가, 지역사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동료가족지원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자조집단(가디언스클럽)이 향후 부산지역 정신재활시설 16개소의 초발가족을 위한 기초교육 및 지지체계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세워지길 기대한다(5개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가동으로 현재까지 가디언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에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관련 단체, 시에도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적극적인 행동(액션)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기획 시, 정신장애인 가족의 마음상태(회복정도)를 충분히 고려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타 장애가족과 달리 정신장애인 가족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수치심의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위치(立)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가정방문(동료가족지원가와 함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등을 통해 가족의 저항감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 집단참여의 지속성과 집단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독립적이고 개별화 된 존재이자 각각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자녀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자녀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인 삶을 구분 짓는 것만으로도 자기옹호가 될 수 있기에 가족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가족교육과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족의 회복력 증진에 초점을 둔 가족지지체계를 지원할 때, 가족의 역량과 리더십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과 전문가의 파트너십이 함께 이루어진 자생력 있는 단체가 더 많이 세워지길 바란다.



# 귀어 청소년이 만드는 역동

## 대안학교에서 경험한 역압과 당사자 실천

유아름(2025)

원문 읽기



---

한국 사회의 퀴어 청소년을 당사자로 세우고, 그들의 구체적 경험을 생생히 기록한 현장 기반 연구이다.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퀴어 청소년이 학교라는 생활공간 속에서 겪는 미세 폭력, 커밍아웃의 경험, 교내 관계에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연구자는 퀴어 청소년 15명의 심층 인터뷰와 함께 이들이 속한 교내 모임·연대 활동, 비퀴어 구성원 5명과의 집단 면접까지 포함하여 관계적 맥락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고, 그들의 실천과 역동이 학교 문화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대안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을 연구 무대로 삼아 다양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면들을 학문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특히, 퀴어 청소년이 공동체 내 규범에서 누락되고, 미세 폭력과 차별을 겪는 동시에 커밍아웃, 연대 활동을 통해 관계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포착하며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별, 나이,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위치(학생, 동료, 활동가 등)가 서로 얽히며 각기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퀴어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인 집단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와 조건 속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퀴어 청소년이 새로운 공동체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 연구의 관점이 성소수자 연구 뿐만 아니라 청소년 연구, 젠더 연구, 교육 정책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를 희망한다. 향후 이 연구는 대안학교라는 특정 공간을 넘어, 다른 교육 현장과 사회적 맥락에서 퀴어 청소년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탐구하는 후속연구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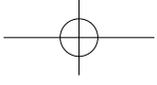
# 1

## 문제의식 및 연구 목적

2024년 4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종교, 학부모 단체들이 “동성애와 양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폐지 요청을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여성신문, 2024.4.26). 이날은 퀴어 활동가 ‘육우당’이 퀴어(Queer)를 혐오하는 사회를 비판하며 세상을 떠난 지 2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본인의 정체성을 알게 된 뒤 학교와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마주한 한 당사자가 퀴어 혐오가 사라지길 바라며 떠난지 21년, 여전히 한국 사회의 변화는 더디게 가고 있다.

연구자는 9년간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지냈다. 학교에 나를 비롯한 퀴어가 존재했지만 편안하게 드러낼 수는 없는 분위기였다. 교사로 근무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커밍아웃한 후, 교내 퀴어 청소년들과 연결되었다. 소수자가 지워지는 학교에서 퀴어 당사자를 만나 느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은 그 자체로 안정감을 줬다. 대안학교 내의 퀴어 당사자들은 학교의 불평등한 구조와 혐오 담긴 문화를 함께 욕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서 혐오만 있는 줄 알았던 학교에서 퀴어를 지지하는 엘라이(Ally)와 연결되기도 했다. 저항과 실천으로 학교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마주하며 학교는 퀴어가 지워지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운동의 장이 되었다.

대안학교에서 함께 살아간 퀴어 구성원과 교육 사례 및 실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북한 이탈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등 소수자와 약자의 삶을 다룬 연구를 통해 대안학교가 소수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공존하는 장인 대안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자유롭게 운영되며 상대적으로 제도권 학교에 비해 구성원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 속에서 퀴어는 존재하지만 비가시화된다. 다른 소수자 정체성이 공존하는 장에서 미세 폭력을 경험하는 퀴어는 대안학교에서 퀴어의 공존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 그 장에서 퀴어 청소년은 다양한 운동 전략으로 역동적인 저항과 실천을 만들어낸다.



대안학교가 청소년과 퀴어 당사자의 역동적인 저항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인 만큼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퀴어 청소년이 겪는 학교는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학교 문화에 따라 겪는 일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로 인해 퀴어 청소년의 정체화 과정과 자긍, 실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제도권 교육을 중심으로 한 퀴어 청소년의 삶과 본 연구에서 대안학교 속 퀴어 청소년의 경험을 분석하여 퀴어 청소년의 다채로운 삶으로 학교와 사회의 고정된 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려 한다.

# 2

## 주요 내용

### 1)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연구자가 대안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퀴어 청소년과 함께 활동했던 시기의 경험과 관찰이 본 연구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 경험과 다른 대안학교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 비교하고 연결하며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했다. 대안학교에 살았던 퀴어 청소년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므로 본인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그 경험을 스스로의 언어로 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퀴어 청소년이 경험한 여러 억압과 당사자 실천 속의 복합적인 마음 상태, 생애사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의 차이 등을 살피는 연구이므로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그 중, 심층 면접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으로 진행했다. 연구 참여자는 우선 연구자가 알고 있는 퀴어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후 초기 구성된 연구 참여자를 통해 눈덩이 표집법으로 퀴어 당사자 연구 참여자와 비퀴어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연구 참여자는 대안학교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퀴어(만13세~24세) 당사자 중 졸업생을 비롯해 현재 재학하지 않는 청년(만19세~34세)으로 설정했다. 퀴어 당사자는 지정 성별, 대안학교의 형태(기숙형, 통학형, 전원형, 도시형 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각각 재학한 학교는 총 7개 학교였다. 학교 형태별로는 기숙형 4개, 통학형 3개의 학교로 구성되었다.

별칭	지정성별	본인이 소개한 정체성	학교형태	학교 재학시기
가재	여	시스젠더 레즈비언	기숙	10년대 후반~20년대 초반
구구	여	퀘스처너리	기숙	10년대 초중반

별칭	지정성별	본인이 소개한 정체성	학교형태	학교 재학시기
꼬꼬	여	젠더퀴어 정체화 후 현재 정체화 거부	기숙	10년대 후반~20년대 초반
노랭	여	퀴어	통학	10년대~20년대 초반
능소화	여	시스젠더 바이섹슈얼	통학	00년대 중후반
두부	여	퀴어	기숙	10년대 후반~20년대 초반
두유	남	시스젠더 게이	통학	00년대 중후반
뿔추	여	논바이너리 정체화 후 현재 퀴어	통학	10년대~20년대 초반
복순	여	퀴어	통학	10년대~20년대 초반
루미	남	비이성애자	기숙	10년대 후반
소라	여	논바이너리 바이섹슈얼	통학	10년대 초중반
울면	남	시스젠더 바이섹슈얼	통학	10년대~20년대 초반
제이	남	젠더퀴어 게이	통학	10년대 초반
종소리	여	시스젠더 바이섹슈얼	기숙	00년대 후반~10년대 초반
찬옥	여	논바이너리 팬로맨틱 에이섹슈얼	기숙	20년대 초반

퀴어 청소년이 학교에서 한 실천으로 구성원들의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기 위해 함께 재학했던 구성원(교사, 학생)을 심층 면접했다. 재학 당시 교내에 퀴어 당사자 모임이 있었거나 퀴어 당사자 실천을 행했던 퀴어 당사자와 함께 재학했던 비퀴어 구성원 5명(학생 4명, 교사 1명)을 심층 면접했다.

별칭	학교내 위치	당사자와의 관계	함께 재학 기간
바다	학생	또래 친구	12년
딸기	학생	또래 친구	6년
맷돌	학생	또래 친구	6년
초코나무숲	학생	또래 친구	6년
아니다	교사	교사-학생 관계	5년

대안학교 내 퀴어 당사자 모임 2팀(기숙형 1팀, 통학형 1팀)과는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참여자는 연구자가 대안학교 근무 당시 알고 있었던 2개의 팀을 선정하였다. 그림자와 무운은

2010년대 후반에 만들어져 활발한 활동을 했다.

모임 이름(가칭)	학교 형태	위치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그림자	기숙형	지방	구구, 꼬꼬, 두부
무운	통학형	수도권	노랭, 뿔추, 복순

## 2) 퀴어 청소년이 만드는 역동

대안학교에서 호명되는 시민은 비장애 시스젠더 이성애자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규범은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 속에서 체화되고 그 틀에 속하지 않는 존재를 향한 미세 폭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대안학교에서 퀴어 청소년은 피해자로만 위치하지 않았다. 비장애 시스젠더 이성애자가 중심이 되는 규범이 구성원 간에 영향을 주는 학교생활 속 역동을 만들어냈다. 퀴어 청소년의 역동은 학교의 위치, 형태에 따라 각자 다양한 방식과 전략(감추기, 드러내기 등)으로 실천되었으며, 그로 인해 실제 학교와 구성원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 ① 역동이 가능했던 조건

연구자는 대안학교에서 역동이 가능했던 조건을 '대놓고 혐오하는 것이 어려운 공간', '안전하지만 편안하지는 않은 공간', '운동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공간', '고립 속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 인권을 주요 가치로 내거는 만큼 미세 폭력은 존재했지만 대놓고 어떠한 존재를 혐오하는 것이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로 인해 대안학교에서는 퀴어라는 이유로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혐의 가득한 눈빛', '퀴어 희화화 전략' 등의 비언어적이고 간접적인 미세 폭력은 존재했다. 그러한 시선과 인식은 퀴어에게 대안학교가 안전하지만 편안하지는 않은 공간임을 직면하게 했다.

대안사회운동을 만들어가는 대안학교는 규범과 기준의 틀이 존재했지만 동시에 문제를 발화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 퀴어 의제에 관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운동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다양한 운동 전략을 경험하고 배우며 퀴어 의제에 관한 운동을 상상하게 만들고 가능성을 가지게 했다. 이는 대안사회운동의 전략을 배우는 경험이기도 했지만 함께 퀴어 운동을 해 나갈 동료와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했다.

대안학교는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운동과 실천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었다. 퀴어 정체성이 누락되는 틀이 존재했지만 그에 균열을 함께 내거나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존재들이 있었다. 그 동료들과 연결되어 누락되는 정체성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닌 그 틀에 경합하고 불화하는 정체성 또한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한 역동이 시작되었다.

## ② 고립이 만든 연결

대안학교에서 퀴어로 살아가며 교내에서 누락되는 순간이 있었다. 퀴어 청소년들은 그 고립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냈다. 대안학교의 규범 속에서 존재론적 결단으로 커밍아웃을 하고도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퀴어 청소년에게 안전지대가 된다(정성조·정용림, 2022). 어떠한 범으로도, 혈연으로도 연결되지 않은 이 관계는 퀴어 청소년이 대안학교에서 지지받으며 새로운 연결로 인해 힘을 받는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김순남, 2022). 퀴어 청소년은 대안학교에서 엘라이, 퀴어 당사자와 연결되었다. 애매하고 미세한 차별과 폭력을 느끼는 공간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불편한 감각을 느꼈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연결은 퀴어 청소년이 학교와 공동체를 상대로 만들어 낸 역동의 시작이 되었다.

### ▶ 함께 고민을 해나가는 엘라이

엘라이와의 연결은 학교와 사회에서 만든 규범에서 배제되던 퀴어 청소년에게 함께 할 동료 시민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엘라이도 퀴어 당사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며 공동체가 만드는 규범을 느끼고, 퀴어에 대한 협소한 정보와 지식을 전하는 학교를 마주했다. 하지만 퀴어 청소년과 함께 살아가며 학교 수업에서는 다양하게 접하지 못했던 퀴어가 겪는 억압과 배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그 속에서 엘라이는 퀴어 당사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주체였다.

두유와 풀추는 학교에서 퀴어 청소년을 지지해주고 '편'이 되어주는 교사를 만났다. 풀추는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말하며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데 좋은

제안과 도움을 줬던 경험을 나눠줬다. 앨라이 교사와의 연결은 퀴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또래 관계와의 연결보다 더 큰 힘이 된다.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는 어렵고, 힘 있고, 완전히 이해받기 어려운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교사 중에도 내 편이 있다는 점이 큰 힘(유랑·꼬꼬, 2023:181)”이 되어 퀴어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나 당사자 실천에도 영향을 줬다. 지지하는 교사와의 연결은 학교에 계속 있어도 되겠다는 안정감을 주기도 했다.

초코나무숲은 본인이 위치한 곳에서 퀴어 당사자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을 막아주는 앨라이로서의 역할을 했다. 퀴어가 아니어서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며 다른 구성원들과도 함께 고민을 나눴다. 학교에서 퀴어 가시화 운동 및 관련 활동을 했던 노랑, 풀추, 복순의 인터뷰 중 함께 학교에서 살아갔던 구성원 중 소개해 줄 친구가 있냐고 했을 때 셋이 동시에 떠올린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퀴어인 친구들에게 소수자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거나 무운 활동 때 방문하거나 지원하며 마음을 전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지지의 마음을 전하던 친구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다. 학교 안에서 퀴어 운동과 활동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찢어버리기라도 그런 반응이라도 기다렸는데 그냥 진짜 진짜 진짜 아무 반응이 없는(풀추)” 구성원들을 보았던 퀴어 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존재는 그동안 해왔던 활동과 실천에 대한 소중한 응답이기도 했다.

#### ▶ 함께여서 가능했던 변화

학교에서 퀴어 당사자들과 연결되어 퀴어 운동을 만든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퀴어 당사자와의 연결은 공동체 내에서 배제되었던 경험을 나눌 존재가 생겼다는 것을 뜻했다. 이는 학교가 만드는 기준과 규범에 틈을 만들어 갈 존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고, 학교에서 퀴어로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안전공간’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학교 규범에 영향을 받고 있던 퀴어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공간을 찾았고, 퀴어 당사자와의 모임은 그러한 공간이 되어 주었다.(Hartal, 2017:3;재인용 정성조·정용림, 2022)

혼자인 줄 알았던 퀴어 당사자가 다른 퀴어 구성원과 처음 연결되는 경험은 퀴어의 존재를 학교에 알리고 퀴어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로 이어지기도 했다. 퀴어 청소년은 혼자일 때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막연히 두렵고 어려웠지만 함께여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가재와 구구, 꼬꼬는 같은 대안학교를 다니던 중 퀴어가 아닌 친구를 통해 연결되었다. 친구들의 커밍아웃을 듣고 연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재, 구구, 꼬꼬에게 동의를 구해 소개해 줬다. 그 연결은 교내 퀴어 당사자 모임 ‘그림자’ 결성으로 이어졌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부도 이후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을 만들어갔다.

퀴어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존재 자체로 마음의 안정. 그냥 내가 언제든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 받을 수 있다는 그 느낌! 너무 좋고, 그리고 다 같이 몰래 나가서 (웃음) 그 해방감이 진짜 살짝 아드레날린? (웃음) 그게 너무 재밌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뭔가 되게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의 정체성을 되게 긍정하고 계속 나아가는 힘을 줄 수 있었던 게, 모임 존재 자체가. (꼬꼬, 그림자 멤버, 지정성별 여성, 젠더퀴어 정체화 후 정체화 거부, 기숙형 재학 경험)

같이 있으면 나를, 그런 나를 미워하지는 않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동에 뭔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뭔가 같이 움직여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게끔 했어요. (가재, 그림자 멤버, 지정성별 여성, 시스젠더 레즈비언, 기숙형 재학 경험)

‘무운’ 또한 이러한 연결을 만들어 낸 퀴어 청소년 모임이다. ‘무운’을 함께한 노랭, 풀추, 복순, 울면은 교내 ‘레인보우 포스트잇 프로젝트’로 연결됐다. 울면은 퀴어로 정체화한 뒤, 퀴어에게 편안하지 않은 학교를 느끼며 퀴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친구들을 초청했다. 울면의 초청으로 연결된 멤버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자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처음에 정체화를 하고 나서는 되게 무서웠는데 약간 무운이 커지면서 ‘내가 퀴어라도 나랑 놀아줄 사람들이 있구나.’ 약간 이런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좀 안 무서워졌던 거라서 (풀추, 무운 멤버, 지정성별 여성, 논바이너리 정체화 후 현재 퀴어, 통학형 재학 경험)

‘그림자’와 ‘무운’은 학교에서 퀴어 당사자가 연결되어 함께 편안하게 노는 시간을 만들었다. 모임 이전에는 접점이 거의 없었던 관계도 있었지만 ‘퀴어’라는 정체성은 퀴어 청소년을 끈끈한 연결이 되게 해주었다. 이는 학교에서 살아가며 퀴어라는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증명해야 했던 경험으로 인해 더욱 편안하게 느껴지는 연결이기도 했다. 퀴어라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누락되며 느꼈던 답답함을 퀴어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풀어나가며 해방감을 느꼈다.

이 연결은 퀴어로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체성을 계속 탐색하는 자신이 퀴어가 맞을지 고민하던 구구에게 ‘그림자’는 퀴어라는 정체성에 확신을 주는 모임이었다. ‘그림자’로 연결된 퀴어 당사자가 전한 “이미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부터가, 이미 너의 그런 고민부터가 퀴어지!”라는 말을 들으며 ‘퀘스쳐너리’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체화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두부는 '퀴스쳐너리'로 본인을 드러내는 구구를 보고 정체화 과정과 퀴어 정체성에도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자'는 교내 축제에서 각자 퀴어 정체성을 피켓에 적어 옷에 붙이고 다니는 퀴어 가시화 운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커밍아웃을 다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개인의 부담은 줄이며 학교에 퀴어를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했다. '무운' 또한 퀴어 모임으로서 무운을 드러내며 학교에 퀴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며 가시화 운동을 시작했다. 혼자가 아닌 함께가 되었을 때, 퀴어 정체성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었다. 커밍아웃은 퀴어 당사자 모임의 실천이자 운동이 되고, 학교의 규범과 기준에 균열의 시작이 되었다. 이는 대안학교가 만든 틀로 인해 누락되는 존재와 구성원들의 미세 폭력이 더 이상 퀴어 청소년만의 몫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몫임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 ③ 규범에서 다르게 살아내기

퀴어 청소년들은 가시화 운동에 그치지 않고 학교의 규범과 기준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운동을 이어나갔다. '퀴어 정체성'이 학교에서 살아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저항과 투쟁이었다. 퀴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미세 폭력은 부정적인 경험과 불편함으로 그치지 않았다. 사라 아메드(2023)가 제안하는 "규범에서 다르게 살아내기"는 규범에 맞춰 살아가지 못한 것을 실패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저항하는 삶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퀴어 청소년이 감각하는 불편함과 부정성은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가운데 생기는 설렘(사라 아메드, 2023:334)"으로 전복되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 우리가 만드는 퀴어 수업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는 퀴어 관련 수업이 없었다. 있는 경우에도 젠더 교육 속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퀴어 청소년이 학교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운동을 시작하며 교사회에서는 퀴어 청소년에게 퀴어 수업을 요청했다. '무운'은 수업을 진행한 이후, 퀴어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추가 된 수업 내용에 대해 아쉬움은 남았지만 학교 내 공적인 기록에 퀴어 수업이 남았다는 것이 의미 있었음을 전했다.

대안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배움을 교육과정 내 구성하고 있었다. '그림자'와 '무운'이 재학했던 학교는 정기적으로 하는 전체 구성원 대상 특강 시간이 있었고 수업 또는 학기 주제와 연결해 외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었다. 퀴어 인권 단체 활동가나 퀴어 연구자, 퀴어 당사자 등을 초대해 비청소년인 퀴어의 삶 이야기를 들으며 퀴어 청소년은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자'는 학기 주제 관련 이동학습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퀴어 인권 단체 활동가의 공개 결혼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사회 속 규범에 틈을 만드는 시도로 쉽사리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족과 결혼의 가능성으로 연결시켰다. 특히 비청소년 퀴어와 만나는 교육 활동들은 퀴어 정체성이 청소년기에 잠시 겪을 수 있는 혼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트리는 장치가 되었다.

수업의 형태와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제도권 학교에 비해 자유로운 대안학교에서는 교사회의 유연성과 퀴어 청소년의 의지, 퀴어 관련 수업이 안전하게 열릴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가 있다면 다양한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는 학교의 공적인 영역인 교육과정과 시간표에 퀴어가 기입될 수 있다는 의미였고, 젠더 교육이나 시민 사회 교육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 ▶ **별칭이 깨트린 나이 권력과 젠더 규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듯 쓰는 호칭인 누나, 언니, 오빠, 형에는 나이 권력과 젠더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지정성별을 중심으로 쓰이는 이 호칭은 트랜스젠더퀴어를 배제하고 호칭을 쓸 때마다 성별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마다 쓰게 되는 호칭은 트랜스젠더퀴어에게는 지정성별을 강요하는 것과 같았다. 학교 전체 구성원에게 커밍아웃을 한 꼬꼬는 이후 호칭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다른 연구 참여자는 학교의 규칙과 문화에 대해 나누는 전체 회의에 호칭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올려 나이 권력과 성별 중심적인 호칭에서 별칭과 평어를 쓰는 문화로 바꾸는 시도를 했다.

퀴어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된 구성원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성애를 전제로 한 여자친구, 남자친구 대신 '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무운'이 재학했던 학교에서는 학부모, 부모님이라는 말 대신 '양육자'로 표현을 바꾸었다. 학교 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변화와 동시에 학교 공지나 알림, 입학안내 등의 공적인 문서에서도 양육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퀴어의 존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규범들에 균열을 내고 학교를 보다 수평적인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 ▶ **퀴어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만들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트랜스젠더퀴어가 성별 정체성에 맞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그것은 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다. 트랜스젠더퀴어는 성별 이분법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 기숙사를 갈 때마다 성별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듯한 성별 위화감을 경험을 하게 된다. 트랜스젠더퀴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고민하며 찾아나가던 퀴어 청소년은 '성중립 공간'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접하게 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다.

저희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 했을 때 공동체에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 화장실에 대한 인식을 조금 토대를 만들자 해서 전 구성원들에게 아침 열기나 수업 전 짜투리 시간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발표를 했었죠. (똥추, 무운 멤버, 지정성별 여성, 논바이너리 정체화 후 현재 퀴어, 통학형 재학 경험)

‘무운’이 구성원들에게 성중립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학교에서도 확보해 주었다.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이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을 준비했고, 성중립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전체적으로 올린 뒤, 학교 내에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림자’가 다녔던 학교에는 ‘그림자’의 구성원이 대부분 재학하던 당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성중립 공간에 대한 이해와 트랜스젠더퀴어의 위치에서의 충분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성중립 공간은 트랜스젠더퀴어에게 불편함을 전하기도 했다. 학교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두부는 사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전했다. 성중립 공간을 사용할 경우 ‘아웃팅 위험’과 ‘무조건 다른 학생들이 욕하고 놀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에 공간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도 있었다(남미자 외, 2023). 실제 두부가 재학했던 학교의 몇몇 교사들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된 이후 일부러 성중립 화장실 칸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중립 화장실 칸이 구성원 대부분에게 편한 공간이 되면서 실제 이 공간이 필요했던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가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성중립 공간이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설립 전 트랜스젠더퀴어의 위치에서 성중립 공간을 함께 생각한 후, 구성원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설립 후에도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과 인식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과 학교가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중립 공간은 기숙사에도 필요했다. ‘그림자’가 재학했던 대안학교에서는 기숙형 학교였다. 하루의 반을 생활해야하는 기숙사는 성별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꼬꼬의 커밍아웃과 프로젝트로 성중립 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제안을 전했지만 젠더 폭력, 안전, 예산 등의 다양한 이유로 규범과 기준을 들며 틈을 내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하지만 다른 대안학교의 시도를 통해 학기나 학년마다 있는 이동학습 중 사용하는 숙소에 대해서는 제안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마주했다.

고등 때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저희 여행갈 때 방 쓰는 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정성별대로 나뉘어서 자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자는 방을 만들어서 지내보자. (똥추, 지정성별 여성, 논바이너리 정체화 후 현재 퀴어, 통학형 재학 경험)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었던 학년끼리 떠난 이동학습에서 '무운'은 지정성별과 상관없이 잘 수 있는 방을 제안했다. 그 제안에 함께 이동학습을 가는 구성원들은 반대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이동학습 중 성중립 방을 사용해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긴 시간을 함께 보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물리적인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성중립 숙소를 시도해 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퀴어 당사자가 아닌 구성원들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없었고, 같은 학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당연하게 이해하게 된 지점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 때 '무운'과 함께 이동학습을 간 교사는 화장실과 숙소 문제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만약 양육자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이 방법이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방법이고 교사에게 편한 방법이라고 대처하면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갔다고 하면 사실 절대 안됐었거나 혹은 그 똑같은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지난한 논의를 해야 했을 거라고" 전한 울면의 생각은 전체가 아닌 작은 단위에서의 새로운 시도도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운'의 시도는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이동학습 중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후 이동학습에서도 함께 숙소를 어떻게 할지 소통하여 성중립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이와 같은 시도는 퀴어 청소년이 학교에서도 본인의 성별 정체성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스스로 문제제기하고 편안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제안한 것이 공동체 내에 받아들여지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공식적으로 학교에 제안하고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퀴어 청소년의 제안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운동과 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 ▶ 학교 밖과의 연결

연구 참여자들은 당사자 모임으로 연결되고, 따로 또 같이 만들어간 실천과 변화를 통해 퀴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 되겠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학교 안에서만 운동을 해나가던 퀴어 청소년은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퀴어 청소년들과의 연결과 운동의 확장을 꿈꿨다. 특히 대안학교 내에서만 청소년기를 보냈던 연구 참여자의 경우 살아온 공동체 밖의 청소년이나 퀴어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증을 가졌다.

다른 퀴어 청소년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고 (...) (퀴어도) 딱 그냥 이것도 내 정체성 중 일부구나 하고 진짜 어딘가에 딱 자리 잡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복순, 지정성별 여성, 퀴어, 통학형 재학 경험)

퀴어 청소년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 퀴어 청소년을 가시화하고 싶다는 마음에 '무운'의 노랭, 폴추, 복순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퀴어 청소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노랭, 폴추, 복순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면서 만났던 퀴어 청소년을 통해 다른 학교와 공동체의 문화와 분위기를 알게 되었다. 퀴어 청소년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은 "다른 학교에서도 퀴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발견이 제일 뭔가 컸던 (노랭)" 활동이었다.

폴추에게는 이 다큐멘터리 작업이 트랜스젠더퀴어와 연결되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실제 퀴어 운동을 하면서도 트랜스젠더퀴어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폴추는 트랜스젠더퀴어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이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퀴어 청소년일지라도 어떤 정체성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배제의 경험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자'는 교내 엘라이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퀴어 문화 축제를 기획하여 진행했다. 비청소년과 도시 중심인 퀴어문화축제에서 퀴어 청소년은 본인의 자긍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배제되는 경험을 마주하기도 했다. 또한 도시와 떨어진 지역 소재의 기숙형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한 퀴어 관련 모임 또는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웠다. 특히 학기 중 주말 외박은 양육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시도하기 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험을 겪으며 '그림자'는 청소년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축제에서는 학교를 다니며 겪었던 억압과 배제를 어떠한 존재도 느끼지 않기를 바랐다.

*(청소년 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며) 최대한 모두에게 안전한 축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였는데 (...) 학교축제랑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았겠지만 음식 판매 부스들도 다 비건이고, 공연을 할 때 혐오적인 가사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했었고, 무지개가 학교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고 (...) 그래서 약간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안전한 공간 같았어요. (두부, 그림자 멤버, 지정성별 여성, 퀴어, 기숙형 재학 경험)*

축제 기획팀은 최대한 어떠한 존재도 누락되지 않는 모두에게 안전한 축제를 만들고 싶었지만 학교 공간을 빌려서 하는 만큼 제약도 있었다. 축제를 앞두고 '그림자'를 불편하게 느끼는 교사와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학교 공간 구조상 턱과 계단이 많아 다양한 신체와 함께할 수 있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축제 부스팀과 공연팀을 모집할 때, 음식 부스를 할 경우 비건 음식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공연 곡 또한 혐오가 담겨있지 않은 음악으로 진행하도록 안내를 하며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 혐오와 차별을 줄이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갔다.

'그림자'는 양육자나 교사의 도움 없이 청소년의 힘으로 축제를 만들고 싶었다. 청소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축제로 청소년에 대한 규범과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었다. '그림자'는 축제

진행 위해 퀴어 인권 단체의 청소년 활동 사업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고,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외부 홍보 겸 펀딩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외부의 단체, 사회 구성원들과도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

*외부랑 연결되는 순간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준다는 게. 성소수자 교사 모임에서 후원해주는 걸 보고 이런 게 연대가 되고 있는 거구나. 서로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준 사람들이 많구나에 되게 큰 감격을 했었고 어디든 내가 나가서도 연결될 곳이 많겠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 (두부, 그림자 멤버, 지정성별 여성, 퀴어, 기숙형 재학 경험)*

학교 공간에서 청소년 퀴어 문화 축제를 준비하면서 교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림자'는 외부에서 전한 연대의 마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퀴어의 삶을 지지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는 그림자가 청소년 퀴어 문화 축제를 만들었던 이유를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이렇게 시작했던 사회를 향한 목소리 내기는 다른 활동 현장에서도 연결되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 가서 (부스 운영하면서) 판매하고 이럴 때 꽤 알아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저희 텀블벅 펀딩했었어요.' 막 이리시고. 뭔가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모르는 사람인데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 연대감이 정말 짜릿했고 (두부, 그림자 멤버, 지정성별 여성, 퀴어, 기숙형 재학 경험)*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퀴어 가시화 운동 실천으로 확장된 연결은 퀴어 청소년에게 짜릿한 감정을 줬다. 다양한 연령대의 퀴어 당사자, 앨라이와의 만남은 잘 상상되지 않았던 미래로 연결시켰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비가시화되고 있는 퀴어는 먼저 삶을 살아가는 선배와 롤모델을 잘 찾을 수 없어 미래를 상상하기 막연할 때가 있다. 하지만 운동의 장에서 만나는 퀴어 당사자와 앨라이로 인해 미래에도 고립으로 만들어진 연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사회적 지지를 느꼈다.

# 3

## 성찰과 후기

이 연구는 12살의 나로부터 시작된다. 퀴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그 때, 친구들에게 받았던 시선과 말이 여전히 나에게 끈적끈적한 감정으로 남아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들과의 연결로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23살 12월, 면접 자리에서부터, 이 연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6살 12월 교사회에 커밍아웃을 하던 때로부터 왔다. 그리고 2017년 마침내 가장 소중한 친구들과 연결되어 학교에 짱뿔을 던지던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됐다.

2017년 가을, 처음 교내 퀴어 청소년들과 연결되어 학교를 몰래 뛰쳐나가던 순간이 여전히 생생하다. 해방감과 웃음으로 가득 찼던 마티즈 안의 감정이 지금까지 우리의 연결과 운동을 만들어줬다고 믿는다. 그 이후부터 학교를 떠나던 순간까지 학교의 규범을 마주하고, 혐의 가득한 시선과 유별난 존재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퀴어 동료들과 그 편견에 짱뿔을 던질 때면 그저 퀴어라는 이름으로 함께여서 행복했다. “우리의 놀이를 후원해주세요.”라는 말에 마음을 모아주던 존재들을 기억하고, 트랜스젠더퀴어와 함께하게 될 캠프의 숙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같이 싸우겠다고 마음을 모으던 친구들을 기억하고, 서로의 존재에 용기를 얻으며 커밍아웃 피켓을 몸에 붙이던 그 날을 기억한다. 이 연구 결과와 같이 나 또한 함께 짱뿔을 던지던 모임 덕에, 퀴어여서 연결되었던 엘라이와 퀴어 친구들 덕에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지금 여기에 살아남아있다.

그 친구들과 활동을 회고하던 때였다. 회고집 제목을 고민하던 중, 밸런스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중산층 백인 남성 이성애자로 살기 vs 퀴어로 살기’에서 우리 모두는 ‘퀴어로 살기’를 선택했다. 무지한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오히려 퀴어여서 다양한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세계와 정체성들의 삶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더 특별하고 행복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는 그렇게 규범과 기준이 만드는 행복과 삶에 저항하고, 우리의 연결에서 오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다(사라 아메드, 2023).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끈 이 친구들의 삶을, 퀴어 운동과 연대에 희망과 꿈을 갖게 해준 나의 소중한 동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그렇게 만나게 된 15명의 퀴어 청년들과

5명의 앨라이와의 연결은 나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그동안 간혀있었던 나만의 틀에 균열을 냈다. 인터뷰를 하며 나는 여전히 12살의 그 날에, 23살의 그 날에, 그리고 27살의 그 날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다. 그 날을 다시 떠올리다가 다시 인터뷰를 집중하다가 집에 돌아와 인터뷰에서 나는 언어들을 곱씹으며 많이 울고 웃었다. 그 날의 나는 여전히 나를 울게 만들고,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그런 나를 다시 현재와 미래로 데리고 왔다.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가 나를 살게 하고, 꺼내주었던 2024년이다. 20명의 삶 이야기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친구들을 기억하게 했으며,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자꾸만 미래를 꿈꾸고, 함께 연결되어 살아갈 그 삶을 상상하게 했다. 이 작업은 나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들이었다. 퀴어 청소년이 나눠준 삶의 이야기가 과거에 머물러있는 존재들을 현재로, 미래로 끌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계속 떠올랐다. 그렇게 현재에 살다가도 과거에 머물게 되는 퀴어한 존재들을 미래로 이끄는 길에 함께 하자는 목소리이자, 선언이자, 외침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삶과 세계로 가는 길은 퀴어 존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불안하고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주변을 살폈다. 연구를 시작하며 연결된 다양한 몸과 정체성이, 다양한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곁을 지키는 이들이 함께 새로운 미래로 가자며 나를 끌었다. 사랑과 진심이 전해지는 마음에도 도망치던 날들이 많았다. 지레 겁먹고 혼자 나만의 방과 벽장에 갇힐 때면 이 모임에서 미끄러지는 건 내가 아닌가 생각했다. 퀴어인 것을 드러냈을 때 멀어질 관계가 무서웠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정과 느낌이 혼자만의 착각이라 할까봐 무서웠다. 그렇게 다시 난 스스로 관계에서 미끄러지고, 주변의 쉼한 분위기에 도망치고, 과거의 나에게 붙잡힌다. 그러다보면 학교에서 만났던 나의 퀴어 친구들이, 학교에서 전했던 규범과 편견들이, 그리고 그 순간 순간을 함께하던 때가 떠오른다. 각자의 위치에서 연결되고 잘 살아내고 있는 순간을 마주하다가도 과거의 일들이 붙잡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다시 또 미끄러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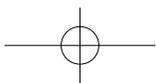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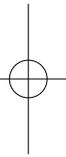
가끔 활동과 작업을 할 때면 그런 상상을 한다. 12살, 처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친구가 웃으며 환대해주는 상상을, 20살, 처음 만난 친구들에게 내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상상을, 23살, 면접장에서 그 질문을 정정하며 사과하는 교사를 만나는 상상을, 24살, 교무실에서 퀴어 관련 수업을 열고 싶다고 하는 상상을, 27살, 성중립 화장실과 기숙사의 필요성을 학교에 강력하게 전하는 상상을, 이러한 상상이 부디 빠른 시간 내에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상상을.

적어도 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몸과 존재에 환대를 전하는 공간이 되길 꿈꾼다. 현재와 미래에도, 10대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학교에서 경험했던 연결과 환대, 연대의 기억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시간을 꿈꿀 수 있는 곳이길 바란다. 퀴어에게는 환대 가득한 삶을,

퀴어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에게는 다양한 몸과 정체성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고 뒤에 남겨두는 존재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공간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새로운 삶과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 펼쳐지고, 단단하고 따뜻한 연결과 연대가 가득한 공간이기를, 더 이상 미끄러지는 이도, 누락되는 이도 없는 환대가 가득한 학교가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 참고문헌

- 김순남(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파주:오월의 봄
- 남미자·송지은·마한얼·이도경·장서연·정명화·정민석(2023),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법제도 개선 연구 - 성소수자 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멍동
- 사라 아메드(2023), 『감정의 문화정치』, 시우 옮김(역), 파주:오월의 봄
- 여성신문, 2024.4.26., “4월 26일 한 소년이 죽은 날,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최종검색 일 2024년 5월 17일)
- 유랑·꼬꼬(2023), “학교에서 성별의 경계를 허물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시도한 변화의 기록”, 『오늘의 교육』, 제77호, 205-226쪽
- 정성조·정용림(2022), “청소년 성소수자와 안전공간:‘배제된 이들’이 만들어어나가는 대안 공간들”, 『공간과사회』, 제32권 2호, 103-141쪽



# 홈리스 활동의 의미에 관한 재구성

아랫마을 홈리스 사례를  
중심으로

박내현(2024)

원문 읽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나 활동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약자를 대상화 하는 것이다. 당장의 인권침해나 사회부정의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상화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대상화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만들거나 변화를 도모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장 연구자들, 활동가들이 대상화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감내하게 된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탁월함을 보여준다. 홈리스들의 일상을 살피되 아랫마을이라는 저항공동체를 중심으로 접근한 덕분에 두 가지 방향의 대상화-정책의 대상 혹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당사자를 넘어서 자신의 삶과 사회 구조를 동시에 스스로 바꾸는 정치적 맥락의 저항자로 홈리스 당사자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었다. ‘활동가의 시선’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무엇이 ‘현장 지식’이고 ‘좋은 연구’는 어떠한지 보여주는 연구성과다.

# 1

## 연구의 계기와 문제의식 -노동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살기 위해' 임금노동을 한다. 그리고 임금노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원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임금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노동인권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 노동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렸을 때 집을 나와 혼자 살았고 쌍둥이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쌍둥이는 모두 경계성지능이라 돌봄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고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조건부로 받고 있었다. 두 아이를 돌봐야 해서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수급을 받는 그를 사람들은 비난했다. '아직 젊고 건강한데 왜 일하지 않지?' 그는 그런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매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회복지사부터 주민센터 담당자, 자신에게 이런 저런 물품을 지원하는 이웃들 모두 그에게 일하기를 종용했다.

이 사례를 접하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왜 그들은 비난받아야 하지.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무척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과 이 사람이 자녀를 돌보는 일은 '노동'하지 않음으로 비난받는 상황은 공존할 수 있는가? 일과 노동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던 사건이었다.

임금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임금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돈을 받지 않는 일들,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의미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들 속에서 헤매일 때 중증장애인들의 권리중심일자리를 알게 되었다. 권리를 생산하는 일이라니...그런데 생각해보니 나와 같은 단체 활동가들이 하는 일과 비슷했다. 시민의 목소리로 요구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고 심지어 생산하는 일, 국회의원들은 정책을 만들며 임금을 받는데, 왜 다른 이들은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 일자리는, 노동은 왜 이렇게 위계화되어 있는가. 무엇이 일인지, 아닌지는 누가 정하고 판단하는 것인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쓸모를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 우리에게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 임금노동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그런 세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그 질문들을 안고 홈리스야학을 만나게 된다. 홈리스야학이 운영되는 아랫마을은 거리노숙을 하는 분, 쪽방이나 고시원 등 걱정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사는 분 등 다양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반빈곤운동을 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내가 만난 분들 역시 학력, 장애, 나이, 성별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재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일용 노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말하는 ‘돈버는 일’을 하지 않을 뿐, 각자가 자신의 상황과 위치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 2

## 연구 방법과 배경

석사학위 논문 주제로 아랫마을 홈리스들이 하는 활동의 의미를 탐구해보기로 하고 연구를 제안했다. 총 6명의 당사자를 면담하고 아랫마을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참여자들의 발언문, 참여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했다. 공개되어 있는 홈리스행동의 홈페이지 자료, 신문 기사 외에도 동의를 얻어 확보한 내부 회의 자료, 면담 이후 참여자들이 연구자에게 제공한 발언문이나 글도 자료로 포함하였다. 연구자가 홈리스야학의 자원활동교사이자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직접 참여한 활동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었다. 면담 참여자는 성별, 학력, 장애여부, 거리노숙 기간, 공공일자리 참여 경험, 홈리스야학 및 아랫마을과 관계를 맺고 활동해온 기간 등을 최대한 다양하게 고려해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은 모두 홈리스야학 활동가 개별 상담 및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아랫마을은 홈리스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파악되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공간으로 5개의 반빈곤운동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홈리스들을 위한 야학 운영 및 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곳은 야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뿐 아니라 거리노숙인, 쪽방이나 고시원 주민 등 다양한 홈리스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이용하는 공간이다. 일반적인 거리 노숙인이나 홈리스들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거나 폐지 수집, 일용직 등의 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시설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노숙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시설 노숙인들도 있다. 반면 아랫마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홈리스들은 현재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며 대신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차이를 지닌다. 아랫마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과 이곳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홈리스들이라는 특정한 사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면담과정은 면담참여자들이 생애 동안 경험했던 시장노동, 가정 내 노동, 공공일자리 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현재 아랫마을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묻고 답했다. 그 과정에서 일경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그 경험 자체, 그리고 그 경험이 참여자에게 미친 영향이나 생각 등을 듣고자 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실은 분절된 경험이 아니라 인과의 연쇄고리이며 이러한 연쇄고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작동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

## 연구결과 I

### - 홈리스는 일하지 않는 존재인가, 일할 수 없는 존재인가

#### 1) 과거의 일 경험 노동윤리의 내면화

참여자 중 일부는 시장 노동을 한 경험이 있고 일부는 시장노동과 공공일자리 경험을, 또 일부는 공공일자리만을 경험했다. 신문배달, 청소, 공장, 이삿짐 배달 등 일반적으로 단순 노동으로 평가되는 일자리였지만 참여자들은 자부심을 느끼거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경험, 칭찬을 받았던 것 등 긍정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의 외모 평가나 지나친 간섭에 적응하지 못해 단기간 일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한 참여자, 단순 반복으로 인해 지루함을 느끼고 만족감이 낮았던 참여자도 있었으며, 관리자의 잔소리나 부정적인 평가로 상처받은 경험도 있었다. 특히, 공공일자리의 경우 임금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저임금 일자리만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게 했다.

참여자들은 실직이나 다른 이유로 일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특히 가족들에게 미안하거나 죄책감을 느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신이 '밥만 축내는 것 같고',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집을 나와 노숙으로 들어서기도 했다. 조건부 수급권자라서 일을 구해야 하는 한 참여자는 시장노동과 자활, 공공근로를 거치며 오랫동안 해왔던 청소노동 경력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그 이유를 자신이 일을 못할 거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을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도 했다. 혼자 일할 수 있었던 편의점에서는 1년 가까이,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는 공장에서도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역시 자신을 사회부적응자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다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의 이같은 발언을 통해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홈리스 자신에게도 내면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일하지 않는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하지 않는 존재를 비난하거나 일하는 사람만을 건전한 시민으로 보는 노동윤리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노동윤리는 건강하지 않거나 나이가 많거나, 보기 좋은 외모를 지니지 않았거나, 경력이나 학력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아닌 일하지 않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게 한다.

## 2) 부당한 질서를 재생산하는 사회복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아랫마을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게 되었고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이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규정상 조건부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일해서 돈을 벌면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구조이므로 연구참여자들 또한 일하는 대신 생계급여를 선택하는 모순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를 위한 ‘근로유인’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줄어들다.

*수급자니까 수급 떨어질까 봐.(일 안하죠) 일하면 수급 떨어진다더라고. 그래서 안 하죠. 200. 그정도는 있어야 살죠. 원래는. 왜냐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고 일할 사람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할 사람은 일하면서 어느 정도 가정에 형편이 돼야지. 일하는데 수급 까면 누가 일해요. 안 하죠.*

면담 참여자들 중 4명은 할 수만 있다면 일을 해서 지금 받는 생계급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원했다. 하지만 일해서 벌어들인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도 하고 심지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일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에 일을 구하지 못 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일할 의지가 없어 사회복지에 의존한다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 4

## 연구결과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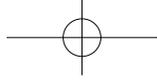
### - 홈리스 활동의 의미, 세계와 관계맺기

#### 1) 사이적(inter) 존재로서의 관계맺기

##### ① 상호돌봄의 가능성

참여자들은 대부분 거리 노숙을 하던 기간에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실천단)을 만났다. 매주 일정한 시각, 종각과 시청, 서울역 일대를 방문하는 실천단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매주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를 방문해 거리 노숙인들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관계가 생기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이나 생계급여 지원 등을 안내하기도 한다. 매주 만나는 노숙인의 숫자를 확인하고 이후 집계하여 노숙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원추이를 살피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진행하는 일시집계방식과는 달리 오랜 기간에 걸쳐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동이 잦은 노숙인의 숫자와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8시부터 진행되는 준비모임에서도 각자가 만난 거리노숙인 관련 특이사항 등을 점검하며 지역을 자주 이동하는 노숙인들의 현황, 질병이나 부상, 혹은 범죄화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에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실천단과 인권지킴이 활동 외에도 아랫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돌봄'이 실천된다. 혼자 병원을 가기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가능한 사람이 함께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병원동행', 행사 참여 등으로 먼 곳으로 이동할 때 방향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솔 및 길안내' 등 일상 생활에서도 돌봄이 일어난다.

또 다른 돌봄의 형태로는 홈리스 추모제와 공영장례가 있다. 이동이 잦은 홈리스들은 생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 집계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홈리스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만났던 거리노숙인들이나 쪽방이나 고시원의 홈리스 당사자들을



통해 혹시 주변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떠난 이를 위한 추모의 메시지를 받아서 홈리스추모제 때 함께 공유한다. 매년 열리는 추모제는 일주일 전부터 서울역에 추모제가 있음을 알리고 거리 전시 및 홈리스 뉴스 발행 및 배포를 통해 거리 노숙인들도 추모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랫마을의 홈리스들은 사망자의 주변인으로부터 추모메시지를 모으는 일부터 홈리스 추모제를 거리 노숙인들에게 알리는 활동, 추모제 당일 서울역 광장에 부스 운영 등 추모제 준비와 운영에 함께 한다. 홈리스들 중에는 오랜 시간 혼자 살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가 치러진다. 아랫마을에서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며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 혹은 홈리스 야학을 통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공영장례를 치르게 될 때 장례주관단체가 되어 상주의 역할을 한다.

*무연고 장례 많이 갔죠. 벽제에 가서 운구도 많이 하고. (홈리스 추모제도) 나도 저렇게 될 거니까요. 나이 들면. 나중에 가족들이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주면...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지.*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임금노동이 아니라 복지수급을 받는 동료 홈리스들을 통해 가능해진다. 기존의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보이지 않았던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가족관계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아랫마을에서 수행되는 홈리스들간의 상호돌봄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

## ② 관계맺기와 동료되기

관계맺기는 홈리스 당사자들 간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과 교사-홈리스들 간에도 일어난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아랫마을에서의 활동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혼자인 사람들을 돕거나 아랫마을에서 일하는 활동가를 돕는 일이며, 자신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되갚는 일이라고 말한다. 행사가 있으면 행사 준비를 함께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기도 하고 아랫마을에 상주하는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준비를 돕기도 한다. 새로운 집으로 입주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삿짐을 나르고 홈리스야학에서 매월 발행하는 홈리스뉴스를 서류봉투에 담아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은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 이뤄진다.

거리 노숙인들 역시 다양한 지원기관이나 교회의 봉사자들, 시설의 종사자들을 거리에서



만나고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 맺기가 물품을 지원하거나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반면 아랫마을의 홈리스들과 활동가, 교사들은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1년 정도, 주 1회 이상 수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상호 돌봄과 도움을 주고받는 동료로서 관계의 질적 변화를 맞이한다. 아랫마을의 실천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관계에서 스스로 당사자 활동가가 되어 거리 노숙인들에게 다시 동료되기를 실천하는 홈리스들의 활동은 '하는 일이 없거나 게으르다'는 홈리스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각자 독립되고 특별한 존재로 서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 2) 정치적 존재로 드러나기

### ① 세상 바꾸기

참여자들은 모두 반빈곤운동과 관련된 집회, 시위,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 중 집회의 경우, 반빈곤과 홈리스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집회들이 주를 이루지만 세월호와 같은 재난참사, 이주노동자, 노동자대회, 장애인이동권투쟁, 노점상 철거 항의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집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발언문은 당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작성하고 활동가들이 조력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병원비 지출이 높은 참여자는 의료와 관련한 발언을 주로 하고 부양의무제나 장애등급제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둔 참여자가, 여성홈리스와 관련한 사안은 여성홈리스 당사자가 준비한다. 10년 이상 활동한 한 참여자는 자신의 실천으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더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다들 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게끔 만들고 싶어서 나가는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싸울 거예요. 되도록, 나는. 저도 어렵게 살았고. 거리에 살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쪽방 같은데도 내쫓지 말고 그냥 죽 있든가. 임대주택 들어가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참여자들은 정치적 존재로서 세상 바꾸기에 참여하며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행위자이다. 처음에는 활동가들의 손에 이끌려 집회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며 발언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언론에 기고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빈곤과 실직, 노숙 등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때 문이 아니라 빈곤을 심화시키는 사회 구조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나서게 된다.

## ② 스스로 주인되는 삶

참여자들은 집회 참여나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하는 이유가 '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만 이거나 혹은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인 타자와 연대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도 거리에 살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임대주택 들어가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행위는 자유롭고 자율적일 때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마르크스 역시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이 본래적 노동이며, 인간의 노동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됨으로 인해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지적했다. 홈리스 당사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수업을 포함한 아랫마을의 운영 전반에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주인으로 존재한다.

## ③ 세계 인식

한 참여자는 홈리스 야학을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야학, 배움을 넘어 활동가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아랫마을이 운영하는 야학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 방법이나 한글, 영어교실처럼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수업도 있지만 권리를 학습하는 수업,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 수업 등이 다양하게 운영된다. 합창반에서는 '환대와 연대의 공간'이라는 주제의 노래를 함께 만들고 홈리스 추모제나 연대 행사에서 함께 공연한다. 예술 수업을 통해 그린 그림으로 아랫마을 안에서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고 준비한 연극을 공연하기도 한다. 연극은 대부분 참여자들이 함께 만든다. 최근에 참여자 중 일부는 수업을

통해 제작된 단편영화에 출연했고 이 영화가 상영된 반빈곤영화제와 인천인권영화제의 GV에 이야기손님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글쓰기 수업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글로 써서 문집을 내기도 하고 글을 쓰기 어려운 학생들은 교사와 인터뷰를 통해 글을 만들어낸다.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해 교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서사를 기록하고 삶을 재해석하는 기회를 갖는다.

### 3)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

거리 노숙인을 포함한 홈리스들은 고립되어 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면화해왔다. 참여자들 역시 일하지 않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으며 그로 인해 집을 나와 노숙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홈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는 질문에 '부정적일 것 같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고 진술했으며 구직 과정이나 거리 노숙을 할 당시에 실제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태도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랫마을에 와서 타인과 함께 생활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며 그 안에서 대화와 행위를 통해 새로운 관계들을 만나며 참여자들은 변화를 겪었다.

수급비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수급비가 올랐다. 땀 흘린 보람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랫마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시장노동과 공공일자리에서의 소외와 배제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 그 중 일부가 바뀌었을 때 자신이 그 변화에 기여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설명할 때 자주 '바쁘다', '할 일이 많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회의나 수업의 시작과 끝에 항상 먼저 책상을 정리하고 회의에 필요한 비품을 자발적으로 준비했다. 기존의 일 경험에 대한 평가와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났던 '필요없음', '게으름', '자신없음'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5

## 회고와 성찰

### - 현장연구의 주체는 누구인가

면담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았고 평소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했던 면담 참여자들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더 많았다. 특히,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 경험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쉬었다', '그냥 놀았다' 등의 답변을 할 때, 연구자 역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다. 연구자 역시 이유없이 일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런 길항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의 면담에서 '아랫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라는 질문을 하면 어김없이 '하는 일 없는데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대화는 막혔다. 답변하는 이와 질문하는 이의 '일 개념'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차이는 홈리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 혹은 직업을 말한다.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우물쭈물하게 되거나 '그냥 딱히 하는 일은 없어요'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은 곧 임금노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랫마을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잖아요라고 설명을 덧붙이면 다들 '아...그런 일이에요'라고 하며 그제서야 자신이 하는 활동을 꺼내놓았다. 우리는 언제부터 임금노동만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임금노동 바깥의 일들을 다시 일의 세계로 들여놓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오랜 시간 면담에 참여했던 한 홈리스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다음날 아침에 잡혀있는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싫어서였다. 그러나 그는 전날 두 건의 회의와 생일잔치를 준비했고 그다음 날에도 기자회견 이후에 많은 일정이 있었다. 피곤해서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싫은 마음이 게으른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우리는 한참동안 대화를 나눴고 가까스로 그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 것이라는 걸 수긍했다. 일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오래도록 사회에 만연했고 그는 그 시선을 고스란히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다.

활동의 공간인 아랫마을의 당사자 동료들을 면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교사-학생이긴 하지만 아랫마을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칫 연구자-참여자라는 위치로 인해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우리는 일과 노동에 대해서, 빈곤과 사회구조에 대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때로는 서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치열하게 말싸움을 하기도 하면서 동료되기의 과정에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어쩌면 연구자로서의 거리두기에 실패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연구에서 연구의 주체는 누구일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분석해서 연구결과로 만드는 것은 연구자지만 참여자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고 확장하는 참여자들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논문을 통해 연구자는 학위를 얻거나 그에 따른 보람을 얻지만 참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내내 고민되었다. 연구에 참여해 자신의 일경험과 활동의 경험을 나눠주는 것 역시 임금노동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소중한 일이다. 그나마 면담을 마친 후 가볍게 소감을 물었을 때, '일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아랫마을에서 하는 것도 일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라는 말에 안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랫마을에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강의를 마련해주어 참여자들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찾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아랫마을은 여전히 바쁘고 매일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빈곤한 존재들에게 부당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기자회견과 집회에 나가야 하고 수업에 참여해서 공부하고 동료들 돌보고 회의를 하고 아랫마을에서 식사준비와 청소를 한다. 곧 돌아올 추모제를 위해 합창연습을 하고 목요일 저녁이면 거리노숙인을 만나기 위해 공부하고 거리로 간다. 야학 수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어 쪽방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배포하고 소식이 뜬한 학생에게 연락해서 방문도 한다. 얼마 전에는 홈리스야학의 학생 중 한 명이 비자만으로 인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일이 발생했고 야학의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면회를 갔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이주민의 문제, 홈리스상태인 이주민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연구는 끝났지만 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고 따라가 볼 생각이다.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완전고용은 커녕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생산을 멈추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흐름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생산하는 노동이 아닌 진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임금노동의 시간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확보한 시간을 우리는 '돌봄', '권리생산', '예술활동' 등 우리가 하고 싶은 노동, 이 세계를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노동에 할애해야 한다. 우리의 일을 되찾고 일의 세계를 바꿔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 작은 연구가 또 다른 동료들의 마음에 가닿길, 그래서 더 많은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 특별상 수상기관 소개

현장지식이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사회 현장에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 온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마을학회 일소공도’의 활동을 조명합니다.

# 현장을 있다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한국은 경제규모, 군사력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중 하나다. 우리는 많은 세계 시민들이 K팝을 듣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열광하며,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반가워하면서도 한국 기업이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남반구 국가에서 하는 여러 사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전체가 무지하다. 프리모 레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모른 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꾸준히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한국사회에 알리기 위해 애써온 곳이 바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노동, 인권, 환경, 공익법 단체들이 만든 연대체로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감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과정에서 눈에 띄는 연구물들 중에 「캄보디아 진출 한국은행 ‘약탈적 대출’ 사업 현지 실태조사 보고서」와 라오스 댐 붕괴 이후 피해회복 현황을 조사한 「가해 없는 피해, 책임 없는 지원」이 있었다. 각각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보고서지만,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선정위원회’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응원하고, 활동의 결과물을 더 널리 알리자는 측면에서 개별보고서가 아니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단체소개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2008년 결성된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의 연대체로 한국 기업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또는 그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노동·환경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 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와 옹호수단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한국 기업과 관련된 문제의 실태를 국내에 알리고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합니다.

## 주요 활동

###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실태조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2013년부터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 노동자 유혈 과잉 진압, 선주민 권리 침해, 대규모 댐 붕괴, 천연열대림 파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과테말라 등의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태 조사한 내용은 보고서 및 영상 등으로 제작되어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었고, 이는 사업장 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 피해자 구제 지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자들이 사법적·비사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NCP 진정과 유엔 인권이사회 실무그룹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메커니즘을 주요한 비사법적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가능한 경우 소송 등 사법 절차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한국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 정책 대응 및 제도 개선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 관련된 한국의 국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제로 제안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과 법규가 일관성과 실효성을 유지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인권 존중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2023년 8월에는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환경 존중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업 인권환경실사법 발의를 이끌었습니다.

## 최근 연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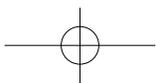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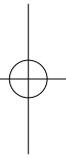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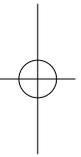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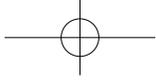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옹호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연구를 통해 옹호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연구보고서를 옹호활동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국내에 관련 정보나 언론보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현지 피해자와 공동체,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현지 인권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2025. 6.)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이 본래 빈곤 퇴치를 위해 설립된 소액금융·미소금융 기관을 인수하여 농촌 빈곤층, 여성, 선주민 등 취약계층을 과도한 부채로 몰아가는 '약탈적 대출' 사업의 실태를 보고합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한국 은행들의 대출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보고서는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었고, 같은 문제에 대한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인용되고, 캄보디아 소액금융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라오스 댐 붕괴 이후 피해회복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2024. 5.)

2018년 7월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붕괴하여 71명이 사망하고 14,44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5년이 넘도록 정부와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여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강제 이주를 당한 주민들은 경작지에 접근을 못하거나 논농사가 불가능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진상규명 경과와 그 과정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피해 지역 방문과 주민 면담을 통해 현지 실태를 보고합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7월 참사 5주기를 맞아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구제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8월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마을학회 일소공도

---

학회지 <마을>은 다음과 같은 상상에 기반해서 출발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부는 대도시의 학군 좋은 곳이나 국내외 명문 학교에서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은 공부와는 상관없는, 뼈 빠지게 일하고도 먹고살기 힘든, 재미없고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여긴다. 이 통념과 현실을 뒤집는 농촌, 근대 문명의 한계를 성찰하고 그 대안으로서 마을의 삶을 탐구하는 다채로운 공부마당이 베풀어지는 흥미로운 농촌을 상상해 본다”.

대부분 신자유주의 도시가 지구적으로 팽창하면서 농촌이 도시의 소비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도시는 농촌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태적으로도 사회심리적으로도 스스로 유지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 속 현실에 주목할 때, 2017년에 창간된 <마을>은 ‘도시가 오랫동안 의존해 온’ 농촌 한가운데에서 농촌은 물론 도시 속 마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를 담아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인으로서의 연구자의 관찰이 아닌, 직접 논밭을 일구고, 마을의 자치, 돌봄, 안전, 교육 등 소중한 공동체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활동가이자 연구자로서 함께 연구하고 주경야독으로 글을 쓰고 나눠왔다는 사실이다. <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농촌 마을에서 농민, 주민, 마을활동가, 공무원, 연구자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함께 마을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마을학회 일소공동’의 학회지다. ‘일소공동’란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회운동의 좋은 경구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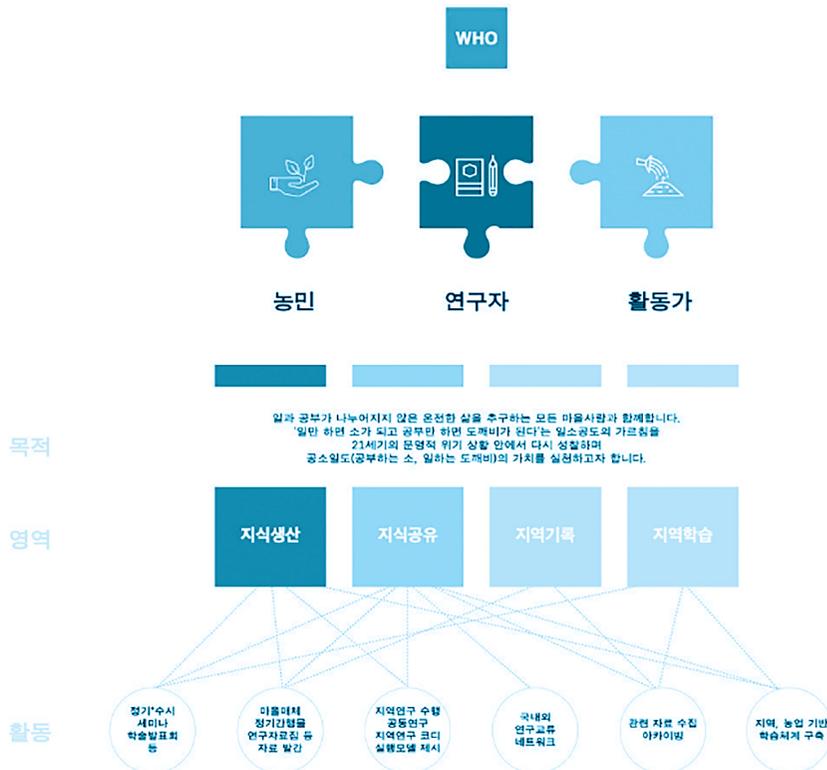
‘2025 현장지식×좋은연구 선정위원회’는 공동체 스스로의 삶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지속해 온 학회지 <마을>을 만들어 오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

# 단체소개

마을학회 일소공도는 충남 홍성군의 농촌 마을에서 농민, 주민, 마을활동가, 공무원, 연구자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농촌 지역과 마을이 주도하여 일과 공부, 삶과 얹이 하나되는 21세기 농농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2017년 6월에 창립했습니다.

마을학회 일소공도는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농촌 생활세계와 세계 문명사적 맥락에서 탐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월례세미나, 강학회, 일소공도 대회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형식의 공부 마당을 정기적으로 펼칩니다. 반년간지 『마을』과 월간 웹진 《일소공도》 등의 간행물을 통해 마을의 삶, 상호부조, 자치와 공동성에 관한 논의와 실천을 전국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일소공도’의 뜻은 우리에게 공부하지 않는 소와 일하지 않는 도깨비 사이의 오래된 나뉠을 새롭게 이어서 공부하는 소, 일하는 도깨비가 되라고 일깨웁니다.



# 주요 활동

## 학회지 『마을』 발간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만드는 『마을』은 21세기 마을의 삶, 힘 모아 서로 도우며 공동의 가치를 위해 마을 자치를 실행하는 삶을 상상합니다. 『마을』은 작은 시골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어떻게 거대한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망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어떤 구체적 노력이 필요한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층위에서 모색하는 실천과 논의들을 발신합니다.

### ※ 학회지 『마을』 발행 목록

- ▶ 창간호 '농촌에서 공부하다'(2017.12.17.)
- ▶ 제2호 '마을, 교육, 마을교육공동체'(2018.07.27.)
- ▶ 제3호 '농지, 미래의 농업을 위한 땅'(2019.02.24.)
- ▶ 제4호 '농민과 주민은 누구인가'(2019.08.30.)
- ▶ 제5호 '마을농업을 제안한다'(2020.02.20.)
- ▶ 제6호 '코로나 이후 사회와 농촌의 가능성'(2020.09.18.)
- ▶ 제7호 '21세기 농촌 마을 문화의 재구성'(2021.03.19.)
- ▶ 제8호 '마을을 살리는 먹거리 운동'(2021.10.20.)
- ▶ 제9호 '마을, 돌봄, 직접민주주의'(2022.03.19.)
- ▶ 제10호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경제'(2022.11.30.)
- ▶ 제11호 '농촌 활동가의 정체성, 역할, 학습, 양성'(2024.07.15.)
- ▶ 제12호 '농촌 읍면의 비영리 네트워크 법안'(2024.08.05.)
- ▶ 제13호 '다문화 사회, 농촌'(2025.02.05.)

## 강학회(講學會) 운영

마을학회 일소공도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강학회講學會를 엽니다. 강학講學은 조선시대 서원에서 스승과 유생이 함께 경서를 강독하고 뜻을 풀이하며 문답하는 학습방식입니다. 강학 활동 중에서도 강회講會, symposium는 유능한 스승을 모셔 특정 주제나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며칠 밤낮으로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을 하는 집단학습을 말합니다. 서원과 마을이 함께 배움의 장을 열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도와 앎을 이루어가며 그 공부를 생활세계-마을의 결속으로 연결합니다. 현재까지 15회를 진행했습니다.

## 월례세미나

마을학회 일소공도는 마을이 당면한 여러 현안을 마을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주제 학습의 자리를 매월 기획합니다. 월례세미나에서는 주제 현안별로 관련 지역단체 활동가, 행정기관 담당자, 연구자, 전국 각지의 마을 활동가 등을 발표자와 토론자로 초대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마을 주민과 전문가 들이 함께 나누고 대화하며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궁리하고 확장된 전망을 모색합니다. 현재까지 65회를 진행했습니다.

## 일소공도 주간

일소공도 주간은 농업·농촌·농민에 관한 중요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확장된 전망을 모색합니다. 2018년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새로운 바람>을 시작으로 짝수 해마다 격년으로 열립니다. 현재까지 4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월간 웹진 <일소공도>

우리의 공부와 활동에 대한 기록을 세심히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월 웹진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람들의 생각과 활동도 함께 담습니다. 현재까지 총 70호를 발행했습니다.

## 연대사업: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 읍·면에 자치권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라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 조직을 발족했습니다. 일소공도는 사무국을 맡아 농촌 자치권과 관련한 집중학습과 토론, 2026년 지방선거 대응활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